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1.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목 차

1. 국정감사 개요 ····· 1

가. 감사의 목적 ····· 1
나. 감사기간 ·····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3

가. 실 시 경 과 ····· 3
나. 감사반의 편성 ·····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6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7

가. 국토교통부 ····· 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54
다. 새만금개발청 ····· 55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 57
마. 한국도로공사 ····· 68
바. 한국철도공사 ····· 76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85
아. 한국공항공사 ····· 91
자. 한국부동산원 ····· 95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 98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 104
타. 국가철도공단 ····· 107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12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14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 115

너. 국토안전관리원 ····· 117
더. ㈜에스알 ····· 119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121
머. 주택관리공단㈜ ····· 123
버. 코레일관광개발㈜ ····· 124
서. 코레일로지스㈜ ····· 125
어. 코레일네트웍스㈜ ····· 126
저. 코레일유통㈜ ····· 127
처. 코레일테크㈜ ····· 128
커. 항공안전기술원 ····· 129
터. 새만금개발공사 ····· 130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131
허. 건설기술교육원 ····· 132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133
노. 국립항공박물관 ····· 134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135
로. 부산광역시 ····· 137
모. 전북특별자치도 ····· 141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44

가. 국토교통부 ····· 144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90
다. 새만금개발청 ····· 191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 192
마. 한국도로공사 ····· 203
바. 한국철도공사 ····· 211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219
아. 한국공항공사 ····· 224
자. 한국부동산원 ····· 227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 229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 235
타. 국가철도공단 ····· 238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242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43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 244
너. 국토안전관리원 ····· 245
더. ㈜에스알 ····· 246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248
머. 주택관리공단㈜ ····· 249
버. 코레일관광개발㈜ ····· 250
서. 코레일로지스㈜ ····· 251
어. 코레일네트웍스㈜ ····· 252
저. 코레일유통㈜ ····· 253
처. 코레일테크㈜ ····· 254
커. 항공안전기술원 ····· 255
터. 새만금개발공사 ····· 256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257
허. 건설기술교육원 ····· 258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259
노. 국립항공박물관 ····· 260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261
로. 부산광역시 ····· 262
모. 전북특별자치도 ····· 265

5. 증인 및 참고인 ····· 267
가. 기관증인 ····· 267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293

※ 참고자료 ····· 305

1. 국정감사 개요

가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나 감 사 기 간

○ 기　　간 : 10월 7일(월) ~ 10월 25일(금)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10월 7일(월), 10월 10일(목), 10월 11일(금), 10월 16일(수), 10월 21일(월), 10월 22일(화), 10월 24일(목)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10월 14일(월) (1일)

○ 현장시찰(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현장방문)

10월 17일(목) (1일)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부동산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국가철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안전관리원 o ㈜에스알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주택관리공단(주)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새만금개발공사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o 건설기술교육원 o 공간정보품질관리원 o 국립항공박물관 o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31)
지방자치 단체	o 부산광역시 o 전북특별자치도
	(2)
계	33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가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

○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및 추가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0. 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0. 1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0. 16.)

○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0. 22.)

○ 국정감사 실시

: 10월 7일(월) ~ 10월 25일(금)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 1.14.)

나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14.(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 그 외 국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 / 민홍철 〃 / 박용갑 〃 / 복기왕 〃 / 손명수 〃 / 송기헌 〃 / 안태준 〃 / 염태영 〃 / 윤종군 〃 / 이소영 〃 / 이연희 〃 / 이춘석 〃 / 전용기 〃 / 정준호 〃 / 한준호 〃	감사위원 : 권영진(국민의힘) / 권영세 〃 / 김도읍 〃 / 김은혜 〃 / 김정재 〃 / 김희정 〃 / 서범수 〃 / 엄태영 〃 / 윤영석 〃 / 윤재옥 〃 / 정점식 〃 / 윤종오(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사무보조자	① 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입법심의관 문성환 행정실장 이경우 입법조사관 이재명 권용훈 〃 김우주 이주홍 〃 서정욱 최은제 〃 정혜윤 오현승 〃 류지호 이해언 〃 김해성 행정관 이성훈 주무관 최윤희 박은영 김란미 정현주 김정화	② 보좌관(30인) ③ 정책연구위원(3인) ④ 속기사(5인)

<지방감사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 1반 (부산 광역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7인) 김기표 민홍철 송기헌 염태영 이소영 이연희 한준호 (국민의힘, 6인) 김도읍 김희정 서범수 윤영석 윤재옥 정점식 (진보당, 1인)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 박재유 입법심의관 : 문성환 행 정 실 장 : 이경우 입법조사관 : 이재명 오현승 이해언 행 정 관 : 이성훈 속기주무관 : 정다운 지인영 김성진
감사 2반 (전북특별 자치도)	권영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9인) 문진석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안태준 윤종군 이춘석 전용기 정준호 (국민의힘, 4인) 권영세 김은혜 김정재 엄태영 (조국혁신당, 1인) 황운하	전 문 위 원 : 곽현준 입법조사관 : 권용훈 이주홍 최은제 류지호 김해성 속기주무관 : 이소영 권성민 이지희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7.(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 (※ 산하기관장 출석)	
10. 8.(화)	자 료 조 사		
10. 9.(수)	한 글 날		
10. 10.(목)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 11.(금)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대전)	
토・일	공 휴 일		
10.14.(월) 10:00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전주)	
10. 15.(화)	자 료 조 사		
10. 16.(수)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17.(목) 10:00	< 현장시찰 >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화성	
10. 18(금)	자 료 조 사		
토・일	공 휴 일		
10.21(월)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22.(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10. 23.(수)	자 료 조 사		
10.24.(목)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출석)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가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4. 10. 7.(월) 10:11 ~ 23:4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정부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상우 등 4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4. 10. 24.(목) 10:06 ~ 2024. 10. 25.(금) 00: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상우 등 4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

○ 국토교통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한 점검 및 유관기관과 함께 방지대책 마련 필요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주택 구입에 활용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 등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택자금대출 규정 준수 여부 및 소속 임원의 자회사 재취업 기준 점검 필요

【 국토도시실 】

○ 지역소멸 극복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후 국가산단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국정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 필요

○ 새만금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 공모 추진 필요

○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므로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앵커시설 신설 필요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지방국립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또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과 수도권 분리 지원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 결과가 선도사업 또는 주요 사업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비수도권 노후주택·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뉴빌리지 관련 국비지원, 기금융자, 용적률 등 인센티브 대폭 제공 필요

○ 용산공원 반환예정부지 임시개방 활용계획 수립용역 완료 전 임시개방부지 관리운영방안 수립용역·관리운영 대행용역 추진 문제 및 해당 용역들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적법성 여부 확인 필요

○ 용산공원 준공검사 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추진 관련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절차 준수 필요

○ 석면 등 위험물질 제거 완료 전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보류 및 제거 확인 이후 재개방 필요

○ 용산어린이정원 토양오염 관련 정화 및 샘플조사 추진 검토 필요

○ ‘22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당시 집들이행사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 필요

○ 용산공원 부지 내 해병대 역사관 철거에 따른 舊해병대사령부 본관의 해병대 역사관 활용 검토 필요

○ 의왕백운 PFV 민간 주주사의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통한 건설공사 이익취득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 필요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관심 및 지원 필요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 필요

○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선정 관련 부산광역시, 김해시 신청 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

○ 개발제한구역 內 설치 가능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경서3구역 연희자연공원 내 도로 설치 승인

검토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중 승마장 부대시설(실내마장, 마사 등)의 면적 제한 완화 검토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유소부지 허용용도 제한 완화 필요

○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추진 필요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대상 선정 필요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근거 마련 필요

○ 공동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

○ 국가표준시방서에 의무화된 '방수·방근공사'를 조경설계기준에 반영 필요

○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 선정에 집중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확대 및 아파트 옥상 등 태양광 설치 절차 요건에 대해 검토 필요

○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침 마련 필요

○ 일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공사 중단 사유가 아닌 장기방치 건물을 재건축·보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획 마련 필요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지정이 실제 정비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방치건축물을 매입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필요

○ 장기적인 건축사업 불황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 분야 건축 설계·감리대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 검토 필요

○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 포함에 대한 입장 및 2024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 마련 필요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요건이 과도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부담·동의요율 등 추가 보완 및 생활숙박시설 PF(Project Financing) 관련 대책 검토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에 사용되는 ECO2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거나, 소스코드 공개가 어렵다면 제3기관의 검증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관련 ECO2 프로그램에 미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실내루버형 집광채광설비 등)가 ECO2로 평가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론 마련 검토 필요

○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규모 확대 및 모니터링의 부적합률 감소를 위해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 필요

○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 처벌 검토 필요

○ 샌드위치패널 공장 화재사고 관련, 건축물 지붕 등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검토 필요

○ 샌드위치 패널 관련, 복합자재 표준모델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다중이용 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건축공사 공정(자재 반입, 시공과정 등)에 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기록 관리를 공장·창고시설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 또는 단열 등 특정 부분을 패시브하우스로 시공하는 등 패시브하우스 활성화 검토 필요

○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주차장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단열재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숙박업소 화재사고 관련 노후 숙박시설을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 창호 하자 보완을 위해 사춤 시공방법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문시방서를 통일하는 등 개선 필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등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내 단열재 장기성능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반영 필요

○ 다수의 대안교육기관이 건축물 용도 문제로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지하정보 활용·제공을 위해 구성한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개최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읍·면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지하시설물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지하시설물 협력적 정보 공유·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필요

○ 적산토지 조사·환수 및 지적 주권 회복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전문기관에 의한 적산토지 실태 추가 조사 실시 필요

【 주택토지실 】

○ 아파트 입주 사전방문 주체 명확화 및 전문업체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충분한 사전방문 기간을 확보하는 등 사전방문 제도 개선 필요

○ 신축아파트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을 강화하고, 점검시기를 확대하는 등 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필요

○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부실시공·부실점검 등 정황이 있으므로 '무량판 구조 긴급안전점검 보고서' 재검토 필요

○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 기준 미달 시 활용되는 보완시공 가이드라인의 대표성 확보 및 대량시공 가능 여부 등 추가 검토 필요

○ 일반 청약과 다르게 청약통장 및 자격 요건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필요

○ 가계부채 문제 관리와 아울러 저출산 해결의 키를 가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대책 필요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는데, 최저가 낙찰 등으로 안전·품질보장이 어려우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충전시설 지상화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의무관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 명확화 필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 필요

○ 공동주택의 경비원·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필요

○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의 투자 및 위험 관리 기능 분리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대체투자로 인한 1,800억원 손실, 대위변제 등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실적이 저조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지원 실적과 집행률 감소 및 실적 부진 사유 검토 필요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 개선 필요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 4. 17. 시행)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이전 보증가입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유지 필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인정액 상향(10→25만원) 관련 청년 및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소득층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인 주거안정 정책 마련 필요

○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 검토 필요

○ 관리비 항목을 주거급여에 포함, 청년 분리지급 대상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급여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주거급여법의 신속한 개정 필요

○ 주거급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원 추가채용 필요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현실화 필요

○ 주거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해 주거비 측정지표(RIR) 등을 활용하여

사회계층별, 지역별 주거비 부담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 필요

○ 청년 월세 지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소득 요건 등 제도 개선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정상거처' 등 용어 순화 필요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공급계획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 재수립 필요

○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므로 근본적인 재정비 계획 수립 필요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LH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2~3년 내 전 세대 시설개선 필요

○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비율이 56.6%에 불과하여 냉방지원 사각지대 개선 필요

○ 노후임대주택 냉방설비로 에어컨 외 다양한 방법(전열교환기, 환기시스템 등) 모색 필요

○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정부안에 미반영된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 필요

○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당초 추정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주택 건설 사업 취소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청약 경쟁력이 떨어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 필요

○ 주택 건설 사업 취소 이후 다시 사업이 재개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승계해주는 방안 검토 필요

○ 청약통장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당초 추정 분양가에 맞춰서 분양가를 공급하는 방안 등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에 격차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을 발생시키므로 보완 필요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 달성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업무 확대에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 투입 필요

○ LH 신축매입임대 감정평가액 산정 관련 감정평가 별 최대치-최소치 차이를 1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노후공공청사 활용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대책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 필요

○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등 불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

○ 공공임대주택 강력범죄 사전 예방 및 퇴거 조치 등 공공임대주택 내 강력범죄자 문제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보통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지원 확대 필요

○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당초 약속한 분양전환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분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행정지도, 입법 등 대책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적으로 보증이 발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증발급 업무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조사 필요

○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부당이득취득, 과도한 원상회복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필요

○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되어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등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취소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예산이 수요 대비 부족하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리츠 운용사·투자출자자 및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의 집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기금운용계획을 큰 규모로 자체 변경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바닥공사 관련 하자기준 미비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실효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구입자금 보증 제한, 후취담보 제한, 방 공제 적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에도 국고보조금이 아닌 출자 형태의 자금 지원 필요

○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직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거래 및 실거래 정보 등 관리 필요

○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 검토 필요

○ LH의 동파방지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시방서 개정 시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해 LH의 자체 감사 추진 및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 필요

○ 전세사기 예방 목적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24. 7. 10. 개정·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보완 대책 마련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LH의 경쟁력을 높여 LH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LH 혁신안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LH 택지분양 실적 감소 원인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매각 토지의 원활한 건축 진행 및 대금납입·계약해지 등과 관련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관련 선례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계획 마련 필요

○ 부동산 공시가격과 조세 형평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격공시제도 개편 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합의 기반 마련 필요

○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행위의 위법성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방안 및 공시가격 실명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되므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 증액, 시장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스타트업 보호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업체 선정의 적절성, 정상적인 작업 진행 여부, 긴급 입찰 경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감사 실시 여부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간 이른바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 공유체계 마련 필요

○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LH의 인력 충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하자 안전관리 업무 적극적 홍보·협의 필요

○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의 선임 경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 등 절차상 하자 확인 및 조치 필요

○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주택 공급 통계 오류에 따른 시장의 과열 및 혼란 등의 책임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 필요

○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허위매물 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과 조치 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주택가격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므로 주택가격 관리 철저 필요

○ 주택가격이 서울·수도권에서 상승하고 지방은 침체·하향하고 있으며, 서울 안에서도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세대의 고액대출 부담이 증가하여 내수 진작이 어렵고 부정청약 10건 중 6건이 청년세대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핀셋 대책 필요

○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속도감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사업속도를 제고할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른 지원방안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적극 모니터링하여 6개월 후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국회보고에서 확인되는 미비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필요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FAQ 페이지에 등록 항목이 없으므로 개선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LH의 전세사기 지원 인력을 충분히 충원 필요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하자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며,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 및 공공위탁관리의 근거가 신설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현황 파악 및 정확한 관리

필요

○ 주택 인허가 · 착공 실적 저조, 3기 신도시 추진 및 공공주택 공급의 지체 속에 디딤돌대출 등 각종 대출의 대폭 증가로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바, 주택공급계획 중 공공주택 부분을 법정화하는 등 정부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일관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비수도권 지역 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달리 경제성이 부족한 도시가 많으므로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자체적인 도심 재개발 ·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 필요

○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재건축 · 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 주도의 택지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그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계획·실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1인 가구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초소형 주택의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하여 초소형 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은 준공 및 매입 기한에 관계 없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영구적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필요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지정 취소 및 일반분양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투명하고 신속한 조합 의사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전자총회 활성화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총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총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공문 전달 필요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실제 부동산 거래가와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 보장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실성 있고 공정한 산정기준 마련 필요

○ '집주인임대주택' 사업과 같이 시장 흐름을 역행하거나 '층간소음 성능 보강' 사업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해당 예산으로 임대주택 건설 또는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방향 검토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제기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여러 차례 유찰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악성 낙찰자가 저가 낙찰 후 임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및 악성 낙찰자 관련 문제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안전상 위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순위로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제공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 등에게 납부한 금액은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 제외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 없이 발생한 비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경매차액 계산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귀책 없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하며, 감정인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원인, 경과 및 법리적 쟁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미비점의 촘촘한 보완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규정을 위반해 신규보증 발급이 불가능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에게 추가보증보험을 발급함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관계인들 간 유착 여부 감사 필요

【 건설정책국 】

○ 우크라이나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등) 추진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감사원 감사 의뢰 방안 마련 필요

○ 대통령실 관저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정한 조치 내용 확인 필요

○ 건설근로자 임금착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자지급시스템 이용 민간공사 확대 필요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현장개선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평택 물류센터 공기 연장과 관련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비 대위변제 문제 등 분쟁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 관련 공사비,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필요

○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시멘트, 콘크리트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국가기간산업(시멘트, 콘트리트 산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독점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적정임금제 등 근로자 임금 보호 방안 마련 적극 검토 필요

○ 교량 세굴 조사 의무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교량 세굴 조사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생방안 마련 필요

○ BIM 정책의 목표 달성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BIM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건설공사 수주 보호구간 설정 후 현황 추이를 파악하여 수주 보호구간 설정 재연장 여부 등 수주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 검토 필요

○ 공공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한 공정 수주 질서 확립 방안 마련 필요

○ 아파트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품질 강화 및 골재 이력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콘크리트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조속한 개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의 갱신 및 신규 절차 진행 시 권역별, 기관별 성과 고려 필요

○ 건설현장 지능형 CCTV 기술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및 현장 적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건설공사 설계안전성 검토 결과 적기 제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건설 미수금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방안 마련 필요

○ 해외건설 수주 목표 달성률 철저한 점검 및 이행 방안 마련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폴란드 컨퍼런스 참석 사절단에 포함됨으로써 주가가 급등하게 된 삼부토건의 폴란드 컨퍼런스 참석 사절단 포함 이유 및 배경 철저한 조사 필요

【 교통물류실 】

○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고, 클렌징 조항을 전면 폐지하도록 조치한 후 택배사업자 등록 필요

○ 택배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검토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배달 이륜차 유상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배달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준 마련 필요

○ 안전운임제의 안전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한 점, 대형 운수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전운임제 입법을 요구하는 노조 등에 대한 설득 및 법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동북아 물류 플랫폼(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계획 및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사업의 특성에 맞게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추진 필요

○ 국제물류특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과로사 문제, 분류 문제, 심야배송 문제 포함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표준운임제 시행 시 운수사-운수사 간 중간착취 근절 방안, 안전운임제 대비 효과, 표준운임제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결과와 정부의 주장이 상충하는 결과가 나온 이유, 유가등락에 따른 화물노동자 순수입 증가를 안전운임제의 근로여건 개선 효과로 인정하지 않고 안전운임제 일몰의 성과로 보는 이유, 표준운임제 대상 품목 선정의 취지와 근거, 화물노동자 부족 문제, 고령화문제, 노령차량 이탈 실현 방안 설명 필요 및 과로 · 과속 · 과적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안전운임제 재도입 필요

○ 제3자물류 육성 계획 수립, 세액공제 신설 등 검토 필요

○ 화물자동차 DTG(Digital Tacho Graph,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자료 의무 제출 시행 관련 운행실태 · 휴식실태 등에 대한 분석,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 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 마련, 처벌 시기 유예, 계도기간 부여 등 점진적 · 단계별 시행, 기계 · 설치비 · 통신비 · 수리비 등 지원, DTG자료 자동제출 방식 도입, 과학적 분석과 현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1일 또는 주당 운전 총량제한방식 개정 및 화물차 휴게시간 관련 연구용역에 현장 의견과 이해당사자 견해 반영 필요

○ 물류 교통 · 환경 정비지구 지정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

○ 배달종사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라이더, 국토교통부, 플랫폼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신규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방안, 플랫폼사의 배달교육 홍보 협조방안, 기존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방안, 강사 인력 확충 방안 및 교육 장소 확대 방안 등 마련 필요

○ 배달라이더 무보험, 무면허 증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및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 택배기사의 사고 및 재해 현황에 대해 택배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쿠팡 현장조사 부실 관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 관리 · 감독 체계 마련 필요

○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과도한 영세화물차 주선 수수료 조정 필요

○ 택배파업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준수 범위 내 대체배송 실시 필요

○ 물류취약지역 불편 최소화를 위한 위탁배송 허용 등 조속한 규제 개선 필요

○ 적재불량 관련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태료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사모펀드의 버스 준공영제 진입 후 차고지 매각, 과도한 배당 등 부작용 예방과 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 및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면적인 개편 필요

○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등 다른 여객용 버스와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국민의 이동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고속버스 업계 재정 지원, 통행료 한시적 면제 재도입 등 지원 필요

○ 고속버스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고속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필요

○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필요

○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지정, 임의 개조 미검정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조사 및 조치 필요

○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이 서울시 STIS와 비교 시 택시 영업수익에 누락이 있는 등 정확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택시승차대에서 택시가 주정차 단속되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도입률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확대 필요

○ 인구와 건물이 과밀화된 원도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장 방안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 필요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난이 우려되는바, 기존처럼 자체사업 추진방안 검토 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상 단위부담금 재검토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 등 전면적인 개편 필요

○ 전기차 화재 대책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화재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 버스기사가 정원 대비 약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명확화, 진입장벽 완화, 교육인프라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버스기사 양성대책 마련 필요

【 항공정책실 】

○ 공항 분야 전문성, 감사원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통보 등을 고려하여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 관련 사장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전직 차관이 사장으로서 부적합 인사임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임명 반대 필요

○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사례, 사장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전직 차관 경력 등 고려 시 국토교통부의 전직 차관 출신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부적격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

○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 상임이사가 공석이고 일부 상임이사직이 무보직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불완전 상태 운영 방치에 대한 지적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양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그 법정이자 및 법인세에 대한 검토 및 조속한 상환 필요

○ 해양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의뢰 등 구체적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조종사들의 운항 전 음주 적발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의 길이 및 주차장 면수 증대 필요

○ 미탑승 여객공항사용료를 자동적으로 환불하도록 개선 검토 필요

○ 티웨이 등 항공사의 지연에 대하여 제재조치 포함 대책 마련 및 지연 보상에 대한 파악 필요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우세풍 방향을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현대컨소시엄의 수의계약 회신 기한 연장 관련 확인 및 적극적 대응 필요

○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 방향 검토와 관련하여 개항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방식, 지방채 면제 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 협의 시 국토교통부 참여 여부에 대한 질의

○ 지난 추석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로 인해 혼잡도가 증가한바, 추후 공항 주차장 현장점검 필요 및 공항 주차장 이용 관련 정책은 해당 공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각 공항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장려 활동, 주차공간 확보 필요

○ 비행절차 변경을 포함하여 청라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방안 도출 필요

○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이 국제선 총수요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 지역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결정에 앞서 우리나라 전체 국제항공 수요에 대한 검토 선행을 통한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결정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목표치 설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 간 국토교통부의 중간 역할 수행 필요

○ 오물풍선, 드론 등 비행체 대응 매뉴얼 및 대책 마련 관련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을 통해 증가된 슬롯을 화물수송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김포공항 관제탑 신설 검토 필요

○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소음대책 재원분담 개선 필요

○ 무수익 국제업무지역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인천공항, 김포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조치 필요

○ 4단계 사업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적정 인력수급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 산하기관의 광고구조물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하기관의 광고구조물 설치에 관한 계약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의 북한 상공 비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적극적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타 지방공항의 청주공항 흑자 전환 벤치마킹 필요 및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에 대한 활주로 등 시설 확충, 노후시설 교체 필요

○ 지속가능항공유 중장기 혼합의무 로드맵 수립 시 혼합 의무화 목표치 상향, 단계적 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인정 기준 반영 필요

○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 보급 · 사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사용 촉진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소멸 등 부당한 피해 발생 방지 필요

○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및 7차 공항개발계획에의 반영 필요

○ 외항사와 승객 간 분쟁 방지 및 외항사의 피해구제 노력 확대를 위한 관리 필요

○ 출국 · 환승 절차 시 마약류 단속 절차 마련 필요

○ 항공정비 지연, 국내 처리 비중 저조 등 고려 시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항공정비) 관련 종합대책 수립 등 MRO 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필요

○ 제주항공 등 정비지연이 많은 항공사에 대해 정비인력 및 여력기 확보 상황 등 현장 점검 강화 및 대책 마련 필요

○ 지연 · 결항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항공사들이 통계 코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바탐 항나딤 공항 건설사업 참여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한도 상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 협의 필요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에 따른 적정 인력 운용에 실패하고 자회사 노조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빚은 인천국제공항 상생협력처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필요

○ 가덕도신공항의 공사현장의 안전과 개항 이후의 안전을 위해 부등침하 우려, 활주로 방향 결정 관련 풍향 기상자료 오류 등 관련 제3자 검증 등 철저한 재검토의 조속한 진행, 신기술·신공법 개발 전폭 지원, 공동도급사 확대 등 개항 지연 우려 해소 노력 필요

○ 해외 해상 공항 공사기간 고려 시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보이는바, 공사 일정 대안 마련 필요

○ 자회사 본부장 임명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사개입 관련 감사 진행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노선 확대 등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지방공항과의 협력 방안 보고 필요

○ 드론 특별비행승인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한 검사 인력 증원 등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적극적·선제적 역할 수행, 국민과 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채 영부인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기준을 적용받음에 따라 여러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채 영부인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실제로 누가 탔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영부인이 제주도에 간 사유에 대한 질의

○ 전 영부인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 휘장이 부착된 공군 2호기를 탑승한 건에 대한 질의 및 역대 영부인들에게 분리 비행이 이루어졌던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 및 데이터를 확보하여 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유명인 별도 출입문 이용 발표와 관련한 소홀한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지방공항 건설사업은 더딘바, 인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차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김해공항 CIQ(Custom(세관),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력 확보 및 주차장 확보 필요

○ 주민 간 갈등 고려 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및 수요예측 재시행, 제주도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와 대안 전면적 재검토 필요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등 보강 필요

○ 2025년 항공전문인력사업이 종료된바, 지속적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항공전문인력 지속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등 검토 필요

○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대한 적극적 협의 필요

○ 김해공항 등 보안 실패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침 등 구체적 규정 마련의 조속한 추진, 지정된 지역에 대한 혜택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을 통한 가덕도신공항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필요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무실태 파악 필요 및 승무원 휴게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을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경쟁 촉진 내용 포함, 항공기 지연 사유에 대하여 항공사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마일리지 사용 · 적립 · 세부현황 공개 및 관련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

○ 항공사의 고의 지연 행태에 대한 조사 및 피해고객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 조치 필요

○ 인천국제공항이 마약이 진입되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마약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수사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공항 입국장 인도장 확대에 대한 중재 필요

○ 항공사 지연 피해 보상이 미흡하므로 보상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

○ 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필요

○ 경남 주요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 도로 및 철도망 확충 필요

○ 우세풍과 김해공항이 사용하는 항공로를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방향 검토 및 고도분리 적용에 따른 안전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기본계획 재검증 필요

○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정서진로 연결로 신설 검토 필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모빌리티자동차국 】

○ 자율주행기술 실증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 임기 제한, 특정 중재위원의 중복 선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전북 완주 수소상용차 안전검사센터 구축 필요

○ 전기차 수입시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정보 제공 의무화 도입 필요

○ 전기차 BMS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도 제공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한국형 통학버스 개발사업' 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 필요

○ 자동차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수소 누출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시행시 제도개선 필요

○ 수소차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페달오조작방지 평가기술 개발 및 국내 기준 도입을 위한 노력 필요

○ 자동차 민간검사소의 부정·부실 검사에 대한 제재처분 등 처벌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서 전기차 안전 관련 배점 확대 및 하부충격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자동차의 교환·환불제도에서 소비자와 제조사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수입전기차의 충돌 후 차량 문 개폐에 대한 규정을 국내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교통사고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대출 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방안 강구 필요

○ BMS 기술수준 표준화 및 BMS 정보의 차주, 제조사, 소방당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마련 필요

○ '무균·멸균 약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상 전시면적 확대로 인한 일부 사업장의 고충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운영을 국가에서 담당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기차 포비아 현상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전기차 화재위험 등 문제 차종의 조치 및 제도개선 필요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개조 단속 확대를 위해 안전단속원 확충 필요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충전 잔류확인 키트 보급 필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심의 시 전문심사기관 참여 필요

○ 전기차 배터리 정밀검사 의무화에 따라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진단기(KADIS) 보급 확대 방안 필요

○ 자동차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수입차제조사의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책임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중국산 기술(커넥티드카)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나 기술적 검토 필요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제대로된 상용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 필요

○ 중고차·부동산 직거래시 허위·위장거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과 설치 방안 검토 필요

○ 전기자동차 초기 모델의 BMS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BMS를 활용한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정비업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정비사업 등록 취소 방안 검토 필요

○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확대수리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관리사업자(정비업자)의 의무에 ‘경미손상 수리기준’ 준수 내용 추가 방안 검토

○ 경상환자가 인체상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고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이후 진료 미인정 또는 지급보증 중단 등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 검토 필요

○ 레벨4 자율주행을 위해 차세대 C-ITS 통신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위법행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역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및 미이행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방안 검토 필요

○ 전기차 화재지연 기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계획 검토 필요

○ 법인차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등 편법사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면허 운전,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록제, 운전면허 확인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PM(개인형 이동수단)법안에 대한 조속한 제정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배터리 실명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도입할 필요

○ 육상운송 공제조합 등에 대한 감사 및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

○ 정밀도로지도의 조속한 구축·갱신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및 민·관 협업 방안 검토 필요

【 도로국 】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토지보상금) 의혹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확인 및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2023년도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한 대로 제삼자 전문가 검증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공사 재개 필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에 추가하고 조안나들목-화도분기점 연결이 B/C 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동서 9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당초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 문제가 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변경안을 폐기할 필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하루 현장 방문 후 갑작스럽게 종점이 변경된 점, 필지분할·형질변경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점 변경에 특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질의

○ 도로, 철도 등 건설시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유지 여부 검토 필요

○ 고속도로 밀도 측면에서 수도권이 지방에 2배 수준이며 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실행 모든 측면에서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계획에 소외된 부분을 반영 필요

○ 고가도로 밑 공간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필요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

○ 경찰청과의 노면상태 분류기준 일원화 이후에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게 도로 상황이 기록되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율 필요

○ IC 설치 비용 부담 관련하여 「도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및 기획재정부 훈령 개정 검토 필요

○ 터널 내화지침 제정 이후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도심 관통 터널, 장주터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동백IC 설치 조속 추진 필요

○ 과적 적발차량에 대한 분리운송 시설 확충 등 과적 문제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과적차량 적발 관련 추적관리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화주, 운송사, 운전자의 관계를 고려하려 과적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 모색 필요

○ 도성회 및 H&DE의 휴게시설 운영·배당과 관련하여 전관 문제가 심각하므로 향후 운영권 계약 연장 종합평가 시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손실 발생 원인 분석 및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 센터장 채용 시에는 2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서 상위 직위인 경영본부장은 40세의 경력에 논란이 있는 대상자가 채용된 점을 볼 때 임용 조건이 차이가 크고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재무건전성 악화 및 불량도로를 해결하기 위한 PSO 보전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유사하게 안전책임경영 보고서 내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 관련 통계가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 필요

○ 신탄진 하이패스IC로의 신탄진IC 화물차 통행량 분산 방안 강구 필요

○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 부적절한 위치, 수도권본부의 이중화, 특혜성 매입 의혹 등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의혹과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국토교통부의 감사 필요

○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간 단순 구두 보고로 중요 업무가 추진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 체계 정비 필요

○ 호남고속도로 광주 통과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히 추진 필요

○ 대구경북신공항 지원 고속도로 사업(구미-군위 신설, 동명동호-군위 확장 등) 조속 추진 필요

○ 오송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 화재사고 중심 방재지침에 침수사고 대응 조항이 추가되도록 방재지침 개정 추진 필요

○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을 감안할 때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는 질의

○ 한국도로공사의 중국산 강섬유 미승인 자재 사용 관련 조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및 문제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를 취소한 것에 대한 확인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감사가 필요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 필요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 간 주요 SOC 사업(도로, 철도 등)과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 총 9,263억 중 전라북도는 1%만을 배정받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완 필요

○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에 대해 신속한 노선 검토 및 사업이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포항-대구·경북신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망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안성) 사업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

○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동~안성시 공도읍 4차로 신설사업과 국지도 23호선 안성시 양성면~대덕면 4차로 확장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

○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반곡(혁신도시) 4차로 도로 신설 필요

○ 도로파임(포트홀) 사고 피해 관련 일반국도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

○ 고속도로 도로파임(포트홀) 관련, AI기반 포트홀 감지 시스템 작동 오류를 시급히 개선하는 등 관리 강화 및 신속한 보수 대책 필요

○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 및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 필요

○ 김해시 한림면의 원활한 이동성 확보를 위해 한림IC 진영 방향 추가 연결로 설치 필요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가 동김해 JCT 양방향 연결을 반영하여 2025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 필요

○ 도로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조사·설계 권한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검토 필요

○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및 추진 필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39호선 장수교차로 좌회전 허가 관련 민원 처리 경위 및 불허 사유 등 설명 필요

○ 조명식 도로안내표지와 같이 반사기능 포함된 안내표지의 법제화 검토

필요

○ 빗길, 결빙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구간에 대한 배수성·저소음포장 적극 확대 필요

○ 고속도로 특정구간 상습정체 해소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운행제한단속원 단속업무 수행시 신분보장, 운행제한단속원 일원화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 국도와 지방도 졸음(휴게)쉼터 설치 방안 마련 필요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관련 건덕정(국궁 활터)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빙판길 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기술도입 및 대책 마련 필요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한산대첩교 건설 반영 필요

○ 비탈면 IoT 시스템 등 재해재난 대응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도로법 시행령」【별표 3】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비고 2.’를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별표 1】의 ‘비고 1.’을 참고하여 개정 필요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계획을 재검토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및 사업비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사전등록 및 납부 방식을 간편화 하는 등 스마트톨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필요

○ 운행제한단속원 이동식 근무조 근태 및 복무관리에 대한 카드·지문인식 등과 같은 디지털 출퇴근 방식으로 개선 필요

○ 고속버스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 등 필요

○ 김해에서 창원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도로굴착허가 시 지하매설물 인식표지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 필요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사업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장비 구비 등 화재 대책 강구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오재웅 본부장의 채용과정 및 경영실적 저조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원 감사 필요

【 철도국 】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등 국가 인프라의 지방투자 확대 필요

○ 우리 철도가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 해외 진출 도모 필요

○ 도로, 철도 등 건설시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유지 여부 검토 필요

○ 신분당선 관련 연계철도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보전, 무임승차 관련 협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보전으로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열차권 노쇼(No-show)문제, 부정승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명절 기간 위약금 증액, 부과운임 상향, 적발된 역 하차,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 필요

○ 기차표 불법예매 차단방안 검토 필요

○ GTX-A 노선 연계교통 차원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솔빛나루역 신설 적극 검토 필요

○ GTX-C 연장사업 국비 투입 필요성 검토 필요

○ 철도지하화 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필요

○ 철도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건축 제한 완화 등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방안 및 사업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로부터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필요

○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가 두드러지고 생활권 단절로 주민 불편이 심각한데, 사업의 수익성, 시급성 외에 복합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인선의 사업성 입증을 위한 적극적 컨설팅 필요

○ 철도지하화 사업 선도사업 대상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 구간(검단오류역, 왕길역) 적극 반영 필요

○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용산의 경부선, 경의선이 지하화될 경우 국책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지에 경의중앙선 왕십리역 구간 포함을 적극 검토 필요

○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SR의 적자문제가 지속되는 등 경쟁체제의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적극 검토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저임금 문제, 코레일 자회사 직원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제천역 종점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향후 태백선과 동해선 고속화 사업과 연계할 필요

○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철도 요금 인상, 적자노선 구조조정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동대구역 광장에 관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공문, 고시를 살펴볼 때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주체는 대구시이며, 준공 후 소유권도 대구시가 갖게 되므로 준공 절차와 이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동대구역 광장 준공검사 이후 소유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견 정리 및 역 광장 명칭 변경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를 준공검사 전에 마무리할 필요

○ 오송역 누수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시설 관리 개선대책을 시급하게 마련 필요

○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발전협력회의와 같은 상설협의체를 통해 갈등의 사전 조정 필요

○ 현 온산선의 스마트 철도건널목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온산선 폐지 및 대체노선 건설 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

○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코레일과 코레일 계열사 간 급여 차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 필요

○ 제2경인선 사업 조속 추진 필요

○ GTX-B 착공기념식 개최 이후 민자구간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착공과 2030년 개통을 위해 차질없는 사업추진 필요

○ GTX-D·E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장항선·서해선 개통 후, ITX-마음 운행 증편 검토 필요

○ 평택~천안아산~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조기 완공 필요

○ 트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철도안전법상 트랜짓몰 등 트램 일부

구간에 대해 보행자 통행을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부분 및 노면전차에 한해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완화하는 것에 검토 필요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개통 추진 필요

○ 평창 휘닉스파크 곤돌라 운행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원인 및 보고 의무 등 위법성 여부 파악 및 유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 필요

○ KTX-1 대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방안 적극 검토 필요

○ 2023년 코레일의 코레일테크 감사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예산운용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및 감사계획 마련 필요

○ 특별동차의 정의 등 기본적 사항은 공개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대통령전용기와 동일하게 특별동차 관련 별도의 훈령 제정 검토 필요

○ 한국철도공사 디젤기관차 소요량 대비 보유량이 부족하며 전시 등 비상대응 수요가 있으므로 신규 디젤기관차 도입 지원 필요

○ 수서발 KTX-서울발 SRT 교차운행 추진 방안 조속히 검토 필요

○ GTX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예측 실패, 개통지연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당 문제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질의

○ 「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방안처럼 로컬 관제를 중앙집중화하기보다 중앙관제와 로컬관제, 관제와 열차·유지보수 등 분야별 대응체계 마련 및 관제사 역할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

○ 벽지노선에 대한 충분한 PSO 보상 지원 검토 필요

○ 안전인력 확보 및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한

조속한 승인 필요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방안 검토 필요

○ 오송연결선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필요

○ 최근 5년 간 주요 SOC 사업(도로, 철도 등)과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 총 9,263억 중 전라북도는 1%만을 배정받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완 필요

○ 당초 발표한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GTX-B 상동변전소 백지화 및 변전소 이전 설치 검토 필요

○ 남부내륙철도 개통으로 SRT의 선로용량이 포화상태가 되므로 오리역을 포함한 SRT노선의 복복선화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도록 검토 필요

○ 포항역에 조성되는 신설 주차장과 포항역 연결을 위해 설치하는 선상 연결통로에 국비 지원방안 검토 필요

○ 포항-대구·경북신공항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고속철도 중앙선이 태화강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 GTX-C 덕정-수원 간 직통 열차 운행계획 수립을 검토 필요

○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동탄역이 설계가 잘못되어 GTX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서울(잠실)-청주공항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동탄-청주공항 노선 준수 필요

○ 예타중인 평택~부발선의 B/C값이 당장 나오기 어렵다면, 평택~안성, 안성~용인, 용인~부발 등 구간을 나눠 단계적 공사 착수 검토 필요

○ 수도권내륙선에 대해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유지 보수 다짐장비로 CRCC사의 JMTT장비를

도입하였는데 해당 장비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거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원주역 연장을 검토할 필요

○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PSO 등 지원 필요

○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착공 필요

○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 검토필요

○ 미출자 차량기지를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 철도 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신분당선의 높은 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재구조화 연구용역 실시 필요

○ 철도 무단진입 사고 예방 조치 마련 필요

○ 글로벌철도연수과정 관련 철도협회가 아닌 용역 발주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 1차-2차 기관 간 교육사업비 차이로 인한 유학생 생활여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 교육사업 수행기관이 서울과기대에서 우송대로 변경된 과정 점검 필요

○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철도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철도용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구간 송산~원시 구간 셔틀버스 운행비용의 지자체 분담 여부 및 급박하게 셔틀버스 운행 협약을 종용하고 있는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GTX-C 청량리 변전소의 입지 결정 과정의 적정성 및 대안 부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경기도에서 김포골드라인 도시철도 증차사업비를 철도운영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지침상 철도차량 증차 비용은 철도운영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철도차량 신규증차 사업비가 철도운영비인지 시설투자비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 필요

○ 남부내륙철도 및 역세권 개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부평역발 1호선 급행 증차 검토 필요

○ 무임승차를 이유로 코레일 자회사직원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경강선(여주~원주) 철도운영계획 변경을 통한 원주역 연장 운행 필요

○ 철도건설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영향에 대한 질의

○ 동남권 광역철도(진영-울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후 국가 운영 검토 필요

○ GTX-A 미개통 구간(삼성역 포함)을 서둘러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필요

○ 한남동 관저 정자 증축은 철도보호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전 관저 정자를 증축했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GTX-A 창릉역 준공이 기존 계획 대비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 검토 필요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중인 2호선의 2인 승무제를 1인 승무제로 전환시 기관사 및 승객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철도안전법으로 인해 노면전차 횡단이 불가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큰데, 이를 완화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 철도경찰의 열차 간 승무 편차가 크고 우범 열차 중요도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승무 계획을 세심하게 세울 필요

○ 철도경찰 야간 승무의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가점부여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필요

○ GTX-A의 경우 완전 개통되면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백운역 남쪽 개찰구 신설 추진 필요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철거 등 대안 검토 필요

【 공공주택추진단 】

○ 올해 10월 기준 공공주택 착공실적이 4천 호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목표 물량 5만 호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필요

○ 사전청약이 시행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사업관리 철저, 본청약 지연 여부 신속 통지, 분양가 상승 문제 해결 등 사전청약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

○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당초 추정분양가에 맞춰 공급 필요

○ 정부가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검토 필요

○ 정부가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의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8.8 대책) 발표로 부동산 투기, 지분 쪼개기 등 위법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그린벨트 해제 정책 재검토 필요

○ 반도체 소재 기업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AMAT) 오산 유치 관련, 국토부·산업부·오산시 간 혼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필요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 직후, 오산시의 부지 제외 요청이 거부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필요

○ 인천 검단 AA 21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청약통장 점수 복구 등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 수립 필요

○ 인천 검단 AA 21블록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향후 시공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 LH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공주택에서 하자가 증가하고 있어 시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2024년 착공목표 물량 대비 현재까지의 착공실적이 부족한데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보상 조기화 등 추진계획 점검 필요

○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수상업체 중 부실 시공업체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 필요

○ GTX-A 창릉역 준공 지연에 따른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교통대책 마련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예방 대책 필요

○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해법 모색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법제화, 권리산정일 합리화 등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 노력 필요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진행 필요

○ 빈집정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자료의 정확성 제고 필요

○ LH 공급 계획 물량 조절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회피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시행 방안 마련 필요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지방도시의 소멸 위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 필요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으로 지역은행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

○ 광역교통 연결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 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부울경 지역 광역교통정책 컨트롤타워(광역교통청) 마련 필요

○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약제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K-패스 예산 부족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 필요

○ K-패스 혜택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후동행카드와의 연계 방안

검토 및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확대 검토 필요

○ 광역급행버스 신설 노선을 조속히 운행 개시 필요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적기 개통 필요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의 차질없는 완공 필요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 협조 필요

○ 김포·검단 5호선 연장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

○ K-패스 회원가입 및 환급 시스템 개선 필요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특례시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

○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가 부담 필요

○ 광역철도 운영 이원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통합건설운영조직 마련 필요

○ 수소철도차량 연료보조금 지원제도 마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 검토 필요

○ 1층 전기버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검토 필요

○ 광역콜버스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필요

○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광역철도 연장선 운영비 적자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MaaS(Mobility at a Service, 통합이동서비스) 사업의 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직접 개발 지양 검토 필요

○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신속 추진 필요

○ 인천공항버스노선의 K-패스 적용 노선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확대 검토

○ LH가 진행중인 검단지역 도로개설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완공 필요

○ 광역교통계정 신설로 인해 LH 부담증가 우려 및 이에 대한 대안 필요

○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의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 여부 검토 필요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4. 10. 7.(월) 10:11 ~ 23:4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정부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형렬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4. 10. 24.(목) 10:06 ~ 2024. 10. 25.(금) 00: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형렬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완료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

○ 세종공동캠퍼스에 수도권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사업 정상 추진 필요

다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4. 10. 7.(월) 10:11 ~ 23:48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정부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안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4. 10. 24.(목) 10:06 ~ 2024. 10. 25.(금) 00: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안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대규모 사업유치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자체 정화한 후 바다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방류관로 사업 관련 관리체계 및 점검시설 마련 필요

○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관련 국외기업의 투자 지연, 인력 수급 및 정주여건 문제, RE100, 안전시설 미비 등 현안 해결 필요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공급 시설 구축 등 대응 필요

○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용수 공급체계 및 하수처리에 관한 대안 마련 필요

○ 새만금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필요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0.(목) 10:13 ~ 20:4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한준 등 1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위탁사업의 과다 수의계약 체결 등 불투명한 사업절차 시정 노력 필요

○ 2022년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활용계획'에 없었던 '반환부지 수공간 특화 및 마스터플랜' 입찰을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 132억원을 전용하여 추진한 의사결정과정 확인 필요

○ 매입임대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을 소수의 전관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바,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 개선 필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후 위탁관리 시 전관 특혜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인천 검단 21블록 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한 투명한 공개, 입주민 피해·불안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경과 국회 공유 필요

○ 용산어린이정원의 토양오염 관련 임시 저감조치로는 아이들 활동을 위한 위해성 해소가 불충분하므로 토양오염조사 실시 및 임시개방 타당성 재검토 필요

○ 건설임대주택 중 공급과잉지역 또는 인프라 부족 지역에 건설되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주택이 있는바, 실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 필요

○ 본청약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 포기 및 추가 청약 기회 상실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임대주택의 주거 질 제고를 위해 면적·채광 등 적정 주거기준에 맞는 건축기준 마련 필요

○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임대아파트 40만여 세대의 주거 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

○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 추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또는 「주택법」에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반지하가구 주거상향 지원 가구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 필요

○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하자 급증 및 처리 기간 장기화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방안 필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배분 비중 재검토 필요

○ 부실 설계 방지를 위한 구조도면 대국민 공개 및 구조검증위원회 운영 등 LH 혁신안 준수를 통해 주택 하자 방지 필요

○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등 주택공급정책 목표 달성 가능 여부 점검 필요

○ 정원 감축, 조기 퇴사자 증가 및 조직 사기 저하 등으로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품질관리업무 누수가 우려되므로, 인력 증원 등 인력 운용 방안 검토 필요

○ 전관업체의 부당 수주 및 전관업체와의 유착 방지 등을 위한 LH 혁신안의 실질적 이행상황 점검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전관 특혜·비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감찰 기능 강화, 내부 인식 전환 및 자정 노력 강화 필요

○ 공공주택 하자의 원인으로 화물연대 또는 노조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주의 필요

○ LH 사장에게 국가비전연구원 대표이사 및 한국교통기술사협회 고문 등 신고되지 않은 직위가 있는바, 겸직금지 위반 소지 확인 및 조치 필요

○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의 선임 경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 등 절차상 하자 확인 및 조치 필요

○ 공공주택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 보호 및 경제성 유지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리 대책 필요

○ 경쟁입찰원칙을 저해하고 명목회사 설립 비용 등이 분양가에 전가되어 수분양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의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 2.)에 따른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신축 매입임대물량 확대에 따라 LH의 재정부담 증가 및 매입주택 품질 저하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재원조달 방안 및 정책목표 타당성 등 검토 필요

○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 미분양·미매각 토지 보유 등 경영평가 악화 요인 및 조직 사기 저하 요인 등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 설계 대비 철근이 과다공급되었음에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감사 및 사법적 조치 등 대응 필요

○ 영구임대아파트 에어컨 설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 전환, LH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상황에서 LH의 주택공급 등 정책과제 수행 역량의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 LH 전세임대보증금 반환 사고 증가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LH의 동파방지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시방서 개정 시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자체 감사 추진 및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 필요

○ LH 임대아파트 내 화재 피난용 공기안전매트 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필요

○ 공익사업 시행에 협조한 협의보상 대상자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대상자 간 평균보상금 차이 및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등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

○ 공공공사 임금 직접 지급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의 도입률이 저조하므로 전체 현장 도입 목표 수립 및 월별 이행률 보고 필요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지체보상금 1,4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 대응 방안 필요

○ LH의 공공주택 공급 권한의 독점을 해소하고 감리·설계·시공 등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LH 혁신안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적극적 검토 필요

○ 임대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등 전기차 장려 정책과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요건의 보유차량 가액 기준 간 상충적인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LH 공급 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예비전원 장치와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지 않은 장비 현황 파악 및 향후 조치 계획 필요

○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및 영구임대아파트 노후복지관 시범사업 등 재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보 노력 및 국회 협의 강화 필요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LH 주택공급 비중 개선 등 LH의 주택정책 근본적 전환 방안 필요

○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구체적 개선 계획 및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상주 관리자가 없고 입주자 민원 처리가 비효율적이므로 개선방안 필요

○ 반지하 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신청 수요는 있으나 대부분 심의 단계에서 거절되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 등 실적 제고방안 필요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사업이 당초 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대책 필요

○ 주택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의 격차 해소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대규모 변경 시 관련 절차 철저한 준수 필요

○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LH 수탁사업자금 운용방식 개선 필요

○ LH 공공주택 품질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상용화율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하자가 심각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보수 및 긴급주거지원 제공 등의 적극적 조치 필요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하여 정성평가의 부작용 해소 및 심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주민피해 고려 시 조기 보상 착수 및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험 분담 관련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 관리 효율성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주택의 호별 매입 최소화 필요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높은 만족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 필요

○ 용산어린이정원의 위해성 저감 조치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 적극적

안내 및 소명을 통해 우려 불식 필요

○ LH가 관리하는 건설 현장의 외국인 건설노동자 증가와 관련하여 안전 및 의사소통 강화 방안 필요

○ 권익구제기관의 요청에 따른 민원 해결 외에도 자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민원 대응의 실효성 및 필요성 검토 필요

○ 공공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법률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경상남도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토양정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뉴딜사업 추진 필요

○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 종합타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종합부동산세 과오납 및 사업비 오지급 사례 등 관련, LH 지역본부 재무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LH가 건설하는 장애인 우선공급 아파트에 주거약자 친화적 월패드 구축 및 점자유도블록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 필요

○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의 혜택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공동체 형식의 은퇴자 주택 구축 방안 검토 필요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활용 유인방안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등 개선 방안 필요

○ 주거급여 현장 조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원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조사대상 가구 사전정보 확보 방안 필요

○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의 자연적 유수 기능이 소실되므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대체 유수 시설 구축 필요

○ 수도권에 편중된 도시주택정비사업이 지방 소도시 주택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 방안 검토 필요

○ 감리사업자 선정과정에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참여한 사업의 부실 여부 점검 필요

○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민간사업자와의 공급 역할 분담 방안 필요

○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화재 대응 대책 필요

○ 유관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방치 중인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 신축 매입임대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실수요지 면밀한 검토 및 매입약정 후 약정 해제·해지 물량 최소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용인하갈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공공임대주택 중 고액 관리비 부과 주택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실태조사 필요

○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입주 자격 요건을 상회하는 고가 차량 보유 사례가 있으므로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부산 명지지구 폐토사를 비롯하여 LH가 전국 각지에 적치한 폐토사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대형공사 입찰 시 스마트 건설기술 이용을 조건으로 사업 수주 후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계약의 불공정성 및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건설사업 발주자가 원청업체의 동의가 없어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마련 필요

○ LH의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에 대한 해소방안 필요

○ 울산광역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산업로 접속도로 사업 추진 지연 및 지하차도 공사 장기 중단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품질미흡 통지제도의 사각지대 확인 등 품질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 및 전문적 추진을 위해 LH의 해외사업 기능 회복 필요성 검토 필요

○ 건설임대 소형 평형 주택은 주거복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가 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개선 등 소형 평형 공급 정책 재검토 필요

○ LH 혁신안에 따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인천 검단 21블록 부실공사 관련, 구조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 기준 부재, 계약상의 부정, 감리업체의 문제 은폐 관여, LH의 증타보강 공법의 안정성 미검증 등의 의혹에 대한 소명 필요

○ 인천 검단 21블록 부실공사 관련, 부실 인지 이후 입주예정자에 대한 거짓답변 및 기만, 일방적인 건설정상화 추진 및 책임 전가 등의 행태에 대한 소명 필요

○ 공동주택용지 판매 실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판매 전략과 토지연체대금 중점 관리 방안 등 LH의 재무부담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건설 임대주택에 품질미흡 자재(KS 미인증)가 사용된 것 관련, 사용업체에 대한 조치 실시, LH 승인이 필요 없는 신고자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제도 개편 상세 안내 방안 마련 필요

○ 광역교통계정 신설 시 LH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LH 양산 사송 택지개발지구 주변 고리도롱뇽 영구서식지 보존 필요

○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 관련,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품질 정기조사 및 주택 가격 확인 등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평범한 은퇴자를 위한 주거정책 관련 법적 제도 마련시 LH의 적극적

참여 방안 검토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 9. 10. 개정, 2024. 11. 11. 시행) 전 LH로부터 주택매입 불가 판정을 받아 대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을 하고 경매 차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기간 연장, 금융 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대책 필요

○ 신규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 자율 선정 제도에 따른 LH 브랜드 활용 저하 관련, 기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의 형평성, LH의 공적 정체성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LH 공공주택 품질의 획기적 개선 및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필요

○ 미분양 매입확약 관련,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 및 수요부족지역 공급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 방지 대책과 아울러, 건설원가 수준의 매입 확약가율 설정 및 수요자 대상 세제 혜택 등 예산 낭비 및 미분양 방지 대책 마련필요

○ 2021년 제1차 LH 혁신안의 징벌적 제도에 따른 임직원 사기 저하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

○ LH 혁신안의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체제 도입이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LH의 공적 역할 축소를 유발할 가능성 검토 필요

○ 공공주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도심 공공복합개발 관련 사전 검토자문단계 단축 방안 마련 및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현실적 보상방안 필요

○ 입주권 전매허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 검토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차질 없는 진행 및 근거리 배정 원칙 실현 방안 강구 필요

○ 통합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의 소셜믹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집, 청년창업센터 및 주민 커뮤니티 운영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통합 공공임대아파트의 청년창업센터 운영현황 점검, 커뮤니티센터 입주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LH 우선 구매방안 검토 필요

○ 주택관리공단 및 LH주거복지정보의 젊은 직원 퇴사율이 높은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필요

○ LH주거복지정보의 채용규정 상 범죄이력 정보 수집·동의 관련 사항을 현행 제도에 부합하도록 정비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책과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임대동 혹은 임대단지가 함께 있는 단지의 도심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관련 대응 체계와 구체적 개선책 마련 필요

○ 대토용지에 지구계획 변경 또는 토지공급·사용시기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토지주에 변경내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공정한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등 대토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 관련, 양질의 주택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임대료 체계 개선 등 자구노력 강화 및 임대주택 운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현실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대외 신인도 상향 대책 필요

○ 상위 규정 및 내부 복리후생제도 기준을 초과하여 임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택융자금 지원 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필요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거주 청년의 양질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소형 평형의 행복주택 공급 정책 재검토 필요

○ 장기임대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사전 하자 점검 내실화 및 하자 적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등 검토 필요

○ LH 공급 주택 거주자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체계적 관리 방안 및 주민들의 응급 대응 능력 향상 대책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 되도록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

○ LH의 책임과 권한 간의 균형 및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조직 진단 실시 및 업무 분산 방안 등 검토 필요

○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수사상황과 결부하여 지급 보류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의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LH 임대주택 관리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임대 관리방안 마련 필요

○ LH 건설현장에 납품된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의 투수계수가 품질기준에 미흡할 경우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 필요

○ LH 에서 추진 중인 파주운정3 A47 행복주택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사후관리체계 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마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21.(월) 10:03 ~ 21: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함진규 등 1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 주요 감사내용

○ 기후위기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 필요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대비 2023년 경제성 조사 시 교통량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부 노선 현장 방문 등 출장 문서 부재에 개선 필요

○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설계기준 미달 노후교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조치 필요

○ 차량의 과적 단속 및 해소를 위해 분리운송 조치를 위한 부지 마련, 시설 확충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 필요

○ 차선도색공사 불량 도료 사용 및 부실시공 근절 대책 필요

○ 휴게소 지하수 사용과 관련하여 연수기 사용 등 보다 높은 수질 확보 노력 필요

○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 산업재해 사망자 목표 수정과 관련하여 통계 왜곡에 대한 시정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휴게소 야간운영 및 휴게소 관련 계약 체결 시 야간 인력충원 방안을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야간운영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유류구매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알뜰주유소 이익 증가 문제 개선 필요

○ 알뜰주유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 개선 필요

○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임원 등에 대한 월급이 과다하고 장학금 배당이 적은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의 고액, 상습체납 문제가 심각하므로 강제징수 절차 개선, 고지서 발급방식 개선 등 미납통행료 감소 방안 및 부가통행료 집행률 저조 문제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 필요

○ 스마트톨링 관련 개인정보 수집, 미납률 증가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경찰청과의 노면상태 분류기준 일원화 이후에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경찰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게 도로 상황 기록 필요

○ 점유율 저조, 투입비용 과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문제 등을 고려할때 EX선불카드 사업 폐지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 전임간부가 레이더식 돌발상황검지시스템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시방서 준공기준이 완화되고, 도로교통연구원은 완화된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능평가 검증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형사적 조치 필요

○ IC 설치 비용 부담 관련하여 「도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및 기획재정부 훈령 개정 검토 필요

○ 터널 내화지침 제정 이후 장주터널 등 지침이 적용 되지 않는 터널에도 적용되도록 점검 필요

○ ACC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AI 기반 도로파임 탐지기기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탐지기기 실효성

점검 및 정책전환 필요

○ 안전순찰원 단속권한 부여 관련 법 개정 필요

○ 안전순찰원 차량 노후화 문제 개선 필요

○ 수원신갈IC 진입부(서울방향) 확장 필요

○ 동백IC 설치 조속 추진 필요

○ 소형 적재불량 차량에 의한 낙하물 사고의 문제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절차 개선 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개선 필요

○ 휴게소 임시운영 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업체 선정 기준 정립 필요

○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 지불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관리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용요율 인하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필요

○ 미승인 자재(강섬유) 반입에 대한 자재관리 및 검증 부실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업체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 필요

○ 과적차량 적발 관련 추적관리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도성회 및 H&DE의 휴게시설 운영·배당, 민자휴게소 감사추천 조항, 휴게소 재계약 평가와 관련된 이해충돌 소지 등 휴게소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 개선을 위해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의 재취업 심사 대상 확대, 계약 체결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대상 확대, 퇴직자 DB구축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임대휴게소 대비 비싼 민자휴게소 음식값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음식가격 공시제도 운영 등 공공서비스 개념으로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화재 관련 전수조사 및 대응방안 강구 필요

○ 안전성과 평가 기준 및 배점 제도개선, 안전신문고 활용도 제고, 현장 점검 강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기흥IC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센터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인데 한 곳이라도 선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 재검토 등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장기 체류차량 현황,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재무건전성 악화 및 불량도로를 해결하기 위한 PSO 보전 필요

○ 고속도로 밀도 측면에서 수도권이 지방에 2배 수준이며 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실행 모든 측면에서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 사업관리 및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계획에 소외된 부분을 반영 필요

○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로의 추진 등 원활한 영동선 확장사업·소래IC 설치 추진 필요

○ 중대재해 발생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가 없고 임원인사위원회 내 외부 인사가 없다는 질의

○ 주택지원에 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및 관련 규정 제정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기간제 센터장 채용 시에는 2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서 보다 중요 직위인 경영본부장은 40세의 경력에 논란이 있는 대상자가 채용된 점을 볼 때 임용 조건이 차이가 크고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특정 본부장이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용 설문조사 관련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센터 예산을 사용하는 등 갑질 문제가 심각하므로 내부 감사 및 결과 보고 필요

○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점, 차선도색 도료 수의계약 중 여성 기업인

대표를 세워서 수의계약을 수월하게 하려는 사례가 발견되는 점,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 필요

○ 김해시와 협의하여 한림IC 설치 추진 필요

○ 스마트톨링으로 차선이 감소할 경우 도로 상부 개발 여건이 조성되므로 주민들의 주거권,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상부개발 방안 마련 필요

○ 고속도로 발주공사 업역규제 철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는 발주 방안 마련 필요

○ 부당 유류구매 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이 미온적이므로 재검토 필요

○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및 현재 환매권을 통지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휴게소 주차장, 고속도로 상부 태양광 패널 등 고속도로 태양광 설비 확충 필요

○ 현장지원직 임금 차액 소송 관련하여 1심 패소 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현장지원직 휴게공간 마련 필요

○ 울산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부산-울산선 청량IC 교통체증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및 고삼호수휴게소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개통식은 안성에서 실시 필요

○ 고삼호수휴게소 외부 연결 보행로 설치 적기 추진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필요

○ 신탄진 하이패스IC로의 신탄진IC 화물차 통행량 분산 방안 강구 필요

○ 주말할증제 유지 여부 재검토 필요

○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 부적절한 위치, 수도권본부의 이중화, 특혜성 매입 의혹 등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의혹과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국토교통부의 감사 필요

○ 수도권본부 추가 필요성 불분명, 인원 계획 미확정된 상황임에도 추진한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재검토 필요

○ 통행료 과오납금 미환불금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호남고속도로 광주 통과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광주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 필요

○ 다봄CCTV 규격기준 변경 관련 문제, 이와 관련된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 및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승진,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해당 CCTV의 낮은 품질 등 다봄CCTV 사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형사적 조치 필요

○ EX선불카드 유보금 환불 가능 통지 필요

○ 현장지원직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필요

○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 및 임대휴게소 임대요율 인하 방안 마련 필요

○ 자회사의 부채 등을 고려하여 열악한 계약조건 개선 필요

○ 휴게소 수소충전소 확충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고속도로 터널 소화설비 설치 기준 보완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령 개정 및 과업지시서 개정 등을 통한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지원검토 필요

○ 불요불급한 임원 해외 출장 문제 개선 필요

○ 합리적인 포트홀 피해배상 방안 강구 및 포트홀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에너지숲, 미세먼지 차단 숲, 태양광 발전사업 등 ESG 관련 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 노후휴게소 재건축, 리뉴얼 관련, 계량화된 종합적, 객관적 지표에 따라 재건축, 리뉴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관련 계획 수립 시 예산 소요 등 휴게소 운영 시 발생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필요

○ 테마형 휴게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종합적 진단을 통해 휴게소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구경북신공항 지원 고속도로 사업(구미-군위 신설, 동명동호-군위 확장 등) 조속 추진 필요

○ 차선도색과 관련하여 도색공사가 진행된 구간 다수에서 하자 발견되어 조치가 필요하며, 도색 구간 선정 기준 상향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흡연자의 쾌적한 이용과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개선 및 스마트흡연부스 도입 검토 필요

○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유류 부정구매, 수목원 공사비 과다납부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 및 기관 차원의 쇄신안 마련 필요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이-천안 확장사업 반영 건의 필요

○ 공사손해보험 간접계약으로 보장이 부실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사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감사가 필요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 필요

○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 및 휴게소 운영업체 입찰 시 새로운 업체의 진입장벽이 없도록 절차 개선 필요

○ 여주·횡성 휴게소의 경우 임시운영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운영 과정의 문제로 휴게소 입점업체 및 거래 업체에 큰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 회복 관리 필요

○ 안전성이 높지 않은 PE울타리 설치 현황 파악 및 보다 안전한 방호 울타리로의 교체 등 차량방호 울타리 관련 안전성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알뜰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지침 개선 등 석유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 필요

○ 알뜰주유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류비 인하 방안과 과도하게 비싼 기름을 팔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실효적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견인차의 고속도로 진입과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드론 활용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 관련 재개 방안 마련 필요

○ 빙판길 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기술도입 및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터널 내 재난방송 청취 불량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도로전광표지판(VMS) 기술개발제품 관련 특정 업체의 부정납품, 업체와 직원 간 유착, 전관 유착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 필요

○ 벌점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회의록 관리 필요

○ 견인업체 난폭운전 문제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전향적이고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 긴급견인서비스 관련 업체선정과정의 불투명성, 견인업체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바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한문희 등 1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코레일과 SR 앱이 분리되어 환승할 때 열차 이용시 국민 불편, 앱 통합 등 개선 대책 필요

○ 코레일관광개발 파견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 및 실전 안전교육 실시 등 고객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철도건설 사업에 편입된 부지의 소유자로서 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

○ 명절승차권 경로우대 예매 후 타인이 승차하는 편법, 매크로 불법 예매 및 암표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 필요

○ 노쇼 위약금 증액하는 방안, 평일과 명절·주말 기간에 위약금을 구분해서 부과하는 방안, 부정승차 부가운임료 증액하거나 적발된 역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방안 등 노쇼와 부정승차 관련 다양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반환 승차권 신속 재판매 시스템 도입, 코레일톡 예약대기 기능 개선

등 명절 승차권 노쇼 관련 제도개선 및 특사경 단속 권한 부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 등 암표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최대 수요전력 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철도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철도용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 출근시간 익산 출발 상행선 운행계획 조정 방안 마련 필요

○ 주말과 명절에 경부선 대비 호남선 열차운행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열차운행 불균형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기관사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징계 기준에 대한 점검 필요

○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도록 법률에서 의무화했는데 하위법령에서 법률을 사문화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는 기관사 인권 침해 소지를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 필요

○ 철도 시설물 하자보수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개선대책 마련할 필요

○ 계열사 직원들의 이동권 해결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서에 근거 마련 등 개선 필요

○ 코레일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 운임인상, 용산 역세권 토지매각, 코레일·에스알 통합, 적자노선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종합해서 검토 필요

○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 출제 관련 과업내용서를 수정하고, 검수도 제3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철도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인력 체계 혁신을 비롯하여 인력 관리,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안전활동 수준평가 3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있는데, 안전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장기 단체계약의 폐해를 감안하여 빠르게 폐지 필요

○ 철도의 화물 분담률 제고 대책 마련 및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성과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철도 열차 내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철도시설, 승객,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 대책 마련 및 관리 필요

○ 철도차량 납품지연(EMU-150) 관련 업체에 계약해지나 입찰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납품 지연을 한 열차 제작업체가 입찰을 받아 납품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대전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서대전역 고속열차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 직원들의 점유이탈물횡령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징계 수위를 상향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국산 신호시스템 상용화 및 효율적 신호시스템 교체를 위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TFT구성 등 협업 및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관리 필요

○ 구로역 사고 관련 재발 대책으로 작업계획서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작업구간의 이웃 선로까지도 열차 운행이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필요

○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코레일테크가 주 6일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주 5일 근무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 중인 일산선 등 4개역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법」제38조 단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자회사 설립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코레일에서 출자회사에 임원 등을 추천할 때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임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철도역사 중국산 CCTV 보안 문제 우려에 따른 CCTV 전수조사 및 신속한 교체 필요

○ ITX-청춘 마석역 추가 정차, 상봉-마석 셔틀 전동열차 조기투입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의 적극 협조 필요

○ 금천구청역사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주차장 부지 제공 등 금천구청과 적극 협조 필요

○ 금천구청역 경부선 급행열차 증차 및 필요시 추가선로 설치 등에 대한 적극 검토 필요

○ 통합환승시스템이 지장받지 않도록 티머니와 적극적 협의 필요

○ 감정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 신설 및 운영 필요

○ 부정승차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및 시스템 강화 필요

○ 오송역 누수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시설 관리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 필요

○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들을 도입 활용하여 인명사고 예방 필요

○ 과잉 의전 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개선안 마련 필요

○ 가산디지털단지의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빠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자회사와 협의 필요

○ 여행사의 꼼수 판매의 미끼 상품으로 이용되는 상품석에 대해 과다 할당을 개선하는 등 상품석 운영 재검토 필요

○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구로역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노사 합의 사항을 규정에 반영 필요

○ 장애인 전동휠체어석을 늘리는 방안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휠체어 사용자와 보호자의 열차 동승 관련 좌석 위치 선택, 승차권 예매, 관련 홍보 및 만족도조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므로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대상 지방 열차여행 프로그램 관련하여 지방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 개선 필요

○ 전동열차 무정차 통과 사고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열차 지연 안내 오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괴동선 및 군산항선 전철화 사업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업해서 계획 수립 필요

○ 동행자 마일리지 사후적립관련 홍보강화 및 사후 적립 가능기간 도과한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

○ 인덕원~동탄 116번역(가칭 메타폴리스역)을 급행역으로 지정 검토 필요

○ 차량기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 매뉴얼 마련, 유해물질 측정, 작업 환경 조성 등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지코비(GKOVI, 열차 내비게이션) 도입을 추진 중인데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구로역 사고 관련 지코비 및 LTE-R 무전기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예산 지원 논의 필요

○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검토 필요

○ 열차 여객승무원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검토 필요

○ 명절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이벤트가 통일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철도 승차권 악성반환 대응을 위해 환불 수수료 차등화, 일정 횟수 이상 예매·반환 제한제도, 사전예매 개선 등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코레일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KTX-1 대체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

○ 산업안전 대책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분석 필요

○ 호남선 KTX 증편과 관련하여 선로배분 문제를 통한 호남선 증차에 대해 차기 선로분배위원회에서 호남선 증차에 대한 의견 보고 및 대책에 대한 논의 필요

○ 부산 차량기지와 인접한 DRMO부지 내 차량기지 건설이 검토 중인데 관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지체되는 바 고속철도차량의 안정적 정비를 위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광주송정역 광장을 5·18사적지로 지정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광주시, 광산구의회 등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위탁하는 주차장에 코레일네트웍스 주차관리요원의 무료이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본사-자회사 간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 운영 중인 광주송정역 주차타워 부실 공사 민원이 지속되고, 주차장 설계, 주차관리원 휴게실 등에서 문제를 보이는데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 운영 중인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하자발생 상황, 직원 복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 필요

○ 약관 변경 등을 통해 2시간 이상 지연 고객에게 100% 보상하는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K-철도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된 철도기술과 노하우로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필요

○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등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복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저조하는 등 윤리경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비효율적인 동력차 승무원의 인력 운용체계 개선책 마련 필요

○ 코레일 신입사원 채용시 민감한 신체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책 마련하여 관리 필요

○ 특별동차의 정의 등 기본적 사항은 공개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대통령전용기와 동일하게 특별동차 관련 별도의 훈령 제정 검토 필요

○ 병가 시 진단서 확인, 연 누계 일수 관리에 대한 규정 개선 및 근태관리 시스템 보완 필요

○ 철도시설물 검측시스템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부 상용화가 되어 국내입찰을 진행해야 할 필요

○ 디젤기관차 소요량 대비 보유량이 부족하며 전시 등 비상대응 수요가 있으므로 신규 디젤기관차 도입 필요

○ RE100 계획을 세우는 일정 및 추진계획 마련 필요

○ 철피아 문제는 특정 학교 출신의 파벌 형성, 코레일 출자회사 및 철도 관련 사업체로의 낙하산 재취업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철피아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 마련 필요

○ 정시율 홍보 시 UIC기준보다 고객서비스 헌장에 따른 기준의 정시율을 사용하고, 고객서비스헌장 기준 정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서발 KTX-서울발 SRT 교차운행을 조속히 추진 필요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코레일 부채 해결을 통한 대국민 혜택 제공이라는 목표를 되새기고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 성남에서 여주를 왕복하는 경강선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단축, 열차 증량 등 혼잡도 완화 대책 마련 및 이행 필요

○ 舊 원주역사 개발 사업 관련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간 토지교환

협의가 지연되어 진행이 더딘 상황이므로 각 기관 및 원주시 간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추진 필요

○ 인력부족과 업무 과중을 이유로 휠체어 서비스를 축소한 것은 교통약자 배려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총괄 관리자 배치를 통한 효율적 운영, 인력 충원 및 공공근로 차원의 지자체 협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서비스 확대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100% 비대면 예약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을 제약하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강구 필요

○ 신규노선 전기분야 유지보수업무 위탁을 추진 중인데 유지보수의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강구 필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자에 대해서도 육아기 단축근로 적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인력 감축 계획의 적절성을 재점검하고 인력 감축이 산업재해 유발 요인이 되지 않을지 여부를 분석하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해결 계획 마련 필요

○ 철도기관 간 소송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의 사전 해소 방안 및 갈등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고속열차(EMU-260) 입찰시 평가기준이 변경되어 고속철도차량 제작 경험이 있는 대기업만 단독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대표가 안전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필요

○ 유지보수업무 관련 미정산 금액 대비 국가 투입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하철 역사 공기질 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지진위험지역 감지기 확충 필요

○ 화차 형식승인 기술 기준 통일 필요

○ 출퇴근 시간대 4호선 혼잡도 개선에 대한 열차 추가구입 및 급행열차 도입 검토 필요

○ 대륙철도 운행 준비 관련 향후 CCR/TCR(중앙아시아 경유철도) 개통시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22.(화) 10:06 ~ 16:4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학재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법정이자 및 법인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적극적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 필요

○ 해양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의뢰 등 구체적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목표치 설정 및 달성계획 제출 필요

○ 다중밀집 상황 단계별 매뉴얼 준수,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기준 개선, 대응훈련주기 단축 등 면밀한 관리 필요

○ 여객 수요 및 여객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혼잡도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과잉경호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과도한 팬미팅, 홍보촬영 관련 경찰단과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업 체제 유지 필요

○ 유명인 전용 출입구 발표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용기준 마련 등 쟁점에 대한 검토 등 보완 필요

○ 다중밀집 대응과 관련하여 유명인 전용 출입구 운영이 아닌 출국일정을

알리지 않도록 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등 대안 마련 필요

○ 오물풍선 등 위협 관련 대응 매뉴얼 마련, EO/IR(Electro-Optical /Infra-Red, 전자광학/적외선) 장비 활용 등 자체 대응책 강구 · 실행 및 군 · 안전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전 대응 필요

○ ESG 기부금 관련 기부금의 특정지역 집중, 인천하늘고등학교 지원 등과 관련하여 기부금 관리 · 집행을 공적인 위원회나 재단을 설립하여 맡기는 방안 검토 등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장년층에 대한 홍보 등 스마트패스 활용률 제고 대책 강구, 오류 저감 방안 마련, 보안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 필요

○ 승무원 출입구 관련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서울지방항공청과의 협력 필요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임대료 분쟁 해소 노력 필요

○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제선 수요 및 지역 균형발전 관점을 고려하여 5단계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 및 지방공항과의 상생 필요

○ 해상 · 항공 복합운송체계 활용을 통한 환적공항으로서의 기능 활성화 및 화물수송용 슬롯 확보 필요

○ 정상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한 사건이 발생한바 보호구역 출입증에 대한 단계별 관리, 보호구역 출입 교육 · 시험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면세점, 상업시설, 항공사 등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관리 필요

○ 해외파견 인력 자녀 학비지원 관련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초과액 지원의 상한선 설정 및 승인 절차 마련 필요

○ 무수익 국제업무지역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터미널 재배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한 노력 필요

○ 인천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 필요

○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 내 불법시설 및 소화전 주변 물건 적치에 대한 시정 필요

○ 필요 보안인력 규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자회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적정 인력 확보 필요

○ 자회사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 및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자회사의 인력충원계획 관련 대책 수립 및 관련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활용방안 모색 필요

○ 4단계 확장 사업 완료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회사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자회사 노조가 요구한 증원을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 필요

○ 자회사의 과업범위 및 적정인력 규모가 노동자의 노동강도 및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단계 개항에 따른 과업범위 및 적정인력 검토 과정에 있어 자회사 노사,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객관성 · 투명성 확보 필요

○ 4단계 사업에 따른 적정 인력 운용에 실패하고 자회사 노조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빚은 상생협력처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및 적정한 충원 계획 수립 필요

○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모 · 자회사 노사 공동 이슈 발굴, 상생협력 등을 위해 모 · 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 운영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승인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자회사 본부장 임명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사개입 개선 필요

○ 3개 자회사가 수행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에서 제시된 관리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식별하여 적극적 개선조치 필요

○ 자회사 분리에 대하여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감안하여 계획 수립 필요

○ 신설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자회사 직원 선임 검토 필요

○ 공항 내 보따리상의 무단 적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인천공항 내 전시·공연 관련 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주차 공간 부족 해결책 및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 관련 공항 내 입점한 타 업종과의 형평성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부내륙의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한 직행버스 적자 보전을 통한 인천공항-지방 간 버스 노선 운행 재개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쿠폰 제공 등 주차장 수요 저감 방안 검토 필요

○ 직원 행사 시 경품 과다지급 등 방만경영 개선 필요

○ 인천 지역에 대한 기부금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지적

○ 적절한 임대료 정책과 환승객 유치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환승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자기부상철도 철거에 대한 검토 등 대책 마련 필요

○ MRO 관련 지역공항과 상생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 하늘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도로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장봉도 주민들의 소음피해 구제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 필요
○ 보안검색 관련 신속성과 정확성은 상충되는 가치이므로 신속성을 가점 항목으로 구성하거나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하여 분리평가 필요
○ 보안업무 중 인적오류 발생에 대한 공사 차원의 법률적 지원 필요
○ 직원들의 공사 차량 이용 시 교통법규 준수하도록 차량 운영 관리 강화 필요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인1조 의무규정에 관한 안전조치 내용 개선 및 법정 의무규정을 누락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한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필요
○ 입국장 인도장의 인천국제공항 도입 관련 정책의 일관성, 공간의 한계, 입국장 혼잡도 증가, 마약류 관리 등을 고려하여 반대 필요
○ 연결, 정비,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 개선 등을 통한 지연율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법 드론 피해 조기 차단 노력 필요
○ 인천하늘고등학교 고위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학교를 다니는 문제, 행정실장의 갑질 문제 등에 대한 확인 및 해당 학교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불용처리한 총기 폐기를 총포사에 대행하였으나 폐기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통해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 등 총기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인천국제공항이 마약이 진입되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자회사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도록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에 대비한 시설 보강 등 장기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면세점, 식음료점 등 입점업체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휴식공간 현황

제출, 차별없이 운영되는지 여부 확인 및 휴식공간 확충계획 수립을 통한 확충 필요

○ 면세점 내 물류창고와 매점 간 거리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므로 입점업체 안전을 위한 조치 필요

○ 공항 내 입점업체 직원용 셔틀버스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개선 필요

○ 금지행위에 승인받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해외사업 누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손익계산 처리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 공항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항공보안 규칙 보완 필요

○ 바탐 항나딤 공항 건설 참여 관련 공정률과 수익 계획 관리에 만전 및 국내기업 추가 참여를 위해 노력 필요

아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22.(화) 10:06 ~ 16:4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정기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필요

○ 한국공항공사 사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항 관련 전문성 없는 후보를 1등으로 추천한바, 낙하산인사 · 보은인사에 대하여 재심사 및 1등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고려한 결정 필요

○ 한국공항공사 사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등으로 추천된 후보의 적격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

○ 임기만료된 상임이사의 선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업무공백 방지 필요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 근절을 위하여 시스템과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지방공항 적자 문제 및 노후시설물 교체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절차 이행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정한 원상회복 기간 부여 및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 정비 필요

○ 교신 오류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충돌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활주로 상태 표시등과 같은 장치 도입 필요

○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소음대책 재원분담 개선 필요

○ 김포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 필요

○ 페루 친체로 공항 건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련 공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지난 추석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 정책 시행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미탑승 등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필요

○ 주차 공간 부족 해결책 및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자회사 직원의 근로 조건 동일하게 적용, 인력 산출 시 법정 휴게시간 외 생리현상 처리시간, 작업준비시간 등 여유 시간 반영 등 보안검색요원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오물풍선 등 위협 관련 군·안전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전 대응 필요

○ 여객 수요 및 여객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혼잡도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국제노선 적극 활성화 및 컨세션 확대 유치를 통한 매출액 증대 노력 필요 및 그 밖의 공항의 흑자 전환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

○ 장기간 사용료 동결로 인해 저하된 수익성 및 경영의 지속가능성의 정상화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 면세점 영업요율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JDC 지정 면세점 포함 입점업체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연결, 정비,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 개선 등을 통한 지연율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법 드론 피해 조기 차단 노력 필요

○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등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청주공항 매출누락 관련 매출 증빙방식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 전체적인 점검 및 특정사업자의 다수 상업시설 운영 제한 등 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새만금신공항의 청주공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 공항운영계획에의 반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필요

○ 특수차량 운전자 보조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공항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김포공항 내 광고물 설치·운영 업체들에 대한 무단 점유료 부과 관련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결정 불수용과 관련하여 갑질 논란 해소, 준법경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자회사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도록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 면세점, 식음료점 등 입점업체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휴식공간 현황 제출, 차별없이 운영되는지 여부 확인 및 휴식공간 확충계획 수립을 통한 확충 필요

○ 면세점 내 물류창고와 매점 간 거리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입점업체 안전을 위한 조치 필요

○ 공항 내 입점업체 직원용 셔틀버스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개선 필요

○ 공항에서 운용하는 특수목적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 필요

○ 금지행위에 승인받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공항소음대책으로 매수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매수 시 토지·건물 전체를 매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 필요

○ 공항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항공보안 규칙 보완 필요

○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에서 지난 7월 대체근로자를 명시한 근로변경서 제출 시에만 근무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실태와 원인 파악 및 대책 필요

○ 김포공항 주차·안내 분야 근무를 3조2교대 형식으로 개선 필요

자 한국부동산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태락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적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 통계 관련 혼란·오해 등 방지를 위해 통계 작성 방식에 대한 내외부 재검토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정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 미회수채권 최소화를 위해 HUG의 감정평가 관련 한국부동산원과의 협의 방안 마련 필요

○ 2024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발표가 지연되었는바, 정책 결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정기적 발표 기일 준수 필요

○ 혁신도시 이전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 개선 및 지역은행 이용 확대 필요

○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허위매물 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과 조치 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허위매물 모니터링) 담당인력 증원 검토 필요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인력 증원 검토 필요

○ 청약제도에 대한 사전설명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 문제 예방 및 근절 필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와 관련하여 검증기간 장기화에 따른 조정 취지 저하, 검증결과의 구속력 부재, 검증 역량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편 이후 실거래 공개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외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아파트 온라인 청약 플랫폼(청약홈) 서버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 단위 조사를 폐지하고 월간 통계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택공급실적 통계 오류가 있었는바, 통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 작성 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필요

○ 청약 당첨 안내 문자 허점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 가능성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지원 기능 중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병태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민간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보증하는 '일부보증' 관리 강화 필요

○ 보증 홍보, 전세계약 전 상담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 거절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보직선순환 직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므로 보직선순환제도 개선 필요

○ 주택도시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기금운용에 대한 협의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서민을 위한 지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악성임대인 추적 관리, 명단공개 개선,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10채 이상 임대인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보증사고가 일부 임대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임차인과 보증 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 상태,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 기금대출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 모두 적격 판정을 받는 등

대출 심사 부실 개선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급증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므로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부실 감정평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미회수금이 급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필요

○ 자본 감소, 대위변제액 증가, 채권 회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출자, 증권 발행 등 긴급 대책 항시 준비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을 악용하는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벌 강화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회수제도 개선 필요

○ 상습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후에도 상당수의 임대사업자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상황이 양호해지면 기금대출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보증한도에 월세를 제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허점으로 초호화 주택 거주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세보증금 재산정 필요

○ 다주택자 및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보증발급으로 인해 사고율이 급증하였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부영이 분양전환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퇴거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비공익적인 행태를 보이므로 기금 대출 회수 등 조치 필요

○ 악성임대인 지정 이후 추가보증이 발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증발급 업무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전면 재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고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사례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 필요

○ 주채무자 변경으로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담보인정비율 하향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소급 적용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 출자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직원이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휴직심사위원회 심사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임대상가조성 융자사업에서 융자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고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악성 임대인, 상습채무 불이행자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 마련 필요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시 채권 추심이 곤란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든든전세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무단점유자 문제 해결 필요

○ 채권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특단의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경매 이후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 마련 필요

○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조치가 빠르게 실시되도록 준비 필요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미실행률이 급증하여 계약금을 잃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선심사 후계약 등 제도 개선 필요

○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정가 산정 등 CR리츠 제도 지원 필요

○ 브릿지 단계 위기 사업장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서 적극적인 신규사업 선정 필요

○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버팀목·디딤돌 대출에 대한 구입자금 보증 제한, 후취담보 제한 등 기금 대출 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대안 마련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 필요

○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으로 지정한 후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각채권 회수율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 강구 필요

○ 악성임대인이 보증사고 물건에 단기 임대차로 수익을 편취하는 문제에 대해 강제관리 등 회수 대책 마련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문제는 서류 검증절차 부재가 원인이므로 임차인에게 보증 안내 시 본인인증을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보증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든든전세 주택을 최저 입찰가 대비 높게 낙찰받고 있으므로 낙찰가를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무자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 물건을 든든전세 매입 물량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기 신도시의 안정적인 재건축을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대출금에 대한 보증료를 낮추거나 보증 한도를 늘리는 등 완화된 정책 검토 필요

○ 보증업무,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제도개선책을 담은 혁신안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지원 직원에 대한 장기출장 및 출장비 지급이 부적절하므로 개선 필요

○ 전세사기로 인해 인력 및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몽골 해외자원봉사는 부적절하므로 사회공헌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상가 공실률에 취약하므로 임대상가조성융자사업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든든전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경매 중 무단점유자 파악, 인력충원 등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법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대위변제 물건의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차세대 시스템 지연이 보증 및 채권회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서버 증설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보증료율 인상에 앞서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세사기 발생 지역에 대해 든든전세 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경매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보증료율 개편과 더불어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보증요건 강화 등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PF보증 목표 및 발급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으로 체계적이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위장미혼 등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점검하고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사회주택 금융지원 등을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사회주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책수요 확인 필요

○ 사회주택 PF보증 활성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수립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에 사회적경제 단체에 보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기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거주자 만족도, 사업의 장단점,

향후 정책 방안 등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필요

○ 사회적 경제 지원 전담인력 지정 필요

○ 신속한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과의 상시협력체계 강화, 임대인 일반재산 조사, 경매 유찰 시 공매 전환, 다주택자 추가심사 등 대책 마련 필요

○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 상향조정은 서민 부담이 가중되므로 다른 기금 확충 방안 모색 필요

○ 든든전세 주택의 무단점유자 문제로 인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목표량 재설정 필요

○ 보증사고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21.(월) 10:03 ~ 21:2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용식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 주요 감사내용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허위이력 등 결격 사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사전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운전보조장치(적응형 순항제어 기능, ACC)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등 사고 예방 노력 필요

○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을 통한 택시 영업수익에 누락이 있는 등 정확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바, 정확도 제고를 위해 운전자 인증 의무화 등 제도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인 승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신중한 점검 및 검토 필요

○ 저상버스 리프트 관리 관련, 리프트 정상작동 여부 전수조사·수시점검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강구 필요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개발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 복원 필요

○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제조기밀의 사유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바 있는데, BMS 정보제공 의무화 및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 필요

○ 전기차 검사를 위한 배터리 진단기(KADIS) 민간검사소 보급 확대 필요

○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공개와 BMS 기술개발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 확보 필요

○ BMS 기술 수준 표준화, 소방당국 통보 네트워킹 시스템, 철저한 배터리 이력관리 및 점검 대책 강화 등 전기차 화재에 대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전기차 화재시 차량 뒷좌석 문 수동개폐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국내 기준과 다르게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미국 차량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 적용 방안 마련 필요

○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 사업인 마이배터리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바, 국내 판매중인 모든 제조사들과의 협업방안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기차 안전도 평가 시 BMS 등 배점 확대 및 하부 배터리 보호부분 충격에 대한 평가 반영 필요

○ 배터리 이력관리, 정기검사 등을 통해 배터리 관련 리콜 시정율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전동킥보드 등 PM 화재 관련, 배터리 안전 확보 대책 마련 및 등록제 또는 번호판 부착 등 검토 필요

○ 한국형 레몬법 관련하여 소비자 입증이 어려운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을 향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버스기사가 정원 대비 약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명확화, 진입장벽 완화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버스기사 양성대책 마련 필요

○ 고령 운수업종사자 자격유지검사장 시·도별 인프라 확충 필요

○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및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배달 이륜차 신규 등록자 양성 교육 의무 법제화 및 페널티 강화 등 검토 필요

○ 자동차 및 이륜차 관련 불법튜닝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처벌 규정 상향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민간검사소 부실검사에 대한 제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수소차 정기검사 재검사 수수료 발생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R&D 본 연구 신속 추진 필요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지원 검토 필요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대상 생활자금대출 관련, 현행법령 상 부모 등 대출신청자와 채무자인 유자녀가 분리되어 있어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TS 해외수출 지원단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내실화 필요

○ 위험물 운송차량 운송계획 누락·차량 미검수 방지 및 노후 차량 교체 유도,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율 지역별 편차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강화 필요

○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보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원 등 보안 전문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화물차 정기검사 재검 미이행·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관리 주체로서 적극적인 관리와 조치 필요

타 국가철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성해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 신호, 통신 부분의 100% 국산화 및 고속철도 주요 부품, 설비의 노후화율을 낮추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원발 KTX, 인천발 KTX 사업의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지연 발생 시 지자체와 협의 필요

○ GTX-A노선 동탄 반복선 분기기 레일 마모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

○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기관의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4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와 같은 과감한 조치 마련 필요

○ 2018년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출 금지 대상 물품이 북한으로 반출된 바, 주의 촉구 및 재발 방지 필요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타당성 재조사 면제 방안 등 2026년 개통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한남동 관저 증축 시 GTX-A 노선의 철도보호지구 협의 업무처리가 통상적 과정과 다르게 처리된 경위 파악 필요

○ 한남동 관저 증축 시 GTX-A 노선의 철도보호지구 협의 업무처리와 관련 해당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질의

○ 한남동 관저 증축 시 GTX-A 노선의 철도보호지구 협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외압에 의한 졸속처리가 의심되며, 대통령실에서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을 이사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질의

○ 철도 시설물 하자보수 이행률을 제고하는 등 코레일과 협의하여 하자 조치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국가철도공단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점검 및 개선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 역사 신설 사업 지연 없이 추진 필요

○ 지속적인 안전평가등급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남부내륙철도 조속히 착공 필요

○ 동대구에서 경남 동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전용선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KTX 포항역 주차장 신설 및 국비 지원을 통한 역사와 주차장 간 선상 연결통로 설치 필요

○ 국산 신호시스템 상용화 및 효율적 신호시스템 교체를 위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TFT구성 등 협업 필요

○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 철도 방음벽의 현황파악 및 교체계획 수립 필요

○ 철도유휴부지 무단 점용 등 국유재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철도유휴부지를 주민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수사례 개발·발굴 필요

○ 철도역사 중국산 CCTV 보안 문제 우려에 따른 CCTV 전수조사 및 신속한 교체 필요

○ 동대구역 광장에 관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공문, 고시를 살펴볼 때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주체는 대구시이며, 준공 후 소유권도 대구시가 갖게 되므로 준공 절차와 이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동대구역 광장 준공검사 이후 소유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견 정리 및 역 광장 명칭 변경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를 준공검사 전에 마무리할 필요

○ 월곶-판교선 급행 추가 정차 요구가 인천논현, 안양, 시흥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개통 이전에 급행 정차역 확정 검토 필요

○ 월곶-판교 복선전철 서판교 정거장의 출입구 추가 설치 검토 필요

○ 오송역 누수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시설 관리 개선대책 시급히 마련 필요

○ 과잉 의전 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개선안 마련 필요

○ 남부내륙철도와 투자선도지구 선정 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 필요

○ 2019년 이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자관리위원회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 계획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현 온산선의 스마트 철도건널목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온산선의 대체노선 건설 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괴동선 및 군산항선 전철화 사업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서 계획 수립 필요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차질없는 개통 필요

○ KTX-이음 열차의 남창역 정차 검토 필요

○ 산업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 필요

○ 서울역 선상통로 확장공사 시 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최소화하여 보행과 승하차를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부산 차량기지와 인접한 DRMO부지 내 차량기지 건설이 검토 중인데 관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지체되는 바 고속철도차량의 안정적 정비를 위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광주송정역 증축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K-철도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된 철도기술과 노하우로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필요

○ 철도시설물 검측시스템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부 상용화가 되어 국내입찰을 진행해야 할 필요

○ GTX-C 연장사업 국비 투입 필요성을 검토 필요

○ 동대구역 정비사업의 조속한 사업비 정산과 준공고시 이행 필요

○ GTX-B 사업 용산정거장 환기구 이동 민원과 관련하여 철도부지 매각, 환기구 이동 등 대안에 대한 검토 및 주민과 상생을 위한 노력 필요

○ 대전 신탄진 덕암동 철도유휴부지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 및 지자체와 소통을 통한 주민복지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 검토 필요

○ 철피아 문제는 국가철도공단 내 학연, 지연으로 얽힌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득권 형성,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를 위해 CCTV 추가 설치방안 강구 필요

○ 평택지제 차량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중복 투입, 홍수 침수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 舊 원주역사 개발 사업 관련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간 토지교환

협의가 지연되어 진행이 더딘 상황이므로 각 기관 및 원주시 간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추진 필요

○ 중요 정보화 사업에서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이를 위한 위험관리 및 적극행정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와 함께 총사업비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철도기관 간 소송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의 사전 해소 방안 및 갈등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지진위험지역 감지기 확충 필요

○ 철도터널에서 역사 내부로 유입 또는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기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저감 대책 마련 필요

○ 320km/h급 고속철도 차량 도입에 따른 고속선 시설개량 예산 반영 필요

○ 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의 철도건설 사업 편입 시 유휴 국유지와 교환하여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이행 필요

○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에서 제천을 포함하는 노선으로 적극 검토 필요

○ GTX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재개발 사업과 철도건설사업 공존을 위한 협조 노력 필요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영철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JDC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JDC의 예산 현황과 수익·지출 구조, 사업 투자에 대한 안정적 점검 시스템 구축 필요

○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장기화,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 발생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JDC의 설립 취지에 맞게 경영진과 관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히 사업 관리 필요

○ JDC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과 사업방식 전환,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입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원가 절감 및 입주기업 조기 모집 등 대책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관련 보유세제지원 정책 개선 필요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진섭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국토교통분야 국가R&D 사업 예산 복구 필요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어명소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소속 직원의 측량정보 유출 관련 내부 기강 확립 및 제도개편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 노력 필요

○ 공간정보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를 고려하여 중국산 드론 비중 검토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고도화 작업 부진, 10m 미만 저심도 공법 사업장에서의 활용 한계 및 데이터 제공 편의성 방안 미비 등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 저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LX 경영위기의 해법으로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미래성장 동력을 고려한 발전적인 위기극복 방안 마련 필요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 규정 정비 필요

○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민원 발생 및 타인토지 출입 시 법령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 필요

○ LX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신사업 추진 등 경영위기 극복 대책 마련 필요

○ 지적공부 오류 정비사업 부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계획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서지역 정위치 및 경계정비 사업’ 재개 방안 검토 필요

너 국토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0.(목) 10:13 ~ 20:4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일환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 단축 및 전문인력 장기채용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시설물안전보고서 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감점처분 기준에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싱크홀 방지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관리 점검인력 증원 및 장비개발 등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등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땅꺼짐 현상(지반침하 등) 방지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싱크홀 예방 등 진단장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 철저한 관리 및 추진 필요

○ 싱크홀 등 땅꺼짐 사고 예방 대책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종류별 건설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건설사고 사상자 수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민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 필요

더 ㈜에스알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종국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코레일과 SR 앱이 분리되어 환승할 때 열차 이용시 국민 불편, 앱 통합 등 개선 대책 필요

○ 불법매크로, 암표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필요

○ 안전평가 등급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에스알이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근거 법률 마련 등 공적 지위 제도화 및 취약지역 추가 노선 투입 등 공적 역할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감정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필요

○ 노쇼 위약금 증액하는 방안, 평일과 명절·주말 기간에 위약금을 구분해서 부과하는 방안, 부정승차 부가운임료 증액하거나 적발된 역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방안 등 노쇼와 부정승차 관련 다양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부정승차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및 시스템 강화 필요

○ 과잉 의전 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개선안 마련 필요
○ 여행사의 꼼수 판매의 미끼 상품으로 이용되는 상품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시 인터넷 검색 정보, 타 기관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쓰는 등 보고서가 부실한 상황이 확인되는데, 적발 시 출장비 환수 등 대책 필요
○ 산업안전 대책과 관련해 에스알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흡한 점에 대한 분석 필요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
○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 낙하산 인사들이 더 이상 에스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
○ 낙하산 인사들의 복무 관리, 업무 성과 평가 등을 엄격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비상임이사의 자격 조건을 철도운영자에 걸맞게 마련 필요
○ 휠체어 사용자와 보호자의 열차 동승 관련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서발 KTX-서울발 SRT 교차운행을 조속히 추진 필요
○ 철도기관 간 소송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의 사전 해소 방안 및 갈등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예매 시스템, 노쇼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대전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서대전역 SRT 투입이 필요
○ 효율성보다 형식에 집착하는 철도기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검사를 받지 않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및 수월한 건설기계 검사 수검 방안 마련 필요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 안전교육제도 도입 방안 마련 필요

○ 건설기계 안전사고 건수 감소를 위한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방안 및 안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기관 관리 감독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민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총괄관리기관 지정 제도 마련 필요

○ 번호판 인식기술 시스템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머 주택관리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0.(목) 10:13 ~ 20:4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허종길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영구임대 주거복지사) 사업에서 주거 위기 세대 등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 증원 필요

○ 상위직급 직원의 부적절한 외부강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버 코레일관광개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시섭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외국인 대상 지방 열차여행 프로그램 관련하여 지방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 개선 필요

서 코레일로지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준우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부적절한 인사운용 문제가 심각하므로 조직 혁신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마련 필요

어 코레일네트웍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전찬호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기간제 연장심사에 반영되는 필기시험 관련 교육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평가시험이 조성하는 고용불안 해소 필요

○ 주차관리원 감소, 통합관제센터 인원 감축 계획 등 과도한 감원은 신중해야 하며 적정 인원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계획 검토 필요

○ 관공서 공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당노동 의심행위 에 대해 엄중한 점검 및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간 임금 차이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 필요

○ 간부교육과 현장직원 교육간 소요 비용 차이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 필요

저 코레일유통㈜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택상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신입직원 퇴사율이 높은 원인 확인 필요

○ 前 사장의 출장기록과 관용차 사용기록 대조 시 부정사용이 의심되므로 감사조치 필요

○ 전문점 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일 경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

처 코레일테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10:04 ~ 17:27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조대식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안전보건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강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조직문화 내재화, 현장실행력 강화 대책 마련 필요

커 항공안전기술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22.(화) 10:06 ~ 16:4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대성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경영본부장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하여 확인 및 조치 필요

○ 공공기관 보유 국산화 비율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드론산업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해외수출 지원 등 성장지원을 통한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 필요

○ 드론 특별비행승인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한 검사 인력 증원 등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터 새만금개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나경균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강훈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필요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추진사업 실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방안 마련 필요

○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및 해외수주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효과적 참여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 해외건설 수주 목표 달성 계획 수립 필요

○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을 정책펀드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책펀드 외에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해외건설 미수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방안 마련 필요

허 건설기술교육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0.(목) 10:13 ~ 20:4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대철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타 공공교육·훈련기관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소수분야 및 특성화교육과정 개발 방안 필요

○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법정 의무비율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공구매 목표비율 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공공구매 목표비율 달성 방안 마련 필요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6.(수) 10:09 ~ 19:1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남일석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및 안전·보건의 조직문화 내재화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노 국립항공박물관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22.(화) 10:06 ~ 16:4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안태현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구매자료의 전시율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행 사유 및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필요 및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 유지 필요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21.(월) 10:03 ~ 21: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병삼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관련 근무경력 부재, 전문성 결여, 본부장 채용 자격기준의 변경 등 경영본부장 임용에 인사비리 수준의 문제가 있고 임용 후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 수사의뢰 필요

○ 기간제 센터장 채용 시에는 2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서 상위 직위인 경영본부장은 40세의 경력에 논란이 있는 대상자가 채용된 점을 볼 때 임용 조건이 차이가 크고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영업소 운영비가 적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직원 복지 개선 필요

○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가 필요하나 미시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특정 본부장이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용 설문조사 관련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센터 예산을 사용하는 등 갑질 문제가 심각하므로 내부 감사 및 결과 보고 필요

○ 한국도로공사 출신이 간부급 요직을 맡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징계 및 비위행위 조치로 처분받은 인원이 많고 성비위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대비 징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근태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직원 중 개인차량 이용비율이 대다수이고 장거리 이동자의 비중이 높은데 통근차량 운행을 적극 검토 필요

○ 고속도로 디지털화 등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 필요

○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있어 인력구조 및 재무상태 개선 필요

○ 적재불량 차량 공익신고 목표치 관리 필요

○ 연도별 서비스의 순손실 총액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1억원 이상 손실 발생 건의 현황자료, 발생 원인의 상세한 분석 자료 제출 필요

로 부산광역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4.(월) 09:59 ~ 13:11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 (기관증인) 박형준 등 43인

○ 특기사항 : 국토교통 제1반

(2) 주요 감사내용

○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해 지역 문화예술계 및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필요

○ 수도권일극화 해소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경남, 울산 등과 연계해 노력 필요

○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관광·교통 등 발전 플랜 구상 필요

○ 엑스포 유치 홍보 예산 자료제출 및 감사 관련해 향후 필요할 경우 적극적 협력 필요

○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 확대 필요

○ 대통령 부산 관련 공약 이행률 검토 및 이행 여부 점검 필요

○ 타시도 정책 등을 참고해 주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노력 필요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 관련 조사위원회 추가 구성 및 정보시스템 관리 보완 필요

○ 싱크홀 사고 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충분한 장비,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반복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배수시설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 차단을 위해 점검대상 확대, 품질점검단 보강, 점검시기 추가, 입주예정자 입회 등 품질점검단 운영 강화 필요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5년 상반기 국토부 혁신지구 공모에 철저히 대비하고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대상지로 부산시청 인근 지역 지정 검토할 필요

○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제2센텀선' 신설 추진 필요

○ 한국산업은행 이전 및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통과 지원 필요

○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운영 관련 문제 개선 및 부산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우선 육성 필요

○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관련 상위계획 정비 필요

○ 가덕도신공항 관련 어업 등 피해 현황 파악하고, 이주단지 조성 등 추가적인 이주 대안 마련할 필요

○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해 운영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고 기대효과 검토할 필요

○ 구덕운동장 등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향후 추진방향 발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추진할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책 및 피해건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할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필요

○ 부산시 발주 공사 현장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사례 사례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시 강서구, 대한토목학회, 부산교통공사의 의견 수렴하여 명지지구 지하화 가능한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부산도시공사 시행 행복주택 및 공공주택 부실시공 관련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통합광역교통청(가칭) 신설하고, 동남권 교통순환체계 개선 및 광역환승 체계 마련 등을 통해 850만 동남권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경남, 울산과 협력하여 노력할 필요

○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위해 연내 계약 체결 진행하고 활주로 방향 및 폭 검토할 것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자료 관리 및 공법보완 등 대책 마련 필요

○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위한 조속한 보상 절차·방안 마련 및 국토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 위한 노력 필요

○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 분석 필요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구·군과 조사 기법 등을 일치시켜 기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구·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사방안 및 종합적 대책 마련할 필요

○ 55보급창 주변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실시 및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공사 재개 전 오염 제거 필요

○ 가덕도신공항 개항 일정 및 재원 대책 관련 면밀한 검토 필요

○ 부산시 홈페이지 청렴도 자가진단평가 운영 방식 개선 및 부산시 ‘특정 페인트 사용 강제 의혹’ 감사 필요

○ 광안대교 무료화 이후 운영 계획 마련 및 시설공단 광안대교 스마트 안전진단 용역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백양터널 민자사업 추진 및 통행료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소멸위기 극복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주요 SOC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부산시

공무원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필요

○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김해공항 활성화 계획도 함께 검토할 필요

○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 및 이행강제금 추가 유예를 위한 시 차원의 건의 필요

모 전북특별자치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24. 10. 14. (월) 10:16~12:28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 (기관증인) 김관영 등 28인

○ 특기사항 : 국토교통 제2반

(2) 주요 감사내용

○ 후분양제 지속 추진 및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

○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및 연구용역 실시 필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필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1단계 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필요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전 마련 및 추진체계 개편 필요

○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관련해 산업용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 적극 제시 필요

○ 빈집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할 필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필요

○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대책 추진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적극 참여 필요

○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로 인한 정부측 지연 보상 촉구 및 정부의 전향적 입장 검토 필요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처리에 관한 엄격한 규제 및 관리 기준 마련 필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통과 및 정부·국회 설득 위한 노력 필요

○ 금융중심지 육성 및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계획 축소·지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빈집 처리 및 활용대책 마련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지역 설치 필요

○ 새만금 군산형 일자리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노력 필요

○ 이차전지특화단지의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차이 관련 대안 마련 필요

○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 비전 수립 필요

○ 새만금 사업 관련 소유권 문제 해결 및 사업 추진주체 단순화 필요

○ 새만금 남북 3축도로 적기 건설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위한 노력 필요

○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노을대교) 신속한 추진 필요

○ 새만금 국제공항의 성공적 완공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새만금신공항 활주로 연장 및 수요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전주~대구(동서3축) 고속도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전북~김천 횡단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전주~무주 고속도로 구간 기형적 구조 개선 필요

○ 저출생 관련 조직체제 정비 및 지역 특화 정책 검토 필요

○ 새만금 수변도시 내 공공시설 건립 예산 반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공항 적시 개항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 반영 필요

○ 새만금지역 기업 입주 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SOC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새만금산업단지 인근 복합방재센터 설치 및 의료시설 확대 방안 마련 필요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

○ 국토교통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해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주택 구입에 활용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택자금대출 규정 준수 여부 및 소속 임원의 자회사 재취업 기준을 점검할 것

【 국토도시실 】

○ 지역소멸 극복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후 국가산단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국정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할 것

○ 새만금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 공모 추진을 검토할 것

○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므로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앵커시설 신설을 추진할 것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지방국립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또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과 수도권 분리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 결과가 선도사업 또는 주요 사업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비수도권 노후주택·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뉴빌리지 관련 국비지원, 기금융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할 것

○ 용산공원 반환예정부지 임시개방 활용계획 수립용역 완료 전 임시개방부지 관리운영방안 수립용역·관리운영 대행용역 추진 문제 및 해당 용역들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적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

○ 용산공원 준공검사 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추진 관련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절차를 준수할 것

○ 석면 등 위험물질 제거 완료 전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을 보류하고 제거 확인 이후 재개방할 것

○ 용산어린이정원 토양오염 관련 정화 및 샘플조사 추진 검토 필요

○ ‘22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당시 집들이행사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할 것

○ 용산공원 부지 내 해병대 역사관 철거에 따른 舊해병대사령부 본관의 해병대 역사관 활용을 검토할 것

○ 의왕백운 PFV 민간 주주사의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통한 건설공사 이익 취득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할 것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선정 관련 부산광역시, 김해시 신청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內 설치 가능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경서3구역 연희자연공원 내 도로 설치 승인을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중 승마장 부대시설(실내마장, 마사 등)의 면적 제한 완화를 검토할 것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유소부지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할 것

○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추진을 검토할 것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대상 선정을 검토할 것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

○ 공동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개정할 것

○ 국가표준시방서에 의무화된 '방수·방근공사'를 조경설계기준에 반영할 것

○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 선정에 집중할 것

○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확대 및 아파트 옥상 등 태양광 설치 절차 요건에 대해 검토할 것

○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것

○ 일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을 재건축·보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획을 마련할 것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지정이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방치건축물을 매입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적인 건축사업 불황 상황에서 민간 분야 건축 설계·감리대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 포함에 대한 입장 및 2024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요건이 과도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부담 보완 및 생활숙박시설 PF(Project Financing)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에 사용되는 ECO2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거나, 제3기관의 검증을 받을 것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관련 ECO2 프로그램에 미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실내루버형 집광채광설비 등)가 ECO2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론 마련을 검토할 것

○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규모 확대 및 부적합률 감소를 위해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건축법」을 위반한 업체 처벌을 검토할 것

○ 샌드위치패널 공장 화재사고 관련, 건축물 지붕 등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를 검토할 것

○ 샌드위치 패널 관련, 복합자재 표준모델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다중이용 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건축공사 공정(자재

반입, 시공과정 등)에 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기록 관리를 공장·창고시설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 또는 단열 등 특정 부분을 패시브하우스로 시공하는 등 패시브하우스 활성화를 검토할 것

○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주차장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단열재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숙박업소 화재사고 관련 노후 숙박시설을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창호 하자 보완을 위해 사춤 시공방법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문시방서를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등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내 단열재 장기성능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반영할 것

○ 다수의 대안교육기관이 건축물 용도 문제로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정보 활용·제공을 위해 구성한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개최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읍·면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하시설물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 간 지하시설물 협력적 정보 공유·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

○ 적산토지 조사·환수 및 지적 주권 회복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전문기관에 의한 적산토지 실태 추가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조달청 등과 협의할 것

【 주택토지실 】

○ 사전방문 주체 명확화 및 전문업체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충분한 사전방문 기간을 확보하는 등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할 것

○ 신축아파트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을 강화하고, 점검시기를 확대하는 등 품질점검단 제도를 개선할 것

○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부실시공·부실점검 등 정황이 있으므로 '무량판 구조 긴급안전점검 보고서'를 재검토할 것

○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 기준 미달시 활용되는 보완시공 가이드라인의 대표성 확보 및 대량시공 가능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할 것

○ 일반 청약과 다르게 청약통장 및 자격 요건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가계부채 문제 관리와 아울러 저출산 해결의 키를 가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R&D 및 적용대상 확대·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는데, 최저가 낙찰 등으로 안전·품질보장이 어려우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충전시설 지상화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의무관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을 마련할 것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감사할 것

○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휴게실 설치여부 및 설치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단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

○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의 투자 및 위험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대체투자로 인한 1,800억원 손실, 대위변제 등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실적이 저조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들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융자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개선할 것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 4. 17. 시행)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이전 보증가입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유지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인정액 상향(10→25만원) 관련 청년 및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소득층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인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할 것

○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 관리비 항목을 주거급여에 포함, 청년 분리지급 대상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급여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주거급여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

○ 주거급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원을 추가 채용할 것

○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

○ 주거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해 주거비 측정지표(RIR) 등을 활용하여 사회계층별, 지역별 주거비 부담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 것

○ 청년 월세 지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소득 요건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정상거처' 등의 용어를 순화할 것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공급계획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재수립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법제화, 권리산정일 합리화 등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므로 근본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LH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2~3년 내 전 세대 시설개선을 추진할 것

○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비율이 56.6%에 불과하여 냉방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노후임대주택 냉방설비로 에어컨 외 다양한 방법(전열교환기, 환기시스템 등)을 모색할 것

○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정부안에 미반영된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당초 추정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 건설 사업 취소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청약 경쟁력이 떨어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 건설 사업 취소 이후 다시 사업이 재개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승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검단 21블록 관련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약통장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당초 추정 분양가에 맞춰서 분양가를 공급하는 방안 등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에 격차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을 발생시키므로 제도를 보완할 것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 달성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업무 확대에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것

○ LH 신축매입임대 감정평가액 산정 관련 감정평가 별 최대치-최소치 차이를 1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노후공공청사 활용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대책의 현실성에 대해 점검할 것

○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등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것

○ 공공임대주택 강력범죄 사전 예방 및 퇴거 조치 등 공공임대주택 내 강력범죄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보통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지원을 확대할 것

○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당초 약속한 분양전환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분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행정지도, 입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적으로 보증이 발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증발급 업무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조사할 것

○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부당이득취득,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되어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등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취소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예산이 수요 대비 부족하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리츠 운용사·투자출자자 및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의 집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기금운용계획을 큰 규모로 자체 변경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

○ 바닥공사 관련 하자기준 미비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실효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구입자금 보증 제한, 후취담보 제한, 방 공제 적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에도 국고보조금이 아닌 출자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직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거래 및 실거래 정보 등을 관리할 것

○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것

○ LH의 동파방지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시방서 개정 시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해 LH의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

○ 전세사기 예방 목적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24. 7. 10. 개정·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 LH의 경쟁력을 높여 LH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LH 혁신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LH 택지분양 실적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매각 토지의 원활한 건축 진행 및 대금납입·계약해지 등과 관련된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관련 선례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공시가격과 조세 형평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격공시제도 개편 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합의 기반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행위의 위법성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방안 및 공시가격 실명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되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 증액, 시장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스타트업 보호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업체 선정의 적절성, 정상적인 작업 진행 여부, 긴급 입찰 경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간 이른바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할 것

○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LH의 인력을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하자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협의할 것

○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의 선임 경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 등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

○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 공급 통계 오류에 따른 시장의 과열 및 혼란 등의 책임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

○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허위매물 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과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주택가격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므로 주택가격을 철저히 관리할 것

○ 주택가격이 서울·수도권에서 상승하고 지방은 침체·하향하고 있으며, 서울 안에서도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세대의 고액대출 부담이 증가하여 내수 진작이 어렵고 부정청약 10건 중 6건이 청년세대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핀셋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속도감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사업속도를 제고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른 지원방안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적극 모니터링하여 6개월 후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국회보고에서 확인되는 미비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FAQ 페이지에 등록 항목이 없으므로 개선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LH의 전세사기 지원 인력을 충분히 충원할 것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하자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며,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 및 공공위탁관리의 근거가 신설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

○ 주택 인허가 · 착공 실적 저조, 3기 신도시 추진 및 공공주택 공급의 지체 속에 디딤돌대출 등 각종 대출의 대폭 증가로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바, 주택공급계획 중 공공주택 부분을 법정화하는 등 정부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일관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것

○ 비수도권 지역 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달리 경제성이 부족한 도시가 많으므로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자체적인 도심 재개발 ·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재건축 · 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 주도의 택지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그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계획·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1인 가구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초소형 주택의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하여 초소형 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은 준공 및 매입 기한에 관계 없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영구적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것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지정 취소 및 일반분양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투명하고 신속한 조합 의사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전자총회 활성화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총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총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공문을 전달할 것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실제 부동산 거래가와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 보장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실성 있고 공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 '집주인임대주택' 사업과 같이 시장 흐름을 역행하거나 '층간소음 성능 보강' 사업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해당 예산으로 임대주택 건설 또는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제기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여러 차례 유찰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악성 낙찰자가 저가 낙찰 후 임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및 악성 낙찰자 관련 문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상 위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순위로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 등에게 납부한 금액은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 제외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 없이 발생한 비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경매차액 계산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귀책 없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하며, 감정인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원인, 경과 및 법리적 쟁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촘촘하게 보완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규정을 위반해 신규보증 발급이 불가능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에게 추가보증보험을 발급함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관계인들 간 유착 여부를 감사할 것

【 건설정책국 】

○ 우크라이나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등) 추진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감사원 감사 의뢰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통령실 관저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정한 조치 내용 확인 후 이를 보고할 것

○ 건설근로자 임금착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자지급시스템 이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현장개선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평택 물류센터 공기 연장과 관련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비 대위변제 문제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 관련 공사비,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시멘트, 콘크리트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국가기간산업(시멘트, 콘트리트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적정임금제 등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량 세굴 조사 의무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교량 세굴 조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BIM 정책의 목표 달성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BIM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건설공사 수주 보호구간 설정 후 현황 추이를 파악하여 수주 보호구간 설정 재연장 여부 등 수주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공공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한 공정 수주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할 것
○ 아파트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품질 강화 및 골재 이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콘크리트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의 갱신 및 신규 절차 진행에 있어 권역별, 기관별 성과 고려하여 조치할 것
○ 건설현장 지능형 CCTV 기술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및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 설계안전성 검토 결과 적기 제출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 미수금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 수주 목표 달성률을 철저히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폴란드 컨퍼런스 참석 사절단에 포함됨으로써 주가가 급등하게 된 삼부토건의 폴란드 컨퍼런스 참석 사절단 포함 이유 및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경로당 시설점검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교통물류실 】

○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고, 클렌징 조항을 전면 폐지하도록 조치한 후 택배사업자 등록을 허용할 것

○ 택배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과로사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배달 이륜차 유상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배달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 안전운임제의 안전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한 점, 대형 운수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전운임제 입법을 요구하는 노조 등을 설득하고 법안 심사 시 면밀하게 검토할 것

○ 동북아 물류 플랫폼(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계획 및 관련 특별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

○ 국제물류특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협조할 것

○ 과로사 문제, 분류 문제, 심야배송 문제 포함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과로 · 과속 · 과적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할 것

○ 제3자물류 육성 계획 수립, 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DTG자료 의무제출 시행 관련 운행실태 · 휴식실태 등에 대한 분석,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 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처벌 시기 유예, 계도기간 부여 등 점진적 · 단계별로 시행하며, 기계 · 설치비 · 통신비 ·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DTG자료 자동제출 방식을 도입하며, 과학적 분석과 현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1일 또는

주당 운전 총량제한방식을 개정하고, 화물차 휴게시간 관련 연구용역에 현장 의견과 이해당사자 견해를 반영할 것

○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배달종사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라이더, 국토교통부, 플랫폼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방안, 플랫폼사의 배달교육 홍보 협조방안, 기존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방안, 강사 인력 확충 방안 및 교육 장소 확대방안 등을 마련할 것

○ 배달라이더 무보험, 무면허 증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

○ 택배기사의 사고 및 재해 현황에 대해 택배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쿠팡 현장조사 부실 관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과도한 영세화물차 주선 수수료를 조정할 것

○ 택배파업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준수 범위 내 대체배송을 실시하도록 할 것

○ 물류취약지역 불편 최소화를 위한 위탁배송 허용 등 조속히 규제를 개선할 것

○ 적재불량 관련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태료 기준을 통일시킬 것

○ 사모펀드의 버스 준공영제 진입 후 차고지 매각, 과도한 배당 등 부작용

예방과 규제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등 다른 여객용 버스와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국민의 이동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고속버스 업계 재정 지원, 통행료 한시적 면제 재도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고속버스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고속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지정, 임의 개조 미검정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의 정확도 제고 등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 택시승차대에서 택시가 주정차 단속되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도입률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구와 건물이 과밀화된 원도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장 방안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난이 우려되는바, 기존처럼 자체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상 단위부담금 재검토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 등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차 화재 대책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화재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것

○ 버스기사가 정원 대비 약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명확화, 진입장벽 완화, 교육인프라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버스기사 양성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정책실 】

○ 공항 분야 전문성, 감사원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통보 등을 고려하여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 관련 사장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전직 차관이 사장으로서 부적합 인사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임명을 반대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양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그 법정이자 및 법인세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속히 상환할 것

○ 해양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의뢰 등 구체적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종사들의 운항 전 음주 적발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의 길이 및 주차장 면수를 증대할 것

○ 미탑승 여객공항사용료를 자동적으로 환불하도록 개선을 검토할 것

○ 티웨이 등 항공사의 지연에 대하여 제재조치 포함 지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연보상을 파악할 것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우세풍 방향을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현대컨소시엄의 수의계약 회신

기한 연장 관련 의도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 방향 검토와 관련하여 개항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 지난 추석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로 인해 혼잡도가 증가한바, 추후 공항 주차장 현장을 점검하고, 공항 주차장 이용 관련 정책은 해당 공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각 공항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장려 활동, 주차공간 확보 등의 정책을 검토할 것

○ 비행절차 변경을 포함하여 청라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할 것

○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이 국제선 총수요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 지역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정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결정에 앞서 우리나라 전체 국제항공 수요에 대한 검토 선행을 통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결정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목표치 설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 간 중간 역할을 수행할 것

○ 오물풍선, 드론 등 비행체 대응 매뉴얼 및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을 통해 증가된 슬롯을 화물수송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김포공항 관제탑 신설을 검토할 것

○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소음대책 재원분담을 개선할 것

○ 무수익 국제업무지역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것

○ 인천공항, 김포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조치할 것

○ 4단계 사업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적정 인력수급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산하기관의 광고구조물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하기관의 광고구조물 설치에 관한 계약실태를 점검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

○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의 북한 상공 비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적극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 타 지방공항이 청주공항 흑자 전환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에 대한 활주로 등 시설 확충, 노후시설 교체를 검토할 것

○ 지속가능항공유 중장기 혼합의무 로드맵 수립 시 혼합 의무화 목표치 상향, 단계적 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인정 기준을 반영할 것

○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 보급 · 사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사용 촉진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소멸 등 부당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것

○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7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

○ 외항사와 승객 간 분쟁 방지 및 외항사의 피해구제 노력 확대를 위해 관리감독할 것

○ 출국 · 환승 절차 시 마약류 단속 절차를 마련할 것

○ 항공정비 지연, 국내 처리 비중 저조 등 고려 시 MRO 관련 종합대책 수립 등 MRO 산업에 대해 확실히 지원할 것

○ 제주항공 등 정비지연이 많은 항공사에 대해 정비인력 및 여력기 확보 상황 등 현장 점검 강화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연·결항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항공사들이 통계 코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바탐 항나딤 공항 건설사업 참여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한도 상향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에 따른 적정 인력 운용에 실패하고 자회사 노조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빚은 인천국제공항 상생협력처장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

○ 가덕도신공항의 공사현장의 안전과 개항 이후의 안전을 위해 부등침하 우려, 활주로 방향 결정 관련 풍향 기상자료 오류 등 관련 제3자 검증 등 철저한 재검토의 조속한 진행, 신기술·신공법 개발 전폭 지원, 공동도급사 확대 등 개항 지연 우려 해소를 노력할 것

○ 해외 해상 공항 공사기간 고려 시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보이는바, 공사 일정 대안을 마련할 것

○ 자회사 본부장 임명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사개입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노선 확대 등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지방공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 드론 특별비행승인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한 검사 인력 증원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적극적·선제적 역할 수행, 국민과 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채 영부인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기준을 적용받음에 따라 여러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역대 영부인들에게 분리 비행이 이루어졌던 사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유명인 별도 출입문 이용 발표와 관련한 소홀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지방공항 건설사업은 더딘바, 인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차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김해공항 CIQ(Custom(세관),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력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것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수요예측을 재시행하며, 제주도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와 대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등을 보강할 것

○ 2025년 항공전문인력사업이 종료된바, 지속적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항공전문인력 지속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할 것

○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김해공항 등 보안 실패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침 등 구체적 규정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정된 지역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물류거점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승무원 휴게시간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경쟁 촉진 내용을 포함시키고, 항공기 지연 사유에 대하여 항공사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마일리지 사용 · 적립 · 소멸 세부현황을 공개하

도록 하고, 관련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항공사의 고의 지연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해고객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 조치를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이 마약이 진입되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약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수사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공항 입국장 인도장 확대에 대하여 중재할 것

○ 항공사 지연 피해 보상이 미흡하므로 보상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출 것

○ 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것

○ 경남 주요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 도로 및 철도망을 확충할 것

○ 우세풍과 김해공항이 사용하는 항공로를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방향 검토, 고도분리 적용에 따른 안전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기본계획을 재검증할 것

○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정서진로 연결로 신설을 검토할 것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빌리티자동차국 】

○ 자율주행기술 실증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할 것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 임기 제한, 특정 중재위원의 중복 선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북 완주 수소상용차 안전검사센터 구축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전기차 수입시 BMS 정보 제공 의무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차 BMS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도 제공받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형 통학버스 개발사업’ 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할 것

○ 자동차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수소 누출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시행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수소차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페달오조작방지 평가기술 개발 및 국내 기준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 자동차 민간검사소의 부정·부실 검사에 대한 제재처분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서 전기차 안전 관련 배점 확대 및 하부충격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의 교환·환불제도에서 소비자와 제조사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입전기차의 충돌 후 차량 문 개폐에 대한 규정을 국내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교통사고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대출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BMS 기술수준 표준화 및 BMS 정보의 차주, 제조사, 소방당국에 통보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무균·멸균 약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상 전시면적 확대로 인한 일부 사업장의 고충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운영을 국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차 포비아 현상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차 화재위험 등 문제 차종에 대한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개조 단속 확대를 위해 안전단속원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심의 시 전문심사기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차 배터리 정밀검사 의무화에 따라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진단기(KADIS)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입차제조사의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책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중국산 기술(커넥티드카)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나 기술적 검토를 고려할 것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제대로된 상용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

○ 중고차·부동산 직거래시 허위·위장거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자동차 초기 모델의 BMS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BMS를 활용한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정비업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정비사업

등록 취소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확대수리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의 의무에 ‘경미손상 수리기준’ 준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상환자가 인체상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고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이후 진료 미인정 또는 지급보증 중단 등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

○ 레벨4 자율주행을 위해 차세대 C-ITS 통신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위법행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역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및 미이행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차 화재지연 기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계획을 검토할 것

○ 법인차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등 편법사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면허 운전,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록제, 운전면허 확인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PM법안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배터리 실명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도입할 것

○ 육상운송 공제조합 등에 대한 감사 및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

○ 정밀도로지도의 조속한 구축·갱신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및 민·관 협업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로국 】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토지보상금) 의혹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2023년도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한 대로 제삼자 전문가 검증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것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에 추가하고 조안나들목-화도분기점 연결이 B/C 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것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동서 9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당초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 문제가 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변경안을 폐기할 것

○ 도로, 철도 등 건설시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것

○ 고속도로 밀도 측면에서 수도권이 지방에 2배 수준이며 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실행 모든 측면에서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계획에 소외된 부분의 반영을 검토할 것

○ 고가도로 밑 공간을 지자체 등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도록 할 것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 경찰청과의 노면상태 분류기준 일원화 이후에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도로 상황이 기록되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율할 것

○ IC 설치 비용 부담 관련하여 「도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및 기획재정부 훈령 개정을 검토할 것

○ 터널 내화지침 제정 이후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도심 관통 터널, 장주터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동백IC 설치를 조속 추진할 것

○ 과적 적발차량에 대한 분리운송 시설 확충 등 과적 문제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적차량 적발 관련 추적관리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화주, 운송사, 운전자의 관계를 고려하려 과적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모색할 것

○ 도성회 및 H&DE의 휴게시설 운영·배당과 관련하여 전관 문제가 심각하므로 향후 운영권 계약 연장 종합평가 시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손실 발생 원인 분석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 센터장 채용 시에는 2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서 상위 직위인 경영본부장은 40세의 경력에 논란이 있는 대상자가 채용된 점을 볼 때 임용 조건이 차이가 크고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특정 본부장이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용 설문조사 관련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센터 예산을 사용하는 등 갑질 문제가

심각하므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내부 감사가 잘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할 것

○ 재무건전성 악화 및 불량도로를 해결하기 위한 PSO 보전을 추진할 것

○ 신탄진 하이패스IC로의 신탄진IC 화물차 통행량 분산 방안을 강구할 것

○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 부적절한 위치, 수도권본부의 이중화, 특혜성 매입 의혹 등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의혹과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추진할 것

○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간 단순 구두 보고로 중요 업무가 추진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 체계를 정비할 것

○ 호남고속도로 광주 통과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 대구경북신공항 지원 고속도로 사업(구미-군위 신설, 동명동호-군위 확장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오송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 화재사고 중심 방재 지침에 침수사고 대응 조항이 추가되도록 방재지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중국산 강섬유 미승인 자재 사용 관련 조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문제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를 취소한 것에 대해 확인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감사가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 간 주요 SOC 사업(도로, 철도 등)과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 총 9,263억 중 전라북도는 1%만을 배정받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완하도록 할 것

○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에 대해 신속한 노선 검토 및 사업이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

○ 포항-대구·경북신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 사업의 도로망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안성) 사업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

○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동~안성시 공도읍 4차로 신설사업과 국지도 23호선 안성시 양성면~대덕면 4차로 확장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반곡(혁신도시) 4차로 도로 신설을 추진할 것

○ 도로파임(포트홀) 사고 피해 관련 일반국도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할 것

○ 고속도로 도로파임(포트홀) 관련, AI기반 포트홀 감지 시스템 작동 오류를 시급히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보수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 및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

○ 김해시 한림면의 원활한 이동성 확보를 위해 한림IC 진영 방향 추가 연결로 설치를 추진할 것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가 동김해 JCT 양방향 연결을 반영하여 2025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 「도로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조사·설계 권한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검토할 것

○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39호선 장수교차로 좌회전 허가 관련 민원 처리 경위 및 불허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할 것

○ 조명식 도로안내표지와 같이 반사기능 포함된 안내표지의 법제화를 검토할 것

○ 빗길, 결빙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구간에 대한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적극 확대할 것

○ 고속도로 특정구간 상습정체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운행제한단속원 단속업무 수행시 신분보장, 운행제한단속원 일원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국도와 지방도 졸음(휴게)쉼터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관련 건덕정(국궁 활터)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빙판길 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한산대첩교 건설의 반영을 검토할 것

○ 비탈면 IoT 시스템 등 재해재난 대응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도로법 시행령」【별표 3】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비고 2.’를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별표 1】의 ‘비고 1.’을 참고하여 개정할 것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계획을 재검토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및 사업비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전등록 및 납부 방식을 간편화 하는 등 스마트톨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운행제한단속원 이동식 근무조 근태 및 복무관리에 대한 카드·지문인식 등과 같은 디지털 출퇴근 방식으로 개선할 것

○ 고속버스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 방안을

검토할 것

○ 김해에서 창원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로굴착허가 시 지하매설물 인식표지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사업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유사하게 안전책임경영보고서 내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 관련 통계가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장비 구비 등 화재 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오재웅 본부장의 채용과정 및 경영실적 저조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를 실시할 것

【 철도국 】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등 국가 인프라의 지방투자를 확대를 검토할 것

○ 우리 철도가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 해외 진출 도모할 것

○ 도로, 철도 등 건설시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것

○ 신분당선 관련 연계철도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보전, 무임승차 관련 협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보전으로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열차권 노쇼(No-show)문제, 부정승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명절 기간 위약금 증액, 부가운임료 상향, 적발된 역 하차,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차표 불법예매 차단방안을 검토할 것

○ GTX-A 노선 연계교통 차원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솔빛나루역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

○ GTX-C 연장사업 국비 투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철도지하화 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철도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건축 제한 완화 등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로부터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가 두드러지고 생활권 단절로 주민 불편이 심각한데, 사업의 수익성, 시급성 외에 복합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경인선의 사업성 입증을 위한 적극적 컨설팅을 추진할 것

○ 철도지하화 사업 선도사업 대상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 구간(검단오류역, 왕길역) 반영을 적극 검토할 것

○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용산의 경부선, 경의선이 지하화될 경우 국책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도사업을 검토할 것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지에 경의중앙선 왕십리역 구간 포함을 적극 검토할 것

○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SR의 적자문제가 지속되는 등 경쟁체제의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저임금 문제, 코레일 자회사 직원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

○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제천역을 종점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태백선과 동해선 고속화사업과 연계할 것

○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철도 요금 인상, 적자노선 구조조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동대구역 광장에 관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공문, 고시를 살펴볼 때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주체는 대구시이며, 준공 후 소유권도 대구시가 갖게 되므로 준공 절차와 이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것

○ 동대구역 광장 준공검사 이후 소유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견 정리 및 역 광장 명칭 변경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를 준공검사 전에 마무리할 것

○ 오송역 누수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시설 관리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발전협력회의와 같은 상설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것

○ 현 온산선의 스마트 철도건널목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온산선 폐지 및 대체노선 건설 계획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코레일과 코레일 계열사 간 급여 차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제2경인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GTX-B 착공기념식 개최 이후 민자구간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 개통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

○ GTX-D·E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장항선·서해선 개통 후, ITX-마음 운행 증편을 검토할 것

○ 평택~천안아산~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조기 완공을 추진할 것

○ 트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철도안전법상 트랜짓몰 등 트램 일부 구간에 대해 보행자 통행을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부분 및 노면전차에 한해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완화하는 것에 검토할 것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개통을 추진할 것

○ 평창 휘닉스파크 곤돌라 운행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원인 및 보고 의무 등 위법성 여부 파악 및 유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KTX-1 대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023년 코레일의 코레일테크 감사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예산운용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및 감사계획을 마련할 것

○ 특별동차의 정의 등 기본적 사항은 공개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대통령전용기와 동일하게 특별동차 관련 별도의 훈령 제정을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 디젤기관차 소요량 대비 보유량이 부족하며 전시 등 비상대응 수요가 있으므로 신규 디젤기관차 도입을 지원할 것

○ 수서발 KTX-서울발 SRT 교차운행 추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

○ 「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방안처럼 로컬 관제를 중앙집중화하기보다 중앙관제와 로컬관제, 관제와 열차·유지보수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제사 역할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벽지노선에 대한 충분한 PSO 보상 지원을 검토할 것

○ 안전인력 확보 및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

조속히 승인할 것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오송연결선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최근 5년 간 주요 SOC 사업(도로, 철도 등)과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 총 9,263억 중 전라북도는 1%만을 배정받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완하도록 할 것

○ 당초 발표한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GTX-B 상동변전소 백지화 및 변전소 이전 설치를 검토할 것

○ 남부내륙철도 개통으로 SRT의 선로용량이 포화상태가 되므로 오리역을 포함한 SRT노선의 복복선화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 포항역에 조성되는 신설 주차장과 포항역 연결을 위해 설치하는 선상연결통로에 국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포항-대구·경북신공항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고속철도 중앙선이 태화강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GTX-C 덕정-수원 간 직통 열차 운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 적극 추진할 것

○ 동탄역이 설계가 잘못되어 GTX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잠실)-청주공항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동탄-청주공항 노선을 준수할 것

○ 예타중인 평택~부발선의 B/C값이 당장 나오기 어렵다면, 평택~안성, 안성~용인, 용인~부발 등 구간을 나눠 단계적 공사 착수 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내륙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유지 보수 다짐장비로 CRCC사의 JMTT장비를

도입하였는데 해당 장비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거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원주역 연장을 검토할 것

○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PSO를 지원할 것

○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착공을 추진할 것

○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미출자 차량기지를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철도 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신분당선의 높은 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철도 무단진입 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

○ 글로벌철도연수과정 관련 철도협회가 아닌 용역 발주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1차-2차 기관 간 교육사업비 차이로 인한 유학생 생활여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며, 교육사업 수행기관이 서울과기대에서 우송대로 변경된 과정을 점검할 것

○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철도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철도용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구간 송산~원시 구간 셔틀버스 운행비용의 지자체 분담 여부 및 급박하게 셔틀버스 운행 협약을 종용하고 있는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GTX-C 청량리 변전소의 입지 결정 과정의 적정성 및 대안 부지를

검토할 것

○ 경기도에서 김포골드라인 도시철도 증차사업비를 철도운영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지침상 철도차량 증차 비용은 철도운영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철도차량 신규증차 사업비가 철도운영비인지 시설투자비인지 검토할 것

○ 남부내륙철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

○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부평역발 1호선 급행의 증차를 검토할 것

○ 무임승차를 이유로 코레일 자회사직원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경강선(여주~원주) 철도운영계획 변경을 통한 원주역 연장 운행을 추진할 것

○ 동남권 광역철도(진영-울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후 국가 운영을 검토할 것

○ GTX-A 미개통 구간(삼성역 포함)을 서둘러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한남동 관저 정자 증축은 철도보호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전 관저 정자를 증축했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것

○ GTX-A 창릉역 준공이 기존 계획 대비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중인 2호선의 2인 승무제를 1인 승무제로 전환시 기관사 및 승객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

○ 철도경찰의 열차 간 승무 편차가 크고 우범 열차 중요도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승무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도록 개선할 것

○ 철도경찰 야간 승무의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가점 가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 GTX-A의 경우 완전 개통되면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백운역 남쪽 개찰구 신설을 추진할 것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관련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철거 등 대안을 검토할 것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추진단 】

○ 올해 10월 기준 공공주택 착공실적이 4천 호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목표 물량 5만 호가 차질없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 사전청약이 시행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사업관리 철저, 본청약 지연 여부 신속 통지, 분양가 상승 문제 해결 등 사전청약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등 입주 지연 피해를 입은 공공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점검할 것

○ 정부가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검토할 것

○ 정부가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의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8.8 대책) 발표로 부동산 투기, 지분쪼개기 등 위법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재검토할 것

○ 반도체소재기업인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AMAT) 오산 유치 관련,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오산시 간 혼선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 직후, 오산시의 부지 제외 요청이 거부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

○ 인천 검단 AA 21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청약통장 점수 복구 등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할 것

○ 인천 검단 AA 21블록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향후 시공사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할 것

○ LH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공주택에서 하자가 증가하고 있어 시공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2024년 착공목표 물량 대비 현재까지의 착공실적이 부족한데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보상 조기화 등 추진계획을 점검할 것

○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수상업체 중 부실 시공업체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사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GTX-A 창릉역 준공 지연에 따른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교통대책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법제화, 권리산정일 합리화 등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진행을 추진할 것

○ 빈집정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LH 공급 계획 물량 조절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회피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지방도시의 소멸 위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조치할 것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으로 지역은행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역교통 연결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부울경 지역 광역교통정책 컨트롤타워(광역교통청) 마련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약제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K-패스 예산 부족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K-패스 혜택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후동행카드와의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교통수단 확대를 검토할 것

○ 광역급행버스 신설 노선의 운행을 조속히 개시할 것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적기 개통되도록 노력할 것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의 차질없는 완공되도록 노력할 것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김포·검단 5호선 연장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

○ K-패스 회원가입 및 환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특례시가 포함되도록 할 것

○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가 부담을 검토할 것

○ 광역철도 운영 이원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통합건설운영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소철도차량 연료보조금 지원제도 마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것

○ 1층 전기버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검토할 것

○ 광역콜버스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

○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역철도 연장선 운영비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MaaS(Mobility at a Service, 통합이동서비스) 사업의 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직접 개발을 지양하는 방안 검토할 것

○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신속 추진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버스노선도 K-패스 적용노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LH가 진행중인 검단지역 도로개설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완공할 것

○ 광역교통계정 신설로 인해 LH 부담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할 것

○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의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 여부를 검토할 것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완료 이후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 건설 노하우와 역량을 각 지역에 대입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 과밀해소와 자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세종공동캠퍼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유수 대학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재원분담 비율을 유지하여 동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다 새만금개발청

○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 산업용지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방류관로 사업 관련 폐수 방류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및 점검시설을 마련할 것

○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관련 국외기업의 투자 지연, 인력 수급 및 정주여건 문제, RE100, 안전시설 미비 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공급 시설 구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용수 공급체계 및 하수처리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위탁사업의 과다 수의계약 체결 등 불투명한 사업절차를 시정할 것

○ 2022년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활용계획'에 없었던 '반환부지 수공간 특화 및 마스터플랜' 입찰을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 132억원을 전용하여 추진한 의사결정과정을 소명할 것

○ 매입임대 위탁관리 용역을 소수의 전관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바,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후 위탁관리 시 전관 특혜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 검단 21블록 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민 피해·불안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조치 경과를 국회에 공유할 것

○ 용산어린이정원의 토양오염 관련 임시 저감조치로는 아이들 활동을 위한 위해성 해소가 불충분하므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임시개방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건설임대주택 중 공급과잉지역 또는 인프라 부족 지역에 건설되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주택이 있는바, 실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

○ 본청약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 포기 및 추가 청약 기회 상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의 주거 질 제고를 위해 면적·채광 등 적정 주거기준에 맞는 건축기준을 마련할 것

○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임대아파트 40만여 세대의 주거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 추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또는 「주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반지하가구 주거상향 지원 가구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방안을 추진할 것

○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하자 급증 및 처리 기간 장기화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배분 비중을 재검토할 것

○ 부실 설계 방지를 위한 구조도면 대국민 공개 및 구조검증위원회 운영 등 LH 혁신안 준수를 통해 주택 하자를 방지할 것

○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등 주택공급정책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할 것

○ 정원 감축, 조기 퇴사자 증가 및 조직 사기 저하 등으로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품질관리업무 누수가 우려되므로 인력 증원 등 인력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관업체의 부당 수주 및 전관업체와의 유착 방지 등을 위한 LH 혁신안의 실질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전관 특혜·비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인식을 전환하며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

○ 공공주택 하자의 원인으로 화물연대 또는 노조 등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LH 사장에게 국가비전연구원 대표이사 및 한국교통기술사협회 고문 등 신고되지 않은 직위가 있는바, 겸직금지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

○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의 선임 경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 등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

○ 공공주택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 보호 및 경제성 유지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쟁입찰원칙을 저해하고 명목회사 설립 비용 등이 분양가에 전가되어 수분양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 2.)에 따른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축 매입임대물량 확대에 따라 LH의 재정부담 증가 및 매입주택 품질 저하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재원조달 방안 및 정책목표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

○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 미분양·미매각 토지 보유 등 경영평가 악화 요인 및 조직 사기 저하 요인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설계 대비 철근이 과다공급되었음에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감사 및 사법적 조치 등 대응을 할 것

○ 영구임대아파트 에어컨 설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 전환, LH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상황에서 LH의 주택공급 등 정책과제 수행 역량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것

○ LH 전세임대보증금 반환 사고 증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LH의 동파방지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시방서 개정 시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

○ LH 임대아파트 내 화재 피난용 공기안전매트 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익사업 시행에 협조한 협의보상 대상자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대상자 간 평균보상금 차이 및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등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공공공사 임금 직접 지급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의 도입률이 저조하므로 전체 현장 도입 목표를 수립하고 월별 이행률을 보고할 것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지체보상금 1,4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LH의 공공주택 공급 권한의 독점을 해소하고 감리·설계·시공 등의 상호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LH 혁신안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임대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등 전기차 장려 정책과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요건의 보유차량 가액 기준 간 상충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것

○ LH 공급 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예비전원 장치와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지 않은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및 영구임대아파트 노후복지관 시범사업 등 재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보 노력 및 국회 협의를 강화할 것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LH 주택공급 비중 개선 등 LH의 주택정책의 근본적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상주 관리자가 없고 입주자 민원 처리가 비효율적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반지하 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신청 수요는 있으나 대부분 심의 단계에서 거절되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 등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사업이 당초 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주택도시기금의 대규모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LH 수탁사업자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 LH 공공주택 품질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상용화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자가 심각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보수 및 긴급주거지원 제공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하여 정성평가의 부작용 해소 및 심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주민피해 고려 시 조기 보상 착수 및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험 분담 관련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 관리 효율성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주택의 호별 매입을 최소화할 것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높은 만족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

○ 용산어린이정원의 위해성 저감 조치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 적극적 안내 및 소명을 통해 우려를 불식할 것

○ LH가 관리하는 건설 현장의 외국인 건설노동자 증가와 관련하여 안전 및 의사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구제기관의 요청에 따른 민원 해결 외에도 자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민원 대응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공공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 경상남도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토양정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뉴딜사업이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것

○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 종합타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종합부동산세 과오납 및 사업비 오지급 사례 등 관련, LH 지역본부 재무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LH가 건설하는 장애인 우선공급 아파트에 주거약자 친화적 월패드 구축 및 점자유도블록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것

○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의 혜택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공동체 형식의 은퇴자 주택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활용 유인방안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거급여 현장 조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사대상 가구 사전정보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의 자연적 유수 기능이 소실되므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대체 유수 시설을 구축할 것

○ 수도권에 편중된 도시주택정비사업이 지방 소도시 주택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 방안을 검토할 것

○ 감리사업자 선정과정에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참여한 사업의 부실 여부를 점검할 것

○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민간사업자와의 공급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할 것

○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유관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방치 중인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면밀히 관리할 것

○ 신축 매입임대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실수요지 면밀한 검토 및 매입약정 후 약정 해제·해지 물량 최소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용인하갈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공공임대주택 중 고액 관리비 부과 주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입주 자격 요건을 상회하는 고가 차량 보유 사례가 있으므로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 명지지구 폐토사를 비롯하여 LH가 전국 각지에 적치한 폐토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형공사 입찰 시 스마트 건설기술 이용을 조건으로 사업 수주 후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계약의 불공정성 및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

○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사업 발주자가 원청업체의 동의가 없어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

○ LH의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울산광역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산업로 접속도로 사업 추진 지연 및 지하차도 공사 장기 중단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품질미흡 통지제도의 사각지대 확인 등 품질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 및 전문적 추진을 위해 LH의 해외사업 기능 회복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건설임대 소형 평형 주택은 주거복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가 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개선 등 소형 평형 공급 정책을 재검토할 것

○ LH 혁신안에 따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재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 인천 검단 21블록 부실공사 관련, 구조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 기준 부재,

계약상의 부정, 감리업체의 문제 은폐 관여, LH의 증타보강 공법의 안정성 미검증 등의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

○ 인천 검단 21블록 부실공사 관련, 부실 인지 이후 입주예정자에 대한 거짓답변 및 기만, 일방적인 건설정상화 추진 및 책임 전가 등의 행태에 대해 소명할 것

○ 공동주택용지 판매 실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판매 전략과 토지연체대금 중점 관리 방안 등 LH의 재무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 임대주택에 품질미흡 자재(KS 미인증)가 사용된 것 관련, 사용업체에 대한 조치와 LH 승인이 필요 없는 신고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제도 개편 상세 안내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역교통계정 신설 시 LH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LH 양산 사송 택지개발지구 주변 고리도롱뇽 영구서식지 보존 방안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 관련,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품질 정기조사 및 주택 가격 확인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평범한 은퇴자를 위한 주거정책 관련 법적 제도 마련시 LH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 9. 10. 개정, 2024. 11. 11. 시행) 전 LH로부터 주택매입 불가 판정을 받아 대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을 하고 경매 차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기간 연장, 금융 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 자율 선정 제도에 따른 LH 브랜드 활용

저하 관련, 기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의 형평성, LH의 공적 정체성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LH 공공주택 품질의 획기적 개선 및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를 실시할 것

○ 미분양 매입확약 관련,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 및 수요부족지역 공급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 방지 대책과 아울러, 건설원가 수준의 매입 확약가율 설정 및 수요자 대상 세제 혜택 등 예산 낭비 및 미분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2021년 제1차 LH 혁신안의 징벌적 제도에 따른 임직원 사기 저하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 LH 혁신안의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체제 도입이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LH의 공적 역할 축소를 유발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

○ 공공주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도심 공공복합개발 관련 사전 검토자문단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현실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 입주권 전매허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를 검토할 것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며 근거리 배정 원칙을 실현할 방안을 강구할 것

○ 통합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의 소셜믹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집, 청년창업센터 및 주민 커뮤니티의 운영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통합 공공임대아파트의 청년창업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LH가 커뮤니티 센터 입주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관리공단 및 LH주거복지정보의 젊은 직원 퇴사율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LH주거복지정보의 채용규정 상 범죄이력 정보 수집·동의 관련 사항을 현행 제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책과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임대동 혹은 임대단지가 함께 있는 단지의 도심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관련 대응 체계와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대토용지에 지구계획 변경 또는 토지공급·사용시기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토지주에 변경내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공정한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등 대토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 관련, 양질의 주택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료 체계 개선 등 자구노력 강화 및 임대주택 운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현실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대외 신인도 상향 대책을 마련할 것

○ 상위 규정 및 내부 복리후생제도 기준을 초과하여 임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택융자금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거주 청년의 양질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소형 평형의 행복주택 공급 정책을 재검토할 것

○ 장기임대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사전 하자 점검을 내실화하고 하자 적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LH 공급 주택 거주자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및 주민들의 응급 대응 능력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 되도록 국민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LH의 책임과 권한 간의 균형 및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 분산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수사상황과 결부하여 지급 보류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의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LH 임대주택 관리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임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LH 건설현장에 납품된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의 투수계수가 품질기준에 미흡할 경우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

○ LH에서 추진 중인 파주운정3 A47 행복주택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사후관리체계 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마 한국도로공사

○ 기후위기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할 것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대비 2023년 경제성 조사 시 교통량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부 노선 현장 방문 등 출장 문서 부재에 대해 개선을 추진할 것

○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설계기준 미달 노후교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마련할 것

○ 차량의 과적 단속 및 해소를 위해 분리운송 조치를 위한 부지 마련, 시설 확충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차선도색공사 불량 도료 사용 및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지하수 사용과 관련하여 연수기 사용 등 보다 높은 수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 산업재해 사망자 목표 수정과 관련하여 통계 왜곡에 대해 시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휴게소 야간운영 및 휴게소 관련 계약 체결 시 야간 인력충원 방안을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야간운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유류구매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알뜰주유소 이익 증가 문제를 개선할 것

○ 알뜰주유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것

○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임원 등에 대한 월급이 과다하고 장학금 배당이 적은 운영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 통행료의 고액, 상습체납 문제가 심각하므로 강제징수 절차 개선, 고지서 발급방식 개선 등 미납통행료 감소 방안 및 부가통행료

집행률 저조 문제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스마트톨링 관련 개인정보 수집, 미납률 증가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청과의 노면상태 분류기준 일원화 이후에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경찰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도로 상황을 기록할 것

○ 점유율 저조, 투입비용 과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문제 등을 고려할때 EX선불카드 사업 폐지를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 전임간부가 레이더식 돌발상황검지시스템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시방서 준공기준이 완화되고, 도로교통연구원은 완화된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능평가 검증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

○ IC 설치 비용 부담 관련하여 「도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및 기획재정부 훈령 개정을 검토할 것

○ 터널 내화지침 제정 이후 장주터널 등 지침이 적용 되지 않는 터널에도 적용되도록 점검할 것

○ ACC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AI 기반 도로파임 탐지기기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탐지기기 실효성 점검 및 정책을 전환할 것

○ 안전순찰원 단속권한 부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안전순찰원 차량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것

○ 수원신갈IC 진입부(서울방향) 확장을 추진할 것

○ 동백IC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

○ 소형 적재불량 차량에 의한 낙하물 사고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절차 개선 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휴게소 임시운영 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업체 선정 기준을 정립할 것
○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 지불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관리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용요율 인하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미승인 자재(강섬유) 반입에 대한 자재관리 및 검증 부실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업체 조치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적차량 적발 관련 추적관리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
○ 도성회 및 H&DE의 휴게시설 운영·배당, 민자휴게소 감사추천 조항, 휴게소 재계약 평가와 관련된 이해충돌 소지 등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 개선을 위해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의 재취업 심사 대상 확대, 계약 체결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대상 확대, 퇴직자 DB구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임대휴게소 대비 비싼 민자휴게소 음식값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음식가격 공시제도 운영 등 공공서비스 개념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화재 관련 전수조사 및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안전성과 평가 기준 및 배점 제도개선, 안전신문고 활용도 제고, 현장 점검 강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흥IC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센터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인데 한 곳이라도 선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 재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장기 체류차량 현황,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재무건전성 악화 및 불량도로를 해결하기 위한 PSO 보전을 추진할 것
○ 고속도로 밀도 측면에서 수도권이 지방에 2배 수준이며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및 실행 모든 측면에서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계획에 소외된 부분을 반영할 것

○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로의 추진 등 원활하게 영동선 확장사업·소래IC 설치가 추진되도록 할 것

○ 주택지원에 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기간제 센터장 채용 시에는 2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서 보다 중요 직위인 경영본부장은 40세의 경력에 논란이 있는 대상자가 채용된 점을 볼 때 임용 조건이 차이가 크고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점, 차선도색 도료 수의계약 중 여성 기업인 대표를 세워서 수의계약을 수월하게 하려는 사례가 발견되는 점,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

○ 김해시와 협의하여 한림IC 설치를 추진할 것

○ 스마트톨링으로 차선이 감소할 경우 도로 상부 개발 여건이 조성되므로 주민들의 주거권,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상부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발주공사 업역규제 철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는 발주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당 유류구매 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이 미온적이므로 재검토할 것

○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및 현재 환매권을 통지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주차장, 고속도로 상부 태양광 패널 등 고속도로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것

○ 현장지원직 임금 차액 소송 관련하여 1심 패소 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현장지원직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

○ 울산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부산-울산선 청량IC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및 고삼호수휴게소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개통식은 안성에서 실시할 것

○ 고삼호수휴게소 외부 연결 보행로 설치를 적기에 추진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 신탄진 하이패스IC로의 신탄진IC 화물차 통행량 분산 방안을 강구할 것

○ 주말할증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

○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 부적절한 위치, 수도권본부의 이중화, 특혜성 매입 의혹 등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의혹과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추진할 것

○ 수도권본부 추가 필요성 불분명, 인원 계획 미확정된 상황임에도 추진한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을 재검토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추진할 것

○ 통행료 과오납금 미환불금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호남고속도로 광주 통과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광주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

○ 다봄CCTV 규격기준 변경 관련 문제, 이와 관련된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 및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승진,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해당 CCTV의 낮은 품질 등 다봄CCTV 사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

○ EX선불카드 유보금 환불이 가능함을 통지할 것

○ 현장지원직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할 것

○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 및 임대휴게소 임대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 자회사의 부채 등을 고려하여 열악한 계약조건을 개선할 것

○ 휴게소 수소충전소 확충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고속도로 터널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보완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관련 법령 개정 및 과업지시서 개정 등을 통한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지원을 검토할 것

○ 불요불급한 임원 해외 출장 문제를 개선할 것

○ 합리적인 포트홀 피해배상 방안을 강구하고 포트홀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에너지숲, 미세먼지 차단 숲, 태양광 발전사업 등 ESG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

○ 노후휴게소 재건축, 리뉴얼 관련, 계량화된 종합적, 객관적 지표에 따라 재건축, 리뉴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관련 계획 수립 시 예산 소요 등 휴게소 운영 시 발생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테마형 휴게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종합적 진단을 통해 휴게소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대구경북신공항 지원 고속도로 사업(구미-군위 신설, 동명동호-군위 확장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차선도색과 관련하여 도색공사가 진행된 구간 다수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조치가 필요하며, 도색 구간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흡연자의 쾌적한 이용과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스마트흡연부스 도입을 검토할 것

○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유류 부정구매, 수목원 공사비 과다납부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기관 차원의 쇄신안을 마련할 것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이-천안 확장사업 반영을 건의할 것

○ 공사손해보험 간접계약으로 보장이 부실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사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열선 관련 시방서가 법규에 위반되고 특정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보이므로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

○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 및 휴게소 운영업체 입찰 시 새로운 업체의 진입장벽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 여주·횡성 휴게소의 경우 임시운영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운영 과정의 문제로 휴게소 입점업체 및 거래 업체에 큰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 회복 상황을 관리할 것

○ 안전성이 높지 않은 PE울타리 설치 현황 파악 및 보다 안전한 방호울타리로의 교체 등 차량방호 울타리 관련 안전성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

○ 알뜰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지침 개선 등 석유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 알뜰주유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류비 인하 방안과 과도하게 비싼 기름을 팔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실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견인차의 고속도로 진입과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드론 활용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 관련 재개 방안을 마련할 것

○ 빙판길 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기술도입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터널 내 재난방송 청취 불량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벌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내실있게 관리할 것

○ 견인업체 난폭운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전향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긴급견인서비스 관련 업체선정과정의 불투명성, 견인업체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바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과 SR 앱이 분리되어 환승할 때 열차 이용시 국민 불편이 심각하므로 앱 통합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관광개발 파견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실전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등 고객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건설 사업에 편입된 부지의 소유자로서 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명절승차권 경로우대 예매 후 타인이 승차하는 편법, 매크로 불법 예매 및 암표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

○ 노쇼 위약금 증액하는 방안, 평일과 명절·주말 기간에 위약금을 구분해서 부과하는 방안, 부정승차 부가운임료 증액하거나 적발된 역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방안 등 노쇼와 부정승차 관련 다양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반환 승차권 신속 재판매 시스템 도입, 코레일톡 예약대기 기능 개선 등 명절 승차권 노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특사경 단속 권한 부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 등 암표단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최대 수요전력 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철도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철도용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출근시간 익산 출발 상행선 운행계획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주말과 명절에 경부선 대비 호남선 열차운행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열차운행 불균형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기관사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징계 기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

○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도록 법률에서 의무화했는데 하위법령에서

법률을 사문화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

○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는 기관사 인권 침해 소지를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것

○ 철도 시설물 하자보수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계열사 직원들의 이동권 해결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서에 근거 마련 등 개선을 추진할 것

○ 코레일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 운임인상, 용산 역세권 토지매각, 코레일·에스알 통합, 적자노선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종합해서 검토할 것

○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 출제 관련 과업내용서를 수정하고, 검수도 제3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수정할 것

○ 철도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인력 체계 혁신을 비롯하여 인력 관리,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활동 수준평가 3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있는데, 안전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장기 단체계약의 폐해를 감안하여 빠르게 폐지할 것

○ 철도의 화물 분담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성과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열차 내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철도시설, 승객,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 철도차량 납품지연(EMU-150) 관련 업체에 계약해지나 입찰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납품 지연을 한 열차 제작업체가 입찰을 받아 납품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전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서대전역 고속열차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직원들의 점유이탈물횡령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징계 수위를 상향하는 등 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

○ 국산 신호시스템 상용화 및 효율적 신호시스템 교체를 위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TFT구성 등 협업을 추진할 것

○ 구로역 사고 관련 재발 대책으로 작업계획서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작업구간의 이웃 선로까지도 열차 운행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코레일테크가 주 6일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주 5일 근무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 중인 일산선 등 4개역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법」제38조 단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자회사 설립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코레일에서 출자회사에 임원 등을 추천할 때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임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역사 중국산 CCTV 보안 문제 우려에 따른 CCTV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신속하게 교체할 것

○ ITX-청춘 마석역 추가 정차, 상봉-마석 셔틀 전동열차 조기투입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

○ 금천구청역사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주차장 부지 제공 등 금천구청과 적극 협조할 것

○ 금천구청역 경부선 급행열차를 증차하고 필요시 추가선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통합환승시스템이 지장받지 않도록 티머니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감정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할 것

○ 부정승차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오송역 누수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시설 관리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들을 도입 활용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

○ 과잉 의전 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가산디지털단지의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빠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자회사와 협의할 것

○ 여행사의 꼼수 판매의 미끼 상품으로 이용되는 상품석에 대해 과다 할당을 개선하는 등 상품석 운영을 재검토할 것

○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구로역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노사 합의 사항을 규정에 반영할 것

○ 장애인 전동휠체어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휠체어 사용자와 보호자의 열차 동승 관련 좌석 위치 선택, 승차권 예매, 관련 홍보 및 만족도조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므로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대상 지방 열차여행 프로그램 관련하여 지방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전동열차 무정차 통과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 지연 안내 오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괴동선 및 군산항선 전철화 사업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

○ 동행자 마일리지 사후적립관련 홍보강화 및 사후 적립 가능기간 도과한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인덕원~동탄 116번역(가칭 메타폴리스역)을 급행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

○ 차량기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 매뉴얼 마련, 유해물질 측정, 작업 환경 조성 등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 지코비(GKOVI, 열차 내비게이션) 도입을 추진 중인데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구로역 사고 관련 지코비 및 LTE-R 무전기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

○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 열차 여객승무원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 명절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이벤트가 통일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철도 승차권 악성반환 대응을 위해 환불 수수료 차등화, 일정 횟수 이상 예매·반환 제한제도, 사전예매 개선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KTX-1 대체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안전 대책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분석할 것

○ 호남선 KTX 증편과 관련하여 선로배분 문제를 통한 호남선 증차에 대해 차기 선로분배위원회에서 호남선 증차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

○ 부산 차량기지와 인접한 DRMO부지 내 차량기지 건설이 검토 중인데 관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지체되는 바 고속철도차량의 안정적 정비를 위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광주송정역 광장을 5·18사적지로 지정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광주시, 광산구의회 등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위탁하는 주차장에 코레일네트웍스 주차관리요원의 무료이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본사-자회사 간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 운영 중인 광주송정역 주차타워 부실 공사 민원이 지속되고, 주차장 설계, 주차관리원 휴게실 등에서 문제를 보이는데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 운영 중인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하자발생 상황, 직원 복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약관 변경 등을 통해 2시간 이상 지연 고객에게 100% 보상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K-철도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된 철도기술과 노하우로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등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복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저조하는 등 윤리경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비효율적인 동력차 승무원의 인력 운용체계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 신입사원 채용시 민감한 신체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책 마련하여 관리할 것

○ 특별동차의 정의 등 기본적 사항은 공개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대통령전용기와 동일하게 특별동차 관련 별도의 훈령 제정을 검토할 것

○ 병가 시 진단서 확인, 연 누계 일수 관리에 대한 규정 개선 및 근태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 철도시설물 검측시스템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부 상용화가 되었으므로 국내입찰을 진행할 것

○ 디젤기관차 소요량 대비 보유량이 부족하며 전시 등 비상대응 수요가 있으므로 신규 디젤기관차를 도입할 것

○ RE100 계획을 세우는 일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철피아 문제는 특정 학교 출신의 파벌 형성, 코레일 출자회사 및 철도 관련 사업체로의 낙하산 재취업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철피아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시율 홍보 시 UIC기준보다 고객서비스 헌장에 따른 기준의 정시율을 사용하고, 고객서비스헌장 기준 정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 수서발 KTX-서울발 SRT 교차운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코레일 부채 해결을 통한 대국민 혜택 제공이라는 목표를 되새기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성남에서 여주를 왕복하는 경강선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열차를 증량하는 등 혼잡도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 舊 원주역사 개발 사업 관련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간 토지교환 협의가 지연되어 진행이 더딘 상황이므로 각 기관 및 원주시 간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

○ 인력부족과 업무 과중을 이유로 휠체어 서비스를 축소한 것은 교통약자 배려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총괄 관리자 배치를 통한 효율적 운영, 인력 충원 및 공공근로 차원의 지자체 협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서비스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것

○ 100% 비대면 예약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을 제약하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강구할 것

○ 신규노선 전기분야 유지보수업무 위탁을 추진 중인데 유지보수의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자에 대해서도 육아기 단축근로를 적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것

○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인력 감축 계획의 적절성을 재점검하고 인력 감축이 산업재해 유발 요인이 되지 않을지 여부를 분석하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해결 계획을 마련할 것

○ 철도기관 간 소송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의 사전 해소 방안 및 갈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열차(EMU-260) 입찰시 평가기준이 변경되어 고속철도차량 제작 경험이 있는 대기업만 단독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대표가 안전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것

○ 유지보수업무 관련 미정산 금액 대비 국가 투입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철 역사 공기질 관리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지진위험지역 감지기를 확충할 것

○ 화차 형식승인 기술 기준을 통일할 것

○ 출퇴근 시간대 4호선 혼잡도 개선에 대한 열차 추가구입 및 급행열차 도입을 검토할 것

○ 대륙철도 운행 준비 관련 향후 CCR/TCR(중앙아시아 경유철도) 개통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양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법정이자 및 법인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

○ 해양경계시설 보강사업 대납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의뢰 등 구체적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목표치 설정 및 달성계획을 제출할 것

○ 다중밀집 상황 단계별 매뉴얼 준수,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기준 개선, 대응훈련주기 단축 등 면밀히 관리할 것

○ 여객 수요 및 여객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혼잡도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것

○ 과잉경호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팬미팅, 홍보촬영 관련 경찰단과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업 체제를 유지할 것

○ 유명인 전용 출입구 발표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용기준 마련 등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완할 것

○ 다중밀집 대응과 관련하여 유명인 전용 출입구 운영이 아닌 출국일정을 알리지 않도록 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오물풍선 등 위협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EO/IR 장비 활용 등 자체 대응책을 강구·실행하며 군·안전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대응할 것

○ ESG 기부금 관련 기부금의 특정지역 집중, 인천하늘고등학교 지원 등과 관련하여 기부금 관리·집행을 공적인 위원회나 재단을 설립하여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장년층에 대한 홍보 등 스마트패스 활용률 제고 대책을 강구하고, 오류 저감 방안을 마련하며,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 승무원 출입구 관련 개선대책 마련을 서울지방항공청과 협력할 것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임대료 분쟁 해소를 노력할 것

○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제선 수요 및 지역 균형발전 관점을 고려하여 5단계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지방공항과의 상생을 노력할 것

○ 해상·항공 복합운송체계 활용을 통해 환적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화물수송용 슬롯을 확보할 것

○ 정상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한 사건이 발생한바 보호구역 출입증에 대한 단계별 관리, 보호구역 출입 교육·시험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면세점, 상업시설, 항공사 등의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관리할 것

○ 해외파견 인력 자녀 학비지원 관련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초과액 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승인 절차를 마련할 것

○ 무수익 국제업무지역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터미널 재배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인천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 내 불법시설 및 소화전 주변 물건 적치에 대하여 시정할 것

○ 필요 보안인력 규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자회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정 인력을 확보할 것

○ 자회사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자회사의 인력충원계획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 4단계 확장 사업 완료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회사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자회사 노조가 요구한 증원을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할 것

○ 자회사의 과업범위 및 적정인력 규모가 노동자의 노동강도 및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단계 개항에 따른 과업범위 및 적정인력 검토 과정에 있어 자회사 노사,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 · 투명성을 확보할 것

○ 4단계 사업에 따른 적정 인력 운용에 실패하고 자회사 노조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빚은 상생협력처장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

○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모 · 자회사 노사 공동 이슈 발굴, 상생협력 등을 위해 모 · 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승인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자회사 본부장 임명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사개입을 개선할 것

○ 3개 자회사가 수행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에서 제시된 관리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식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할 것

○ 자회사 분리에 대하여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 신설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자회사 직원 선임을 검토할 것

○ 공항 내 보따리상의 무단 적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내 전시 · 공연 관련 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

○ 주차 공간 부족 해결책 및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 관련 공항 내 입점한 타 업종과의 형평성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부내륙의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직행버스 적자 보전을 통한 인천공항-지방 간 버스 노선 운행 재개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중교통 이용 쿠폰 제공 등 주차장 수요 저감 방안을 검토할 것

○ 직원 행사 시 경품 과다지급 등 방만경영을 개선할 것

○ 적절한 임대료 정책과 환승객 유치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환승객 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자기부상철도 철거에 대한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MRO 관련 지역공항과 상생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 하늘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도로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 장봉도 주민들의 소음피해 구제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긴밀히 소통할 것

○ 보안검색 관련 신속성과 정확성은 상충되는 가치이므로 신속성을 가점 항목으로 구성하거나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하여 분리평가할 것

○ 보안업무 중 인적오류 발생에 대하여 공사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것

○ 직원들의 공사 차량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차량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인1조 의무규정에 관한 안전조치 내용을 개선하고, 법정 의무규정을 누락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한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

○ 입국장 인도장의 인천국제공항 도입 관련 정책의 일관성, 공간의 한계, 입국장 혼잡도 증가, 마약류 관리 등을 고려하여 반대할 것

○ 연결, 정비,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 개선 등을 통해 지연율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드론 피해 조기 차단을 노력할 것
○ 인천하늘고등학교 고위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학교를 다니는 문제, 행정실장의 갑질 문제 등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불용처리한 총기 폐기를 총포사에 대행하였으나 폐기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통해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 등 총기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이 마약이 진입되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회사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에 대비한 시설 보강 등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 면세점, 식음료점 등 입점업체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휴식공간 현황을 제출하고, 차별없이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휴식공간 확충계획 수립을 통해 휴식공간을 확충할 것
○ 면세점 내 물류창고와 매점 간 거리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므로 입점업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공항 내 입점업체 직원용 셔틀버스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개선할 것
○ 금지행위에 승인받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해외사업 누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손익계산 처리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
○ 공항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항공보안 규칙을 보완할 것
○ 바탐 항나딤 공항 건설 참여 관련 공정률과 수익 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기업 추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

아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자료를 제출할 것

○ 한국공항공사 사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항 관련 전문성 없는 후보를 1등으로 추천한바, 낙하산인사 · 보은인사에 대하여 재심사하고, 1등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임기만료된 상임이사의 선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할 것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 근절을 위하여 시스템과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공항 적자 문제 및 노후시설물 교체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절차 이행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정한 원상회복 기간을 부여하고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것

○ 교신 오류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충돌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활주로 상태 표시등과 같은 장치를 도입할 것

○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소음대책 재원분담을 개선할 것

○ 김포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페루 친체로 공항 건설 PMO사업 관련 공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 지난 추석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 정책 시행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미탑승 등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할 것

○ 주차 공간 부족 해결책 및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자회사 직원의 근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력 산출 시 법정 휴게시간 외 생리현상 처리시간, 작업준비시간 등 여유시간을 반영하는 등 보안검색요원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 오물풍선 등 위협 관련 군·안전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대응할 것

○ 여객 수요 및 여객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혼잡도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것

○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국제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컨세션 확대 유치를 통해 매출액 증대를 노력하며, 그 밖의 공항의 흑자 전환을 위해 집중관리할 것

○ 장기간 사용료 동결로 인해 저하된 수익성 및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할 것

○ JDC 지정 면세점 영업요율 인상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JDC 지정 면세점 포함 입점업체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결, 정비,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 개선 등을 통해 지연율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법 드론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

○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등 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주공항 매출누락 관련 매출 증빙방식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특정사업자의 다수 상업시설 운영 제한 등 임대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정비할 것

○ 청주공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새만금신공항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항운영계획에의 반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것

○ 특수차량 운전자 보조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공항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 내 광고물 설치·운영 업체들에 대한 무단 점유료 부과 관련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결정 불수용과 관련하여 갑질 논란

해소, 준법경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자회사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면세점, 식음료점 등 입점업체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휴식공간 현황을 제출하고, 차별없이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휴식공간 확충계획 수립을 통해 휴식공간을 확충할 것

○ 면세점 내 물류창고와 매점 간 거리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입점업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공항 내 입점업체 직원용 셔틀버스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개선할 것

○ 공항에서 운용하는 특수목적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 금지행위에 승인받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공항소음대책으로 매수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매수 시 토지 · 건물 전체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노력할 것

○ 공항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항공보안 규칙을 보완할 것

○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에서 지난 7월 대체근로자를 명시한 근로변경서 제출 시에만 근무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 주차 · 안내 분야 근무를 3조2교대 형식으로 개선할 것

자 한국부동산원

○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같은 기간 동안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가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바, 통계작성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공시가격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HUG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서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하반기 입주예정물량 발표가 지연되었는바, 향후에는 예정된 기일에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혁신도시 이전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은행 이용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제도를 개선할 것

○ 온라인 플랫폼상에 게재된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수행 관련하여 사각지대 발생 등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할 것

○ 허위매물 모니터링 담당인원을 확대할 것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담당인원을 확대 검토할 것

○ 청약제도에 대한 사전설명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비 검증제도 관련 접수기간 지연, 구속력 부재, 낮은 신뢰도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오픈 이후 실거래 공개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감소하면서 편법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성년자 주택구입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약홈 서버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 단위 조사를 폐지하고, 월간통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공급실적 통계 오류가 있었는바, 통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 작성 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약 당첨 안내 문자 허점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 가능성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지원 기능 중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 민간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보증하는 '일부보증'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보증 홍보, 전세계약 전 상담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 거절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직선순환 직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므로 인력이 부족한 현업 부서로의 충원 등 보직선순환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주거안정 정책과 관련 없는 용도의 지출이 과다한 주택도시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기금운용에 대해 협의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서민을 위한 지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악성임대인 추적 관리, 명단공개 개선,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10채 이상 임대인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보증사고가 일부 임대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임차인과 보증 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 상태, 상환 능력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금대출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 모두 적격 판정을 받는 등 대출 심사가 부실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급증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므로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 감정평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미회수금이 급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자본 감소, 대위변제액 증가, 채권 회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출자, 증권 발행 등 긴급 대책을 항시 준비할 것

○ 임대보증금보증을 악용하는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회수제도를 개선할 것

○ 상습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후에도 상당수의 임대사업자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상황이 양호해지면 기금대출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증한도에 월세를 제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허점으로 초호화 주택 거주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세보증금을 재산정할 것

○ 다주택자 및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보증발급으로 인해 사고율이 급증하였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부영이 분양전환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퇴거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비공익적인 행태를 보이므로 기금 대출 회수 등 조치를 검토할 것

○ 악성임대인 지정 이후 추가보증이 발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증발급 업무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고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사례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주채무자 변경으로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담보인정비율 하향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소급 적용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 출자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할 것

○ 직원이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휴직심사위원회 심사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임대상가조성 융자사업에서 융자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고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악성 임대인, 상습채무 불이행자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을 마련할 것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시 채권 추심이 곤란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든든전세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무단점유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채권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특단의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경매 이후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조치가 빠르게 실시되도록 준비할 것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미실행률이 급증하여 계약금을 잃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선심사 후계약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정가 산정 등 CR리츠 제도를 지원할 것

○ 브릿지 단계 위기 사업장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할 것

○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버팀목·디딤돌 대출에 대한 구입자금 보증

제한, 후취담보 제한 등 기금 대출 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으로 지정한 후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각채권 회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악성임대인이 보증사고 물건에 단기 임대차로 수익을 편취하는 문제에 대해 강제관리 등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문제는 서류 검증절차 부재가 원인이므로 임차인에게 보증 안내 시 본인인증을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보증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든든전세 주택을 최저 입찰가 대비 높게 낙찰받고 있으므로 낙찰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무자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 물건을 든든전세 매입 물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기 신도시의 안정적인 재건축을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대출금에 대한 보증료를 낮추거나 보증 한도를 늘리는 등 완화된 정책을 검토할 것

○ 보증업무, 자금운용 관련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제도개선책을 담은 혁신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지원 직원에 대한 장기출장 및 출장비 지급이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것

○ 전세사기로 인해 인력 및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몽골 해외자원봉사는 부적절하므로 사회공헌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상가 공실률에 취약하므로 임대상가조성

융자사업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든든전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경매 중 무단점유자 파악, 인력 충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법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대위변제 물건의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차세대 시스템 지연이 보증 및 채권회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서버 증설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료율 인상에 앞서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발생 지역에 대해 든든전세 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경매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료율 개편과 더불어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보증요건 강화 등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PF보증 목표 및 발급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으로 체계적이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위장미혼 등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점검하고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주택 금융지원 등을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사회주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책수요를 확인할 것

○ 사회주택 PF보증 활성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수립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에 사회적경제 단체에 보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거주자 만족도, 사업의 장단점, 향후 정책 방안 등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 사회적경제 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할 것

○ 신속한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과의 상시협력체계 강화, 임대인 일반재산

조사, 경매 유찰 시 공매 전환, 다주택자 추가심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 상향조정은 서민 부담이 가중되므로 다른 기금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

○ 든든전세 주택의 무단점유자 문제로 인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목표량 재설정을 검토할 것

○ 보증사고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허위이력 등 결격 사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사전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을 통한 택시 영업수익에 누락이 있는 등 정확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바, 정확도 제고를 위해 운전자 인증 의무화 등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인 승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저상버스 리프트 관리 관련, 리프트 정상작동 여부 전수조사·수시점검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제조기밀의 사유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바 있는데, BMS 자료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 전기차 검사를 위한 배터리 진단기(KADIS) 민간검사소 보급을 확대할 것

○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공개·BMS 표준화 등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철저한 배터리 이력관리·상시 모니터링 및 소방당국 통보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차 화재시 차량 뒷좌석 문 수동개폐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국내 기준과 다르게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미국 차량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 사업인 마이배터리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바, 국내 판매중인 모든 제조사들과의 협업방안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차 안전도평가 시 BMS 등 배점 확대 및 하부 배터리 보호부분 충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것

○ 배터리 이력관리, 정기검사 등을 통해 배터리 관련 리콜 시정율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동킥보드 등 PM 화재 관련, 배터리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등록제 또는 번호판 부착 등을 검토할 것

○ 한국형 레몬법 관련하여 소비자 입증이 어려운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버스기사가 정원 대비 약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명확화, 진입장벽 완화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버스기사 양성대책을 마련할 것

○ 고령 운수업종사자 자격유지검사장 시·도별 인프라를 확충할 것

○ 배달 이륜차 교육 의무 법제화 및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자동차 및 이륜차 관련 불법튜닝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처벌 규정 상향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R&D 본 연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것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대상 생활자금대출 관련, 현행법령 상 부모 등 대출신청자와 채무자인 유자녀가 분리되어 있어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제도를 개선할 것

○ 위험물 운송차량 운송계획 누락·차량 미검수 방지 및 노후 차량 교체 유도,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율 지역별 편차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보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원 등 보안 전문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화물차 정기검사 재검 미이행·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관리 주체로서 적극적인 관리와 조치를 취할 것

타 국가철도공단

○ 철도 신호, 통신 부분의 100% 국산화 및 고속철도 주요 부품, 설비의 노후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원발 KTX, 인천발 KTX 사업의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지연 발생 시 지자체와 협의할 것

○ GTX-A노선 동탄 반복선 분기기 레일 마모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것

○ 기관의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4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마련할 것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타당성 재조사 면제 방안 등 2026년 개통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 시설물 하자보수 이행률을 제고하는 등 코레일과 협의하여 하자조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철도공단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점검 및 개선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 역사 신설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 지속적인 안전평가등급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남부내륙철도를 조속히 착공할 것

○ 동대구에서 경남 동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전용선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KTX 포항역 주차장 신설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역사와 주차장 간 선상연결통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산 신호시스템 상용화 및 효율적 신호시스템 교체를 위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TFT구성 등 협업을 추진할 것

○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인 철도 방음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할 것

○ 철도유휴부지 무단 점용 등 국유재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철도유휴부지를 주민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수사례 개발·발굴할 것

○ 철도역사 중국산 CCTV 보안 문제 우려에 따른 CCTV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교체할 것

○ 동대구역 광장에 관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공문, 고시를 살펴볼 때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주체는 대구시이며, 준공 후 소유권도 대구시가 갖게 되므로 준공 절차와 이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 동대구역 광장 준공검사 이후 소유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견 정리 및 역광장 명칭 변경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를 준공검사 전에 마무리할 것

○ 월곶-판교선 급행 추가 정차 요구가 인천논현, 안양, 시흥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개통 이전에 급행 정차역 확정을 검토할 것

○ 월곶-판교 복선전철 서판교 정거장의 출입구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 오송역 누수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시설 관리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과잉 의전 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남부내륙철도와 투자선도지구 선정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2019년 이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자관리위원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 계획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현 온산선의 스마트 철도건널목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온산선의 대체노선 건설 계획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할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괴동선 및 군산항선 전철화 사업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차질없는 개통을 추진할 것

○ KTX-이음 열차의 남창역 정차를 검토할 것

○ 산업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

○ 서울역 선상통로 확장공사 시 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최소화하여 보행과 승하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부산 차량기지와 인접한 DRMO부지 내 차량기지 건설이 검토 중인데 관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지체되는 바 고속철도차량의 안정적 정비를 위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 광주송정역 증축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

○ K-철도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된 철도기술과 노하우로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철도시설물 검측시스템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져 일부 상용화가 되었으므로 국내입찰을 진행할 것

○ GTX-C 연장사업 국비 투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동대구역 정비사업의 조속한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고 준공고시를 이행하도록 할 것

○ GTX-B 사업 용산정거장 환기구 이동 민원과 관련하여 철도부지 매각, 환기구 이동 등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민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

○ 대전 신탄진 덕암동 철도유휴부지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복지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로의 활용을 검토할 것

○ 철피아 문제는 국가철도공단 내 학연, 지연으로 얽힌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득권 형성,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를 위해 CCTV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 평택지제 차량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중복 투입, 홍수 침수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것

○ 舊 원주역사 개발 사업 관련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간 토지교환 협의가 지연되어 진행이 더딘 상황이므로 각 기관 및 원주시 간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

○ 중요 정보화 사업에서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이를 위한 위험관리 및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와 함께 총사업비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사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기관 간 소송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의 사전 해소 방안 및 갈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위험지역 감지기를 확충할 것

○ 철도터널에서 역사 내부로 유입 또는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기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320km/h급 고속철도 차량 도입에 따른 고속선 시설개량 예산 반영을 추진할 것

○ 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의 철도건설 사업 편입 시 유휴 국유지와 교환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이행할 것

○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에서 제천을 포함하는 노선으로 적극 검토할 것

○ GTX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 재개발 사업과 철도건설사업 공존을 위해 노력할 것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JDC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JDC의 예산 현황과 수익·지출 구조, 사업 투자에 대한 안정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것

○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장기화,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 발생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JDC의 설립 취지에 맞게 경영진과 관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

○ JDC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과 사업방식 전환,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입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원가 절감 및 입주기업 조기 모집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관련 보유세제지원 정책 개선 필요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정부의 과학기술 R&D 사업 축소 기조가 변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 소속 직원의 측량정보 유출 관련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제도개편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공간정보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를 고려하여 중국산 드론 비중을 검토할 것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고도화 작업 부진, 10m 미만 저심도 공법 사업장에서의 활용 한계 및 데이터 제공 편의성 방안 미비 등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 저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LX 경영위기의 해법으로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미래성장 동력을 고려한 발전적인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

○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민원 발생 및 타인토지 출입 시 법령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

○ LX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신사업 추진 등 경영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적공부 오류 정비사업 부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계획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서지역 정위치 및 경계정비 사업’ 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

너 국토안전관리원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 단축 및 전문인력 장기채용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설물안전보고서 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감점처분 기준에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 싱크홀 방지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관리 점검인력 증원 및 장비개발 등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땅꺼짐 현상(지반침하 등) 방지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싱크홀 예방 등에 필요한 진단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토안전 실증센터' 설립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싱크홀 등 땅꺼짐 사고 예방 대책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종류별 건설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건설사고 사상자 수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민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로당 시설점검 및 관리 강화(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

더 ㈜에스알

○ 코레일과 SR 앱이 분리되어 환승할 때 열차 이용시 국민 불편이 심각하므로 앱 통합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매크로, 암표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

○ 안전평가 등급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에스알이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근거 법률 마련을 등 공적 지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추가 노선 투입 등 공적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정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및 운영할 것

○ 노쇼 위약금 증액하는 방안, 평일과 명절·주말 기간에 위약금을 구분해서 부과하는 방안, 부정승차 부가운임료 증액하거나 적발된 역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방안 등 노쇼와 부정승차 관련 다양한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부정승차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강화할 것

○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예매 시스템, 노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잉 의전 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여행사의 꼼수 판매의 미끼 상품으로 이용되는 상품석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시 인터넷 검색 정보, 타 기관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쓰는 등 보고서가 부실한 상황이 확인되는데, 적발 시 출장비 환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안전 대책과 관련해 에스알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흡한 점에 대해 분석할 것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

○ 임용된 임원의 인사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 비전문가 인사들이 더 이상 에스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 임용된 임원의 복무 관리, 업무 성과 평가 등을 엄격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임이사의 자격 조건을 철도운영자에 걸맞게 마련할 것

○ 휠체어 사용자와 보호자의 열차 동승 관련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서발 KTX-서울발 SRT 교차운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철도기관 간 소송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의 사전 해소 방안 및 갈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전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서대전역 SRT 투입을 추진할 것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검사를 받지 않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및 수월한 건설기계 검사 수검 방안을 마련할 것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 안전교육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기계 안전사고 건수 감소를 위한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방안 및 안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기관 관리 감독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

○ 국민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총괄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할 것

○ 번호판 인식기술 시스템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머 주택관리공단㈜

○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영구임대 주거복지사) 사업에서 주거 위기 세대 등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 증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할 것

○ 상위직급 직원의 부적절한 외부강의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버 코레일관광개발㈜

○ 외국인 대상 지방 열차여행 프로그램 관련하여 지방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서 코레일로지스㈜

○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부적절한 인사운용 문제가 심각하므로 조직 혁신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어 코레일네트웍스㈜

○ 기간제 연장심사에 반영되는 필기시험 관련, 교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시험이 조성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것

○ 주차관리원 감소, 통합관제센터 인원 감축 계획 등 과도한 감원은 신중하도록 하고 적정 인원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계획을 검토할 것

○ 관공서 공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당노동 의심행위 에 대해 엄중한 점검을 진행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간 임금 차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 간부교육과 현장직원 교육간 소요 비용 차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저 코레일유통㈜

○ 신입직원 퇴사율이 높은 원인을 확인할 것

○ 前 사장의 출장기록과 관용차 사용기록 대조 시 부정사용이 의심되므로 감사조치할 것

○ 전문점 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일 경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

처 **코레일테크㈜**

○ 안전보건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강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조직문화 내재화, 현장실행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커 항공안전기술원

○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경영본부장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하여 확인 및 조치를 할 것

○ 공공기관 보유 국산화 비율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드론 산업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해외수출 지원 등 성장지원을 통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

○ 드론 특별비행승인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검사 인력 증원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터 새만금개발공사

○ 해당사항 없음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추진사업 실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

○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및 해외수주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나라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효과적 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2025년 해외건설 수주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할 것

○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을 정책펀드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책펀드 외에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 미수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허 건설기술교육원

○ 타 공공교육·훈련기관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소수분야 및 특성화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법정 의무비율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공구매 목표비율 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공공구매 목표비율 달성 방안을 마련할 것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안전·보건의 조직문화 내재화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노 국립항공박물관

○ 구매자료의 전시율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행 사유 및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유지할 것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기간제 센터장 채용 시에는 2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서 상위 직위인 경영본부장은 40세의 경력에 논란이 있는 대상자가 채용된 점을 볼 때 임용 조건이 차이가 크고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

○ 영업소 운영비가 적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직원 복지를 개선할 것

○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가 필요하나 미시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

○ 특정 본부장이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용 설문조사 관련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센터 예산을 사용하는 등 갑질 문제가 심각하므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 한국도로공사 출신이 간부급 요직을 맡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징계 및 비위행위 조치로 처분받은 인원이 많고 성비위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대비 징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근태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원 중 개인차량 이용비율이 대다수이고 장거리 이동자의 비중이 높은데 통근차량 운행을 적극 검토할 것

○ 고속도로 디지털화 등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인력구조 및 재무상태 개선을 추진할 것

○ 적재불량 차량 공익신고 목표치를 관리할 것

○ 연도별 서비스의 순손실 총액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1억원 이상 손실 발생 건의 현황자료, 발생 원인의 상세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

로 부산광역시

○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해 지역 문화예술계 및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

○ 수도권일극화 해소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경남, 울산 등과 연계해 노력할 것

○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관광·교통 등 발전 플랜 구상할 것

○ 엑스포 유치 홍보 예산 자료제출 및 감사 관련해 향후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 확대할 것

○ 대통령 부산 관련 공약 이행률 검토하고 이행 여부 점검할 것

○ 타시도 정책 등을 참고해 주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노력할 것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 관련 조사위원회 추가 구성하고, 정보시스템 관리 보완할 것

○ 싱크홀 사고 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충분한 장비·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반복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배수시설 개선 등 대책 마련할 것

○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 차단을 위해 점검대상 확대, 품질점검단 보강, 점검시기 추가, 입주예정자 입회 등 품질점검단 운영 강화할 것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5년 상반기 국토부 혁신지구 공모에 철저히 대비하고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대상지로 부산시청 인근 지역 지정 검토할 것

○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고, '제2센텀선' 신설 추진할 것

○ 한국산업은행 이전 및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통과 지원할 것

○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운영 관련 문제 개선하고, 부산 시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우선 육성할 것

○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관련 상위계획 정비할 것

○ 가덕도신공항 관련 어업 등 피해 현황 파악하고, 이주단지 조성 등 추가적인 이주 대안 마련할 것

○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해 운영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고 기대효과 검토할 것

○ 구덕운동장 등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향후 추진방향 발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추진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책 및 피해건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하고,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개최할 것

○ 부산시 발주 공사 현장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사례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할 것

○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시 강서구, 대한토목학회, 부산교통공사의 의견 수렴하여 명지지구 지하화 가능한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부산도시공사 시행 행복주택 및 공공주택 부실시공 관련해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통합광역교통청(가칭) 신설하고, 동남권 교통순환체계 개선 및 광역환승 체계 마련 등을 통해 850만 동남권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경남, 울산과 협력하여 노력할 것

○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위해 연내 계약 체결 진행하고 활주로 방향 및 폭 검토할 것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자료 관리하고, 공법보완 등 대책 마련할 것

○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위한 조속한 보상 절차·방안 마련하고, 국토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 분석할 것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구·군과 조사 기법 등을 일치시켜 기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구·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사방안 및 종합적 대책 마련할 것

○ 55보급창 주변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실시하고,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공사 재개 전 오염 제거할 것

○ 가덕도신공항 개항 일정 및 재원 대책 관련 면밀히 검토할 것

○ 부산시 홈페이지 청렴도 자가진단평가 운영 방식 개선하고, 부산시 '특정 페인트 사용 강제 의혹' 감사할 것

○ 광안대교 무료화 이후 운영 계획 마련하고, 시설공단 광안대교 스마트 안전진단 용역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백양터널 민자사업 추진 및 통행료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소멸위기 극복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할 것

○ 주요 SOC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부산시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 추진할 것

○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김해공항 활성화 계획도 함께 검토할 것

○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추가 유예를 위한 시 차원의 건의할 것

모 전북특별자치도

○ 후분양제 지속 추진하고, 적정임금제 도입할 것
○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하고, 연구용역 실시할 것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할 것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1단계 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전 마련하고 추진체계 개편할 것
○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관련해 산업용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 적극 제시할 것
○ 빈집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할 것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할 것
○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대책 추진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적극 참여할 것
○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로 인한 정부측 지연 보상 촉구하고, 정부는 전향적으로 입장 검토할 것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처리에 관한 엄격한 규제 및 관리 기준 마련할 것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통과 및 정부·국회 설득 위해 노력할 것
○ 금융중심지 육성 및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계획 축소·지연에 대한 대안 마련할 것
○ 빈집 처리 및 활용대책 마련할 것
○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지역 설치할 것

○ 새만금 군산형 일자리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노력할 것

○ 이차전지특화단지의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차이 관련 대안 마련할 것

○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 비전 수립할 것

○ 새만금 사업 관련 소유권 문제 해결하고 사업 추진주체 단순화할 것

○ 새만금 남북 3축도로 적기 건설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위해 노력할 것

○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노을대교) 신속하게 추진할 것

○ 새만금 국제공항의 성공적 완공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새만금신공항 활주로 연장 및 수요확보 방안 마련할 것

○ 전주~대구(동서3축) 고속도로 조속히 사업 추진하고, 전북~김천 횡단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전주~무주 고속도로 구간 기형적 구조 개선할 것

○ 저출생 관련 조직체제 정비하고 지역 특화 정책 검토할 것

○ 새만금 수변도시 내 공공시설 건립 예산 반영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새만금공항 적시 개항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 반영할 것

○ 새만금지역 기업 입주 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SOC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 새만금산업단지 인근 복합방재센터 설치하고, 의료시설 확대 방안 마련할 것

5. 증인 및 참고인

가 기관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기관장 등 (인)	비 고
국토교통부	박상우	4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형렬	5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5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11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12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13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8	공석 2
한국공항공사	(공 석)	8	공석 1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8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7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6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영철	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 석)	5	공석 1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7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8	
㈜에스알	이종국	6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 석)	4	공석 1
주택관리공단	(공 석)	4	공석 1
코레일관광개발㈜	(공 석)	3	공석 1
코레일로지스㈜	(공 석)	2	공석 1
코레일네트웍스㈜	전찬호	4	
코레일유통㈜	(공 석)	3	공석 2
코레일테크㈜	조대식	4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6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6	
건설기술교육원	권대철	5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남일석	6	
국립항공박물관	안태현	3	공석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오병삼	3	공석 1
부산광역시	박형준	43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28	공석 1

(2) 기관별 기관증인 현황

1. 국토교통부 (4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장관	장관(정무직)	박 상 우
2	제1차관	차관(정무직)	진 현 환
3	제2차관	차관(정무직)	백 원 국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정무직)	강 희 업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 성 요
6	국토도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주
7	주택토지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규 철
8	교통물류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엄 정 희
9	항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주 종 완
10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 형 필
1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수 상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정 희
13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지 홍
14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 석 환
15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상 문
16	도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우 제
17	철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진 환
18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석 기
19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연 진
20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경 진
21	국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 세 창
22	도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우 진
23	건축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장 우 철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24	국토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건 수
25	주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헌 정
26	주거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기 봉
27	토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 영 우
28	기술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태 병
29	종합교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정 수
30	물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근 오
31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영 국
32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경 수
33	공항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일
34	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의 경
35	공공주택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배 성
36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정 희
37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병 석
38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광 호
3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정 희
4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채 교
4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용 욱
4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동 민
4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방 윤 석
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 경 호
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홍 목
46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 혁 진
47	부산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진 철
48	국토지리정보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우 석
49	항공교통본부장 직무대행	서기관	김 성 수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김 형 렬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 주 엽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상 옥
4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홍 락
5	시설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 형 욱

3. 새만금개발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김 경 안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홍 남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인 권
4	개발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준 형
5	개발사업국장(직무대리)	부이사관	김 민 수

4. 한국토지주택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 한 준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이 범 래
3	부사장	상임이사	이 상 욱
4	주거복지본부장	상임이사	고 병 욱
5	국토도시본부장	상임이사	박 동 선
6	공공주택본부장	상임이사	오 주 헌
7	지역균형본부장	1급	김 재 경
8	스마트건설본부장	1급	정 운 섭
9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조 경 숙
10	토지주택연구원장	1급	정 창 무
11	기획조정실장	1급	송 영 환

5. 한국도로공사 (12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함 진 규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이 승 호
3	경영부사장(기획본부장 겸)	상임이사	손 진 식
4	기술부사장(도로본부장 겸)	상임이사	박 종 건
5	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 상 재
6	교통본부장	상임이사	설 승 환
7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박 건 태
8	영업본부장	1급	옥 병 석
9	디지털본부장	1급	류 종 득
10	신사업본부장	1급	정 연 권
11	도로교통연구원장	1급	조 남 민
12	기획처장	1급	박 정 석

6. 한국철도공사 (1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상임이사	한 문 희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권 세 호
3	부사장	상임이사	정 정 래
4	안전기술총괄본부장	상임이사	홍 승 표
5	기획조정본부장	상임이사	이 민 철
6	여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정 구 용
7	안전본부장	기술1급	장 봉 춘
8	광역철도본부장	사무1급	이 선 관
9	물류사업본부장	사무1급	김 양 숙
10	신성장사업본부장	사무1급	김 기 태
11	차량본부장	기술1급	이 기 철
12	시설본부장	기술1급	김 군 수
13	전기본부장(代)	기술1급	유 서 혁

7. 인천국제공항공사 (8인, 공석 2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 학 재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공 석)
3	부사장 (직무대리: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4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김 범 호
5	인프라본부장	상임이사	주 견
6	미래사업본부장	1급	김 창 규
7	안전보안본부장	1급	배 영 민
8	건설사업단장	1급	이 동 현
9	운영본부장(직무대행)	2급	김 홍 수
10	기획조정실장	1급	신 가 균

8. 한국공항공사 (8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민 병 삼
3	부사장	상임이사	이 정 기
4	안전보안본부장	1급	박 광 호
5	전략기획본부장	1급	박 재 희
6	운영본부장	1급	김 두 환
7	건설기술본부장	1급	정 근 중
8	글로컬사업본부장	1급	허 주 희
9	기획조정실장	1급	서 종 옥

9. 한국부동산원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손 태 락
2	감사	상임감사	권 순 일
3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유 은 철
4	공시통계본부장	상임이사	김 세 형
5	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 재 명
6	산업지원본부장	상임이사	김 남 성
7	부동산연구원장	1급	김 근 용
8	기획조정실장	1급	이 정 환

10. 주택도시보증공사 (7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대표이사	유 병 태
2	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홍 지 만
3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이 창 희
4	금융사업본부장	관리1급	이 철 완
5	자산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윤 명 규
6	기금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최 종 원
7	기획조정실장	관리2급	김 용 한

11. 한국교통안전공단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정 용 식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 보 현
3	교통안전본부장	상임이사	장 찬 옥
4	자동차검사본부장	상임이사	오 태 석
5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상임이사	엄 성 복
6	기획조정실장	관리1급	김 상 국

12. 국가철도공단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이 성 해
2	감사	상임감사	유 병 호
3	부이사장	상임이사	임 종 일
4	기획본부장	이사대우	김 공 수
5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손 병 두
6	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최 원 일
7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이 현 철
8	SE본부장	상임이사	김 윤 양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양 영 철
2	감사	상임감사	권 택 용
3	부이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 현 민
4	미래투자본부장(직무대리)	1급	김 두 한
5	산업육성본부장	상임이사	구 병 욱
6	기획조정실장	1급	김 경 훈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상임이사	(공 석)
2	부원장	연구위원	권 진 섭
3	국토본부장	연구위원	유 영 화
4	모빌리티본부장	수석연구원	정 시 교
5	산업진흥본부장	수석연구원	김 성 종
6	기획조정실장	선임연구원	김 종 욱

15. 한국국토정보공사 (7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어 명 소
2	감사	상임감사	이 태 용
3	부사장 겸 기획혁신본부장	상임이사	이 주 화
4	지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윤 한 필
5	공간정보본부장	상임이사	심 병 섭
6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방 성 배
7	기획조정실장	2급	박 한 진

16. 국토안전관리원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 일 환
2	재난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김 태 형
3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이 종 우
4	건축시설본부장	상임이사	김 춘 수
5	건설안전본부장	1급	김 동 희
6	기반시설본부장	1급	권 혁 기
7	안전성능연구소장	1급	오 영 석
8	기획조정실장	1급	권 철 환

17. 주식회사 에스알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종 국
2	감사	상임감사	박 진 이
3	부사장	상임이사	심 영 주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황 현 주
5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정 연 성
6	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강 병 진

18.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4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 장 (직무대리: 경영혁신이사)	상임이사	(공 석)
2	경영혁신이사	상임이사	백 성 기
3	안전사업이사	상임이사	류 제 택
4	검사정책처장	2급	한 경 구
5	기획혁신처장(직무대리)	4급	정 지 연

19. 주택관리공단㈜ (4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직무대리: 기획이사)	임원	(공 석)
2	감 사	임원	유 동 학
3	기획이사	임원	허 종 길
4	주거복지이사	임원	이 채 우
5	기획전략실장	1급	김 기 호

20. 코레일관광개발㈜ (3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직무대리: 승무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2	승무본부장	상임이사	김 시 섭
3	관광레저본부장	상임이사	이 동 규
4	경영관리실장	1급	이 민 석

21. 코레일로지스㈜ (2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직무대리: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 준 우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김 범 열

22. 코레일네트웍스㈜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전 찬 호
2	신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김 선 우
3	역무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임 종 업
4	전략기획실장	1급	전 우 영

23. 코레일유통㈜ (3인, 공석 2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직무대리: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 택 상
3	유통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4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임 일 남
5	전략기획본부장	1급	김 형 래

24. 코레일테크㈜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조 대 식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신 주 환
3	기술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양 덕 희
4	환경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정 태 균

25. 항공안전기술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 장	상임이사	이 대 성
2	기획경영본부장	1급	하 재 범
3	항공안전본부장	2급	채 성 희
4	항공인증본부장	2급	최 용 훈
5	미래항공본부장	1급	강 창 봉
6	기획전략실장	2급	임 재 현

26. 새만금개발공사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상임이사	나 경 균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 주 호
3	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선 기 운
4	사업지원본부장	1등급	백 재 현
5	지속성장본부장	1등급	유 경 식
6	기획조정실장	2등급	김 경 일

2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 강 훈
2	감사	상임감사	허 태 수
3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이 상 욱
4	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원 병 철
5	투자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정 기 철
6	기획조정실장	1급	임 흥 섭

28. 건설기술교육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권 대 철
2	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김 우 현
3	교육혁신본부장	본부장	심 민 섭
4	능력개발본부장	본부장	최 상 호
5	경영기획실장	2급	김 용 식

29. 공간정보품질관리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남 일 석
2	부원장	상임이사	이 미 숙
3	기획전략본부장	2급	이 기 원
4	공공측량심사본부장	1급	신 상 호
5	기본측량검증본부장	2급	정 의 훈
6	경영전략실장	3급	이 성 민

30. 국립항공박물관 (3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관 장	관 장	안 태 현
2	전략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최 수 관
3	학예연구본부장	상임이사	남 성 운
4	기획조정실장	책임급	(공 석)

3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3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오 병 삼
2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3	본부장	상임이사	오 재 웅
4	경영기획실장	2급	임 종 현

32. 부산광역시(43인)

- 신문요지 :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부산광역시장	지방정무직	박형준
2	행정부시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준승
3	미래혁신부시장	지방관리관	김광회
4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김조일
5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김철준
6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경태
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관리관(일반임기제)	김기영
8	디지털경제실장	지방이사관	신창호
9	도시혁신균형실장	지방이사관	임경모
10	환경물정책실장	지방이사관	이병석
1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정무직	김성식
12	시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이수일
13	대변인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박광명
14	금융창업정책관	지방부이사관	남동우
15	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경덕
16	시민안전실장	지방부이사관	김경덕
17	첨단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박동석
18	청년산학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귀옥
19	문화체육국장	지방부이사관	심재민
20	관광마이스국장	지방부이사관	박근록
21	사회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배병철
22	시민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소라
23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	우미옥
24	행정자치국장	지방부이사관	김봉철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25	미래디자인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유진
26	도시공간계획국장	지방부이사관	임원섭
27	주택건축국장	지방부이사관	하성태
28	교통혁신국장	지방부이사관	강희성
29	신공항추진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조영태
30	푸른도시국장	지방부이사관	안철수
31	해양농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심성태
32	감사위원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윤희연
33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은희
34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이용주
35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지도관	유미복
36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병기
37	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이현우
38	낙동강관리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임재선
39	부산교통공사 사장	사장	이병진
40	부산도시공사 사장	사장	김용학
41	부산관광공사 사장	사장	이정실
42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사장	이성림
43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사장	안종일

33. 전북특별자치도 (28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도지사	지방정무직	김관영
2	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최병관
3	경제부지사	지방별정직1급상당	김종훈
4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천영평
5	기업유치지원실장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공 석)
6	도민안전실장	지방이사관	윤동욱
7	정무수석	지방전문임기제 가급/2급상당	유창희
8	정책협력관	지방전문임기제 가급/3급상당	이서빈
9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종훈
10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종필
11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정석
12	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부이사관	황철호
13	환경산림국장	지방부이사관	강해원
14	건설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광수
15	소방본부장	소방감	이오숙
16	미래첨단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오택림
17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최재용
18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방부이사관	박현규
19	대외국제소통국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나해수
20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김미정
21	농업기술원장	연구직고위공무원	최준열
22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노형수
23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일반임기제)	전경식
24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이연주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정무직	신일섭
26	감사위원장	지방정무직	양충모
27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김진철
28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김양원
29	전북개발공사 사장	사장	최정호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10. 7. (월)	국토 교통부 등 (세종)	김태영	증인	21그램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불출석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황윤보	증인	원담종합건설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불출석	국외출장
		황윤식	증인	에스오이 디자인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출석	
		박우영	증인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출석	
		서병석	증인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출석	
		김오진	증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출석	
		강성묵	증인	경동 엔지니어링 회장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관련	출석	
		김수현	증인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관련	출석	
		안철영	증인	양평군청 도시건설 국장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관련	출석	
		설영만	증인	㈜대한 대표이사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출석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이상화	증인	㈜동해종합 기술공사 부사장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출석	
		박중규	증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출석	
		이일준	증인	디와이디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불출석	건강상의 이유
		신익태	증인	올댓캠퍼스 대표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	출석	
		윤은혜	증인	코뮨아이 대표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	출석	
		마티 아스 바이틀	증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출석	
		여장권	증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관련	출석	
		홍용준	증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대표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사고 관련 질의	출석	
		전중선	증인	포스코이앤씨 사장	시행-시공사간 갑질 관련	출석	
		강민욱	참고인	전국택배 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출석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박석운	참고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출석	
		이헌석	참고인	R&R 물류 대표이사	포스코이앤씨 - 알앤알물류 평택센터 사업관련	출석	
10.11. (금)	한국 철도 공사 등 (대전)	김태극	증인	티머니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정책	출석	
10.16. (수)	한국 부동 산원 등 (국회)	김성은	증인	부동산 R114 대표	입주예정물량 조사 관련	출석	
		정명교	참고인	HUG 보증취소 피해자모임	HUG 보증취소의 문제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 등	출석	
10.21. (월)	한국 도로 공사 등 (국회)	이대근	참고인	라이더유니온 대표	'라이더 안전 교육'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출석	
10.24. (목)	국토 교통부 등 (국회)	김태영	증인	21그램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불출석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황윤보	증인	원담종합건설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출석	
		이일준	증인	디와이디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불출석	건강상의 이유
		이재선	증인	(유)원탑종합 건설 대표	대통령관저 정자 위법 증축 관련	불출석	건강상의 이유
		전해갑	증인	아원고택 대표	대통령관저 정자 위법 증축 관련	불출석	건강상의 이유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윤진오	증인	동부건설 대표	검단AA21블록 철근누락 공사중단 관련 진행상황	출석	
		김 영	증인	중앙도시 계획위원장	의왕백운밸리 공공기여 중도위 심의 관련	출석	
		김병우	증인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	배달의민족 수익구조 및 불공정 문제	출석	
		김광일	증인	MBK 파트너스 부회장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관련 지역사회 우려	출석	
		신만호	증인	보광 종합건설㈜ 대표	민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가격 말바꾸기	출석	
		이장우	참고인	인천 미단시티 입주예정자	인천중구 미단시티 관련	출석	
		홍창의	참고인	배달플랫폼 노조위원장	플랫폼활용 이륜차 배달종사자 실태 증언	출석	
		권지웅	참고인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장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확인	출석	
		최은영	참고인	한국도시 연구소장	임대차법 폐지 관련	불출석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 7. (월)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	-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고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사회적 합의기준에 미달하는 쿠팡 택배업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질의 -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에 대한 문제지적 및 클렌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쿠팡이 영업점과 계약할 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클렌징 제도를 제외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분류작업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 쿠팡의 입장 어떤지에 대한 질의 -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소분류 작업이 과로사 문제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산업재해를 0건으로 보고한 이유에 대한 질의 - 야간배송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클렌징 제도를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 택배 분류와 관련해서 다른 택배회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같이 검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쿠팡의 새벽배송 정책의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강민욱 전국택배 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 다른 택배회사와 비교하여 쿠팡의 근무여건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를 수행했던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 - 21그램이 공사를 하면서 열다것 곳에 불법 하도급을 하는 등 부실한 능력을 보였는데, 공사를 맡기는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특혜 사업이라는 지적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 위법 사항이 발생한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와 관련된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있어 많은 위법 사안이 있었던 것을 자인하는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추진 기획자 확인 관련 질의 -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임시개방 및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기획자 확인 관련 질의 - 21그램 추천을 김건희 여사가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 맞는지 질의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	- 평택물류센터 공사 관련, 7차례 공기 연장으로 인해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된 것을 포스코이앤씨가 대위변제 후 시행사(R&R 물류)의 주식을 전부 가져간 것에 대한 문제 지적 - 지금까지 포스코가 상기의 방식으로 시행사의 주식을 양도해서 가져간 사례가 몇 건인지에 대한 질의 - 시공사와 시행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포스코이앤씨의 경영방식 개선 필요성 지적 - R&R물류 주식 평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등 포스코이앤씨의 평가액 산정에 대한 문제 지적 - 공사관계 다음의 거래관계에 관한 정산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 - 공기가 늦어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질의 및 시공사-시행사간에 발생한 현재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적 필요 - 포스코가 대위변제한 건들 중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상기의 문제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시공사 현장 직원이 감리회사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진상조사 및 포스코이앤씨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이헌석 R&R 물류 대표이사	- 물류센터의 평가금액, 공사비 등에 대한 질의 - 물류센터 공사 관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의
	신익태 올댓캠퍼스 대표	-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대행 관련 추천·소개 등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 - 용산어린이정원 관리운영방안 수립용역 및 관리운영 대행용역 수행 관련 추천·소개 등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 - 용산어린이정원 용역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 및 김오진 증인의 참여 여부에 대한 질의
	김수현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	- 양평고속도로 프로젝트 관련 타당성조사 PPT 제작 책임자가 맞는지 질의 - 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장 조사 이후 종점 변경을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착수보고 PT 내용이 종점 변경을 전제로 한 과업지시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최종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질의 -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과업지시가 있었다고 대답했었는데 맞는지 확인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서를 참고했는지 질의 - 2030 양평군 기본계획서 내에 노선의 종점이 어디로 그려져 있는지 질의
	강성묵 경동 엔지니어링 회장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선교 전 양평군수, 이한준 LH 사장을 알고 있는지 질의 - 이한준 LH 사장이 관련 내용을 전달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는지 질의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제안하고 주도한 경동엔지니어링이 2023년 이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관급공사를 따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 국장	-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를 본 적 있는지 질의(한준호 위원) -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에, 강상면 쪽으로 종점을 그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국가에서 진행하던 예비타당성조사와 상관없이 강상면 쪽으로 종점을 변경한 것은 양평군인데, 양평군과 국가가 별도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닌지 질의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 대통령 관저 보수 관련 설계·감리를 맡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설계를 진행할 때 누구와 같이 작업했는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관련 도면을 누구와 같이 그렸는지 질의
	황윤식 에스오이 디자인 대표	-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21그램 대표의 연락을 받고 참여했는지 질의 -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본 사람이 누군지와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 -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현장에 누가 나와 있었는지 질의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 부장	- 2024년 8월 9일에 발표한 서울시 전기차 화재 대책이 누구의 의견인지 질의 -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질의 -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과충전이 문제인 것처럼 발표한 서울시의 전기차 대책에 대한 지적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	-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발생사고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 - 전기차 화재 원인이 벤츠의 제조 결함으로 확인되면, 현재 지원 예정 금액인 45억원 이상의 배상을 할 예정인지 질의 - 벤츠 전기차의 평판 저하만으로도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의 - 스타진스키 전기차 개발 총괄이 벤츠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이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CATL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개 모델에만 장착되고 나머지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의 -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국 차량의 배터리가 CATL 배터리인지 파라시스 배터리인지 질의 - 2023년 한국에서 2,8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벤츠가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10.11. (금)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사장	- 코레일이 수도권 통합환승 정산사를 이원화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티머니가 교통거래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코레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 통합환승할인 정보 미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티머니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 질의 -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과 티머니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10.16. (수)	정명교 HUG 보증취소 피해자모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소송이 진행 중인 분들이 몇 명인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질의 - 전세를 계약하면서 보증이나 보증보험에 대한 법적 개념을 알고 있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질의 - 피해자 대부분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HUG의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이 계약을 맺을 때 영향을 줬는지 질의 -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자와 해결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질의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 - 보증취소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질의 - 보증계약이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김성은 부동산 R114 대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관련, 한국부동산원은 서울특별시의 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발표를 미룬 반면, 부동산 R114는 예정되로 8월에 발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관련, 부동산 R114와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수치의 차이, 수치 산정 방식의 차이 등에 대해 질의
10.21. (월)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대표	- 배달업 종사자의 입직 초기에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과 별개로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지 질의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달 안전교육을 시작했는데 참가한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질의 - 배달업에서 유상보험 의무화 관련 라이더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질의 -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은 라이더 등록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지 여부, 다른 플랫폼의 경우 월 84만원 이상의 배달 업무를 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그 전에 사고가 나면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는 결국 피해 보전 시 상당한 애로를 겪거나 피해를 본인이 감당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10.24. (목)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관련 적대적 M&A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 - MBK파트너스는 9월 13일부터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MBK파트너스, 영풍과 고려아연 등이 몇 프로정도 주식을 확보했는지 질의 - 공개매수를 시작하기 전에도 영풍이 대주주였는데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경영권 확보 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와 경영진을 모두 교체할 계획인지 질의 - 경영권을 인수하면 고려아연도 구조조정 할 계획인지, 기존 고려아연의 투자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질의 (서범수 위원) - 경영권 확보 시 해외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한 의견이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무엇인지 질의 - 고려아연과 영풍간 황산취급 대행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질의
	신만호 보광종합건설㈜ 대표	- 보광종합건설에서 수행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어떤 분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민간 임대기간 종료 후에 최초 분양할 때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 -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 미이행 문제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지적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	- 지난 7월부터 배달의민족이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확인 절차를 폐지했는지 질의 - 현재 배달시장에 미인증 업체가 난립하고 종사자 관련 자격증도 없으므로, 적절한 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배달시장의 적절한 관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홍창의 배달플랫폼 노조위원장	- 배달의민족이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확인 절차를 폐지한 것과 관련하여 유상운송보험이 의무가 아니고 업체들의 확인 절차가 생략됐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 - 배달시장의 적절한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질의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	- 검단신도시 AA21 블록이 철근 누락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데, 시공 과정에서 설계를 확인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질의) - 철근 누락을 확인하고 보강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LH와 협의된 것인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 질의 - 은행에 대한 신인도 외에 국민을 대하는 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 -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해진 공사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 입주예정자들이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책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처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관련, 21그램 대표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통화·SNS·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질의 - 코바나 직원이었던 행정관들을 아는지, 이들과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 - 21그램으로부터 공사에 참여해달라고 처음 연락받은 날이 언제인지 질의 - 증인과 증인의 형의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지에 대한 질의 - 계약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계약을 안하고 공사를 한 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 21그램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의
	권지웅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장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후 발생하는 피해자 사각지대 사례를 접수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
	김 영 중앙도시 계획위원장	- 의왕 백운밸리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산정 관련 추가 이익금 누락 경위 확인 여부에 대한 질의 - '24.5월 의왕시 공무원들의 공공기여 안건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및 위원 사전 접촉 여부 및 공공기여 관련 위원들의 내부반응에 대한 질의
	이장우 인천 미단시티 입주예정자	-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입주 지연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입주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국정감사 종료 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 중구청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모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참 고 자 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가 소관기관

대상기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	○	○	○	○	○	○	○	○	○	○	○	○
새만금개발청													○	○	○	○	○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도로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철도공사 (구 철도청)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교통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에스알																		○	○	○	○	○	○	○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대한주택보증)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	○	○	×	○	○	○	○	○	○	○	○	○	○	○	○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	◇							○	×	×	○	○	○	○	○	○	○	○	○	○	○	○	○	○
주택관리공단(주)														○	○	○	○	○	○	○	○	○	○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	○	○	○	○	○	-	-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	○	○	○	○	○
(주)워터웨이플러스														○	○	○	○	-	-	-	-	-	-	-
코레일관광개발(주)														○	○	○	○	○	○	○	○	○	○	○
코레일로지스(주)														○	○	○	○	○	○	○	○	○	○	○
코레일네트웍스(주)														○	○	○	○	○	○	○	○	○	○	○
코레일유통(주)														○	○	○	○	○	○	○	○	○	○	○
코레일테크(주)														○	○	○	○	○	○	○	○	○	○	○
항공안전기술원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	○	○	○	○	○	○	○	○	○	○
새만금개발공사																			○	○	○	○	○	○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
건설기술교육원																					○	○	○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	○	○
국립항공박물관																					○	○	○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0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

나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방국토관리청	서 울	×	×	○	×	○	○	○	×	×	○	×	×	※	×	○	○	○	○	○	○	○	○	○	○
	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전	×	×	○	×	○	○	○	×	×	○	×	×	※	×	○	○	○	○	○	○	○	○	○	○
	익 산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산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ㅊ	×	×	×	×	×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미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배석